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A Strategic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Sector
: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s

전혜은 · 한덕훈 · 김양희 · 임해주 · 김주형 · 이민정 · 허재영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A Strategic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Sector
: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s

전혜은 · 한덕훈 · 김양희 · 임해주 · 김주형 · 이민정 · 허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전혜은, 한덕훈, 김양희, 임해주, 김주형, 이민정, 허재영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전혜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양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임해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이민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허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전문연구원

연구기간	2024. 8. 19. ~ 2025. 4. 30.
------	-----------------------------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전혜은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1, 2, 4절, 제3장 제1, 4, 5절,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내부연구진	한덕훈 제4장 제3절, 제6장 김양희 제4장 제2, 3절, 제5장, 제6장 임해주 제2장 제2절, 제4장 제3절, 제5장, 제6장 김주형 제3장 제3, 4절 이민정 제2장 제1, 3절, 제3장 제2절 허재영 제2장 제1, 2절

발간사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가속화, 환경오염의 심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도전 과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의 빈도 증가, 수산자원 고갈, 해양 생태계의 붕괴 등은 연안국의 식량안보와 생계 기반을 위협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 필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국제개발 협력은 국가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구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은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과 글로벌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협력국의 수요 고도화와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는 향후 수립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연계하여, 해양수산 ODA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재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의 성과와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협력국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고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기준, 주요국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동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도출하였다. 특히, 해양수산 ODA 성과 및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중장기 전략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 기획과 현장 적용이 모두 가능한 전략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정량적·정성적 분석, 비교 사례연구, 현장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도출한 전략과 제언은 학술적 타당성과 함께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실질적인 정책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아가, 단순한 연구성과를 넘어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양수산 ODA의 방향성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화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해 헌신해 준 전혜은 전문연구원을 비롯하여, 한덕훈 연구위원, 김양희 연구원, 임해주 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이민정 연구원, 허재영 전문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준 모든 관계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준 국무조정실 맹준호 과장, 고려대학교 김성규 교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권을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석재 박사, 해양수산부 이민영 사무관 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요청에 따라 일일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해양 수산 ODA의 기획, 발굴, 수행, 관리,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공유해 준 국내외 관계자들의 고견은 본 연구가 실제 정책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연구의 기획부터 심의와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과 임직원 모두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이 있었기에 본 연구는 실효적이고 실천 가능한 결과물로 완성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 정 희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 iii

Executive Summary _vii

01

서론 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7

0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_19

제1절 국제사회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19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19
2.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및 규범	20
3. 주요국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29
제2절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39
1. 대외전략 및 국정과제	39
2. 국제개발협력 정책	44
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49

제3절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60
1. 해양수산 ODA 일반 현황	60
2. 해양수산 ODA 최근 4개년 지원 현황	63
3. 해양수산부 ODA 최근 5개년 지원 현황	67
4. K-OEI 기반 해양수산부 ODA 사업 추진 현황	68
제4절 소결	73

0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수요 분석_75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조건과 유형	75
1. 국제개발협력의 대상과 조건	75
2. 국제개발협력의 유형	76
제2절 다자협력 수요 분석	77
1. 수산 분야	77
2. 해운 및 항만 분야	79
3. 해양 환경 및 연안 생태계 분야	82
4. 기타	83
제3절 양자협력 수요 분석	85
1. 아시아	85
2. 아프리카	90
3. 오세아니아(태평양 도서국)	93
4. 중남미 및 카리브해	99
제4절 국내 이해관계자 수요 분석	101
1. 정부 및 산하기관	101
2. 산업계	108
3. 학계 및 시민사회	111
제5절 소결	115

04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사업 설계 전략 _117

제1절 기존 사업 발굴 체계의 한계	117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방향	117
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현황	118
3. 도전과제	122
제2절 사업유형별 사례 분석	123
1. 패키지 사업	123
2. 연계·융합 사업	126
3. 부처 전략 사업	127
제3절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델(안)	133
1.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 구성 전략	133
2. 해양수산 패키지 사업 모델(안)	137
제4절 소결	176

0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_179

제1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분석	179
1.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특수성	179
2. 기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 관리 체계	181
3. 타 기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지표 분석	184
제2절 성과지표 개선(안)	191
1.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사업	191
2.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199
3.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202
4.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204
5.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208
제3절 성과 관리 체계화 및 실행 기반 정비 방안	211
1.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 측정법 마련	211

2. 성과기반관리 체계 정착 위한 지침 제도와 및 체계적 교육	213
3. 해외협력센터 및 시민사회 연계 현장중심관리 활성화	214
제4절 소결	216

06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과제 _219

제1절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반영 전략(안)	219
제2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선(안)	223
1. 발굴 및 기획 정책 과제	223
2. 수행 관리 및 평가 정책 과제	227
3. 홍보·교육·환류 정책 과제	232
제3절 소결	236

07 결론 _23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39
제2절 정책 제언	241

참고문헌 _243

표 목차

〈표 1-1〉 본 연구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분석틀 비교	8
〈표 1-2〉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	8
〈표 1-3〉 본 연구의 주요 국내 선행연구	12
〈표 1-4〉 본 연구의 주요 해외 선행연구	15
〈표 2-1〉 OECD DAC 규범	22
〈표 2-2〉 해양 경제 양자 ODA 주요 공여국 순위(2022년 기준)	30
〈표 2-3〉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41
〈표 2-4〉 K-OEI 4대 추진전략과 세부 내용	52
〈표 2-5〉 주요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책 추진과제	59
〈표 2-6〉 해양수산 ODA 사업 수원국 통계(2019~2022)	65
〈표 2-7〉 해양수산부 ODA 사업 5개년 변화 추이(2019~2023)	67
〈표 2-8〉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연도별 K-OEI 추진전략 분석(2019~2023)	69
〈표 2-9〉 해양수산부 ODA 사업 수원국 통계(2019~2023)	71
〈표 2-10〉 해양수산부 ODA 사업 분야별 변화 추이(2019~2023)	72
〈표 3-1〉 ODA 인정 조건	76
〈표 3-2〉 ODA 지원 형태	76
〈표 3-3〉 OECD ‘Sustainable Ocean for All’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84
〈표 3-4〉 아시아 국가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90
〈표 3-5〉 아프리카 국가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93
〈표 3-6〉 태평양 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98
〈표 3-7〉 중남미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년 기준)	100
〈표 3-8〉 KOICA 해양수산 관련 ODA 목록(2020~2023년)	103
〈표 3-9〉 KSP 해양수산 관련 사업 목록(2018~2023년)	107
〈표 4-1〉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ODA 관련 계획	119
〈표 4-2〉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 기능	121
〈표 4-3〉 패키지 사업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125
〈표 4-4〉 사업 간 연계 및 중복 방지 연도별 실적	126
〈표 4-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도전과제 극복 방향 및 추진과제	135
〈표 4-6〉 K-OEI 및 SDG 14의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안) 반영 방향	136
〈표 4-7〉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안)	142

〈표 4-8〉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안)	146
〈표 4-9〉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안)	151
〈표 4-10〉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안)	157
〈표 4-11〉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158
〈표 4-12〉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안)	162
〈표 4-13〉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163
〈표 4-14〉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안)	168
〈표 4-15〉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168
〈표 4-16〉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안)	173
〈표 4-17〉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174
〈표 4-18〉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	178
〈표 5-1〉 유럽 해양수산 기금 평가 톨박스 평가지표	185
〈표 5-2〉 FAO 성과(영향) 지표	187
〈표 5-3〉 FAO 성과지표	188
〈표 5-4〉 ODA 사업 PDM 적용(안) 성과지표	188
〈표 5-5〉 글로벌 산호초 보호기금 성과지표	189
〈표 5-6〉 부두 운영회사 성과평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190
〈표 5-7〉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	192
〈표 5-8〉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	193
〈표 5-9〉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194
〈표 5-10〉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195
〈표 5-11〉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	196
〈표 5-12〉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	198
〈표 5-13〉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199
〈표 5-14〉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	201
〈표 5-15〉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	202
〈표 5-16〉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204
〈표 5-17〉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205
〈표 5-18〉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207
〈표 5-19〉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	209

〈표 5-20〉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	210
〈표 6-1〉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기후변화 대응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	220
〈표 6-2〉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연안개도국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	221
〈표 6-3〉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분야별 배분 수정(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	221
〈표 6-4〉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전략 권역별 배분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	222

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 구성도	10
〈그림 2-1〉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조	40
〈그림 2-2〉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48
〈그림 2-3〉 ODA 수원국 순위(2021~2023년)	61
〈그림 2-4〉 해양수산 ODA 주요 시행 기관(정부부처)(2019~2022)	63
〈그림 2-5〉 해양수산 ODA 사업 대륙별 수원국 분포율(2019~2022)	64
〈그림 2-6〉 해양수산 ODA 연도별 사업 수 증감 현황(2019~2022)	66
〈그림 2-7〉 해양수산부 ODA 사업 대륙별 수원국 분포율(2019~2023)	68
〈그림 3-1〉 태평양 지역 IUU 어업 선박 데이터	95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구성 체계를 준용하여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현황, 국내외 수요, 이해관계자 의견, 정책 환경 등을 정량·정성 혼합 방식으로 분석
2. 국내외 정책 문서, 정부 통계, 국제기구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ODA 추진 실적, 협력 수요,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3. 협력대상국 정책 문서, 회의자료 및 논의 결과, 대상국별 국제개발협력 실적을 검토하여 권역별 협력 수요와 이슈를 유형화 및 분류하여 정리
4. 국내 수행기관, 협력국, 민간 부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현장 중심 수요 및 전략 방향 도출
5.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ODA 사업(안)과 단계별 성과지표(안)를 설계하고,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

■ 정책제안

1. 본 연구 결과 통해 도출한 해양수산 특수성이 고려된 국제개발협력

전략(안)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수립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국무조정실로 제안

2. 패키지 ODA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ODA 사업(안)의 실사업화를 위한 부처 간 협의 준비 및
공식화된 국무조정실-부처 간 패키지 사업 조정 기준과 실행 절차 정비
3.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안)의 사업 현장 도입을
위한 측정 가능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산출식 마련과 시범사업 연계
추진 필요
4. 민간,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해양수산 ODA 사업 참여기관 다각화 및 효율성·효과성 제고 도모
5.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의 발굴·기획·수행·평가·환류 등 전 주기에
걸친 성과기반관리 체계 도입 및 관련 지침 제도로 실행력 증진

요 약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 한덕훈 · 김양희 · 임해주 · 김주형 · 이민정 · 허재영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그간 농업, 교통 등 타 분야에 포함되어 고려되었기에 정책적 위상 확보와 분야 고유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는 정책 연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 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내용)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현황과 제도 기반 분석, 권역별 협력 수요 진단, 전략 패키지 ODA 사업(안)과 성과지표(안) 설계, 개선 과제 도출

-
- (방법)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기반 질적 분석틀 및 해당 계획 적용 기간 준용하여 정량·정성 혼합 연구 방식 적용, 국내외 정책 문서·통계·사례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FGI 등

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기간 동안 해양수산 ODA는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증가하는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질적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 ODA는 다양한 부처 내·외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정책-현장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장치와 실무 지침의 체계적 마련이 요구됨

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수요 분석

- 주요국은 해양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어업,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 ODA 협력 수요를 국가 ODA 전략에 적극 반영 중이며, 협력국은 권역별로, 국제기구들은 분야별로 수요 요청 분야에 차이가 있었음
- 국내에서는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별로 노동력 확보, 연구 협력, 현장 기반 참여 확대 등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 모델 사업(안)

- 해양수산 ODA 사업의 도전과제는 우선순위의 일관성,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제도적 체계 보완, 연구 기반 확대 등으로 도출됨
-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요 기반 패키지 ODA 사업(안)을 설계하였으며, 해양수산 ODA의 도전과제로 도출되었던 ‘연계형 사업 발굴’ 및 ‘이해관계자 협력 확대’ 극복을 목적으로 함
- 총 다섯 가지의 패키지 사업(안)(산업 인재 확보,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을 제안함
- 각 패키지는 실행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종합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며, 실제 기획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성과지표(안)와 연계됨

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개선(안)

- 패키지 사업(안)별로 산출·성과·영향 단계의 논리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정성 지표를 개발하여 SDGs 연계성과 측정 가능성을 높임
- 제안한 성과지표(안)의 해양수산 ODA 사업 적용을 위해서는 산출식 개발과 시범사업 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 단계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 해양수산 ODA 사업도 성과 기반의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수행기관 간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표 정의, 측정 주기, 평가 방식 등 실무 지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6.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과제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해양수산의 특수성과 국가 정책 간 정합성을 고려한 전략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략-실행-성과 간 유기적 연결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함
-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제안된 패키지 사업(안)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의 및 조정, 성과 기반 전 주기 관리 체계 제도화, 그리고 민간·학계·시민사회 등 다중 주체와의 협력 기반 강화 등이 포함됨

7. 결론

- 본 연구는 해양수산 ODA의 현황 분석 - 대응 방안 수립 - 사업(안) 및 지표(안) 도출 -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양수산 ODA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패키지 ODA 사업(안)과 연계된 성과지표(안)는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실용적 모델로 설계되어 실제 패키지 사업(안) 기획 시 활용이 가능함
-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 ODA의 정책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ECUTIVE SUMMARY

A Strategic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Sector

: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s

Hae-Eun Jeon · Deuk-Hoon Han · Yang-Hee Kim · Hae-Ju Im ·
Ju-Hyung Kim · Min-Jung Lee · Jae-Young Huh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 The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sector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garded as a component of other sectors such as agriculture and transportation, which limited its ability to secure an independent policy status and reflect sector-specific characteristics.
-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policy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a medium- and long-term strategy and the identification of implementation task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ensuring policy coherence and field applicability, to be reflected in the “4th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6-2030).”

2) Contents and Methodology

- Contents: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iagnosis of regional cooperation needs, design of strategic package(module)-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and identification of improvement tasks.
- Methodology: Application of a mixed-methods approach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3rd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documents, statistics, and case studies,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stakeholder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2.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Under the “3rd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1–2025),” ODA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has seen quantitative growth. However, meeting rising cooperation demands requires concurrent strengthening of qualitative foundations.

- Given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systematic coordination mechanisms and practical guidelines are required to enhance the linkage between policy and field-level implementation.

3. Analysis of Cooperation Needs in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Major countries actively reflect cooperation needs such a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fisheries, and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ir national ODA strategies. Cooperation requests from partner countries differ by region, whil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hibit sector-specific demands.
- Domestically, stakeholders such as industry, academia, and civil society are identified as potential partners for collaboration in securing labor, promoting research cooperation, and expanding field-based participation.

4. Proposed Model Project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pecialized in Oceans and Fisheries

- Challenges facing oceans and fisheries ODA include maintaining consistency in prioritization, expanding linked and cross-sectoral projects, strengthening multi-stakeholder cooperation, enhancing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broadening the research base.
-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ODA projects, this study designed demand-driven package(module)-type ODA projects aimed at overcoming challenges such as discovering linked projects and expanding stakeholder cooperation.
- Five package(module)-type projects (proposal) have been identifie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alent; enhancement of capabilities across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high value-added marine products; integrated suppor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eco-friendly energy;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smart port and logistics systems; and con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marine tourism.
- Each package(module)-type project is designed considering feasibility and policy alignment, and is linked to performance indicators proposed in the following section to ensure practical applicability.

5. Improvement Plan for the Management System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Logical frameworks are established for each package(module)-type project, encompassing the output-outcome-impact stages,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developed to enhance the measurability of SDG linkages.
-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performance indicators to oceans and fisheries ODA projects, formula development and pilot project linkages must be conducted in advance to enhance their usability in project operations.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erformance-based full-cycle management system for oceans and fisheries ODA projects and systematize practical guidelines including indicator definitions, measurement cycles, and evaluation methods to ensure consistent management across related agencies.

6. Strategies and Tasks for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To be incorporated in the “4th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c improvements are proposed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ir alignment with national

policies, designed with an organic connection between strategy,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 Key tasks include facilitating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for package(module)-type project execution, institutionalizing a result-based management system, and strengthening multi-stakeholder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cademia, and civil society.

7. Conclusion

- This study pres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landscape, response strategies, projects and indicator proposal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for oceans and fisheries ODA, aiming to establish a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framework.
- The proposed package(module)-type projec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are designed as practical models with field applicability, enabling their utilization in actual project planning.
- It is anticipated that the outcomes of this study will elevate the policy standing of Korea's oceans and fisheries ODA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arine governa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전체 국제개발협력 방향성은 중장기 계획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주관하에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수립된다.¹⁾ 이 계획에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여타 분야와 비교하여 정책적 중요도나 성과의 전략적 반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함으로써 공여국으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해 말 국제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

1) ODA Korea, ODA 체계(검색일: 2025.1.18.)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10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법에 따라 최초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인 「제1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011-2015)」도 수립되었다. 그러나 해당 계획 수립 당시 해양수산부가 부재하였기에 해양수산 세부 분야는 각각 농업(수산), 교통(해운, 항만), 환경(해양) 등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편입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구분이 현재까지도 유지 중이다. 2025년 2월 기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부위원 16인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주요 정책 안전을 심의하는 민간위원 12인, 실무위원회 12인, 평가전문위원회 10인 중에는 해양수산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²⁾

한편,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어업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 해양수산 관련 국제 이슈가 주요 국제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해양강국인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이 국제사회로부터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 선정 과정에서 해양수산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제사회와 협력국의 증가하는 협력 요청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내 해양수산 분야가 포함된 국가는 3개국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역개발이나 농업과 연계된 수산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협력 대상인 태평양 도서국이나 카리브해 연안국은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시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등 분야별 관련 국제기구는 점차 많은 협력사업을 해양수산부로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다자사업 혹은 다자성 양자사업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시 현행 국

2) ODA Korea,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실무위원회·평가전문위원회(검색일: 2025.4.30.)

3) 세네갈·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기준과 불일치하여 결국 사업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⁴⁾ 이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특성과 국제협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농업, 교통, 환경 등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적과 특징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가 직면한 주요 과제와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협력국과 국제사회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수요와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강점을 연계한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제안한다. 셋째, 해양수산 분야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이고 실무적인 성과관리 체계(안)와 성과지표(안)를 제시한다.

4) 2025년 해양수산부 부처 신규무상원조사업 제안서 외교부 심의 결과(2024.4.) 참조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과제와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타 분야의 경우,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⁵⁾,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안)⁶⁾, 과기·ICT ODA 추진전략⁷⁾,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⁸⁾,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⁹⁾ 등 별도 전략이 수립된 바 있으나, 해양수산 분야는 2010년대 중반까지 ODA 규모가 작아 중요도가 낮았기 때문에 전략 수립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최근 10년간 급격히 확대되어 규모에 부합하는 질적 발전 및 제도적 기반의 균형을 맞추는 필요성이 발생하여 규모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 제도 및 현황을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제도와 비교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양수산 특성을 고려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해양수산 개발협력 어젠다, 주요국 전략, 우리나라의 대외전략과 해양수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도전과제를 파악하였다. 도출된 도전과제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시의 현장 적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 수행 주기인 발굴·기획, 관리·평가, 홍보·교육·환류 등 세 단계에 따라 체계화하여 실질적 개선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ODA 사업(안) 개발을 위해 국내

5) 기획재정부(2021.7.7.)

6) 기획재정부(2021.11.)

7) 관계부처 합동(2022b)

8) 관계부처 합동(2023b)

9) 관계부처 합동(2023a)

의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민·관·학에서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협력국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협력 수요와 우리나라 해양수산 이해관계자의 비교우위 간의 결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KOICA의 패키지 사업인 시그니처 프로그램과 EDCF의 패키지 사업인 종합 제안¹⁰⁾과는 차별화되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패키지 사업 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협력 수요 분석을 위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기간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중심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국 정책 문서, 국제기구 어젠다는 물론, 정상회의, 고위급 회담, 양자회담 등 공식 요청과 더불어 해양수산부 부처 국제협력 플랫폼인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등을 통해 수집된 협력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문헌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¹¹⁾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부처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마련하였다. 패키지 사업(안) 기획 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해양 생태계 보존(SDG 14)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비전인 ‘K-OEI(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 및 우리나라의 경제외교·해양수산 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책 부합도와 국제사회 국제개발협력 목표 달성 기여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협력대상국 선정에서는 기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을 기본축으로 하되, 태평양 도서국과 같이 해양수산 협력 잠재력이 높은 비중점협력국가도 포함하였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만을 위한 중점협력국 선정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

10) 관계부처 합동(2025b), p. 8, 관계부처 합동(2025c), p. 6.

11) 관계부처 합동(2025a), pp. 7-37, 관계부처 합동(2025b), pp. 5-18.

나¹²⁾, 실제 해당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웠던 연구 결과와 실제 사업 추진 간의 간극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접근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선(안)과 해양수산 특성을 반영한 ODA 성과지표(안)도 제안하였다. 제안한 특화 패키지 사업(안) 및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특성 반영 ODA 성과지표(안)가 필요하다. 기존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성과지표¹³⁾는 보편적인 ODA 사업 수행 성과 관리에는 적합하나 해양수산 분야의 고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 관리 및 평가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해양수산 고유의 성과 측정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우리나라 정책 기조와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살린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실행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 제언에 있어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과 연계성을 강조하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전략과 실행과제의 현장 적용도와 제언사항 수용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12) 예를 들어, 윤일선 외(2017) 등

13) 국무조정실(2022.1.)

2. 연구 방법

1) 연구의 시간적 범위 및 대상 설정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이 적용되는 2021년부터 2025년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국제개발협력 지원 실적 통계가 익년 8월에 확정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실적 분석 대상 기간은 2019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까지로 한정하였다.¹⁴⁾ 그 외 정책 및 제도 분석 등 현황 분석은 당초 설정한 기간을 준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중 해양수산부 중심의 정책적 제언이라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 주도 공적개발원조(ODA)로 특정하였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역량강화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2) 분석 방법 및 연구틀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지원 실적, 성과지표, 사업 유형 등 정량화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틀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현황 분석 체계를 차용하여 현황 분석과 수요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14) 데이터원에 따라 2022년이 가장 최신 자료인 경우, 별도 표시를 하고 2022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함

〈표 1-1〉 본 연구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분석틀 비교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본 연구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성과 평가	주요 성과	정량 실적, 정성 실적	현황(지원 실적) 분석, 정책 및 제도 분석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정량 한계, 정성 한계	
환경 분석	대외 환경	국제사회, 국제기구 및 주요국 ODA 동향	국제사회 동향 분석, 주요국 정책 분석, 협력국 수요 분석
	대내 환경	시행기관, 이해관계자, 재정 여건 등	국내 수요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20.)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2〉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

구분	주요 분석 내용	분석 방법
국제사회 동향	• SDGs 분석 • 주요 국제기구 어젠다 분석 • 주요 공여국 해양수산 ODA 전략	• 문헌조사 • 이해관계자 인터뷰 • 국제기구 보고서 분석 • 정책 문서 검토
우리나라 현황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체계 분석 • 해양수산부 정책 및 국제개발협력 체계 분석 • 국제개발협력 실적 분석 •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실적 분석	• 정부 문서 분석 • ODA 통계 분석 • 이해관계자 인터뷰
협력 수요 분석	• 권역별 해양수산 협력 수요 분석 •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어젠다 분석 • 양자협력 채널 및 협의 플랫폼 요청사항	• 협력국 정책 문서 분석 • 문헌조사 • 회의 및 협의 자료 검토 • 수요 유형화 및 분류
이해관계자 분석	• 대내 환경 분석	• 문헌조사 • 회의 및 협의 자료 검토 • 심층 인터뷰 • 초점집단인터뷰(FGI) •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20.)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연구 수행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구조를 준용하여 성과 및 환경 분석, 시사점 도출, 추진방향 설정, 세부 추진과제 제시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시급성과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해양수산 특화 전략 패키지 사업(안)과 성과 체계 개선(안)은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강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주요국 해양수산 ODA 정책,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및 해양수산 ODA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 DAC 통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자료, 해양수산부 ODA 사업 자료 등을 활용한 정량·정성 분석도 실시하였다.

국내외 해양수산 ODA 사업 및 성과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 개발 및 성과지표(안) 수립에 참고하였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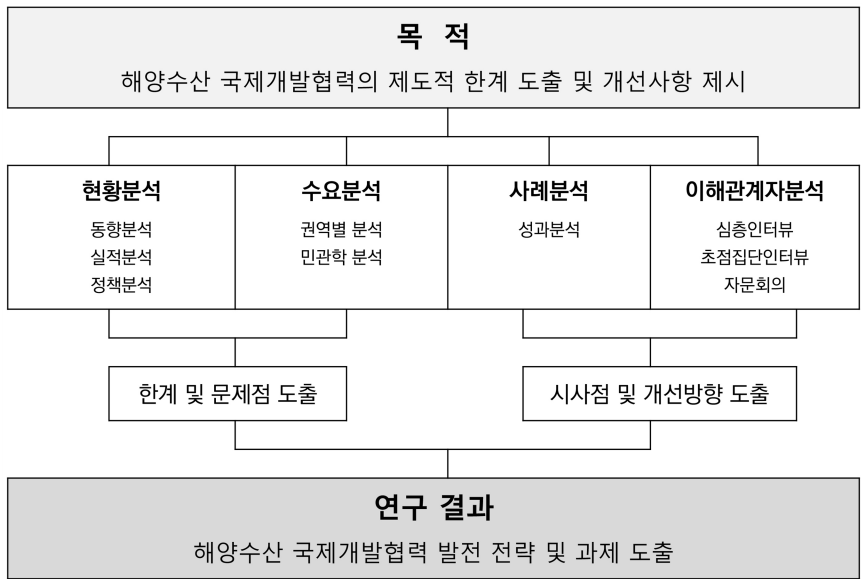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국내 전문가, 국제개발협력 수행기관, 협력대상국 주요 기관, 민간 부문 참여자 등 총 2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발된 패키지 사업안과 정책 개선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별 전문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과 여러 차례 자료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으로 정책 방향의 적절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안에 반영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주기(발굴·기획, 관리·평가, 홍보·교육·환류)에 맞춘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취하였다.

상기 내용을 요약한 연구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 구성도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연구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ODA의 양적 확대와 한국형 ODA 혹은 개별 분야 중심의 접근을 보여왔다. ODA 규모 결정 요인을 연구하여 ODA 규모 추정 모델을 개발하거나(정혁, 2016), 한국형 ODA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윤일선 외, 2017; 이석원·신재은, 2017). 특정 분야나 지역 분석을 통해 특화 전략을 마련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는데, 아시아(권율 외, 2021; 허장 외, 2014), 태평양 및 아프리카(정명화 외, 2015), 농림업(지성태 외, 2014; 허장 외, 2014; 이대섭 외, 2015), 해양수산(박성욱·이주아·차정미, 2023; 한덕훈 외, 2021; 윤일선 외, 2017; 홍현표 외, 2010) 등에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분야별 ODA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는 선진 공여국이나 타 부처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권율 외, 2021; 한덕훈 외, 2021; 임원혁 외, 2020; 정명화 외, 2015; 홍현표 외, 2010). 일부 연구는 외교정책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의 부합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는데, 박성욱·이주아·차정미(2023)는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방향을, 한덕훈 외(2021)는 코로나19 시대의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양수산 ODA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연구는 드물었으며, 대부분 타 공여국 혹은 분야 규모 비교에 따른 양적

확대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 범위가 해양수산물 ODA 사업의 총 규모 혹은 수산 ODA 사업 위주로 분석되어 해양수산물 세부 분야별로 진행되는 해양수산물부의 국제개발협력 수행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의 연계성보다 해양수산물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국가 ODA 전략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왔다.

〈표 1-3〉 본 연구의 주요 국내 선행연구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과제명: 우리나라 외교정책과 해양수산물분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박성욱, 이주아, 차정미(2023) • 연구목적: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해양수산물 분야 협력방향 도출	• 우리나라 외교정책 분석 • 우리나라 외교협정 분석 • 해양 협력 방안
• 과제명: 해양수산물 전문가관 지정에 따른 해양수산물 ODA 중장기 발전 전략 • 연구자(연도): 한덕훈 외(2021) • 연구목적: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의 전략적 대응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양수산물 ODA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현황 분석 및 국제 동향 파악 • 해양수산물 ODA 관리·신규사업 발굴 지원·협력체계 구축·평가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중장기 ODA 발전전략
• 과제명: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 연구자(연도): 권율 외(2021) • 연구목적: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주요 대외정책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 전략 제시	• 아시아 지역 현황 및 개발과제, 지원 성과 • 한국의 아시아 ODA 적정 규모 추정과 재원 배분 • 주요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 추진 ODA 지원전략 분석 통한 개선과제
• 과제명: 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 연구 • 연구자(연도): 임원혁 외(2020) •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분석 및 주요국의 체계 개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협력 추진체계 개편 방안 탐색	•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유형 분석 • 우리나라 개발협력 체계 문제점 및 개편 방안 제시 •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 사례 분석
• 과제명: 해양수산물 ODA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연구 • 연구자(연도): 윤일선 외(2017)	• 해양수산물 ODA 사업의 협력 현황 및 동향 • 해양수산물 ODA 중점협력 대상국 선정 • 해양수산물 분야 ODA 사업의 협력 모델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연구목적: 주요 연안국과의 MOU 체결 및 ODA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한 대륙별 해양수산 선정 및 협력 모델 제시	
- 과제명: 한국형 ODA 모델의 활용성과와 개념 적절성 - 연구자(연도): 이석원, 신재은(2017) - 연구목적: 한국형 ODA 모델 활용 성과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한국형 ODA 모델 내용 및 현황 - 변화이론 기반 한국형 ODA 모델 평가 - 한국형 ODA 모델 활용 성과 평가
- 과제명: ODA 규모 결정요인 실증분석과 한국 에의 적용 - 연구자(연도): 정혁(2016) - 연구목적: ODA의 규모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및 규모 추정 모델 개발	- ODA 현황 분석 - ODA 규모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 ODA 규모 추정 모델 개발
- 과제명: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굴 연구: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정명화 외(2015) - 연구목적: 아프리카·남태평양 지역 해양수산 ODA 협력 기본방향과 신규 사업 발굴 방안 제시	- 해양수산 ODA 현황 분석 - 주요 공여국 해양수산 ODA 사례 분석 - 주요 수원국 해양수산 ODA 현황 및 양자협력 사례 분석 - 해양수산 분야 ODA 기본방향 및 전략 - 양자협력 사업(안)
- 과제명: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1차/2차) - 연구자(연도): 허장 외(2014)/ 이대섭 외(2015) - 연구목적: 2012년 제시된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프로그램 수정·보완 제시	- 한국형 ODA 모델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램 분석 - 프로그램별 사업 수행 및 개도국 적응을 위한 개선사항
- 과제명: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우량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법 연구 - 연구자(연도): 지성태 외(2014) - 연구목적: 농업분야 ODA 질적 제고를 위해 우량사업 발굴 접근법 분석	- 농업 ODA 현황 - 농업 ODA 발굴 문제점 - ODA 사업 발굴 접근법 분석 - 우수사례 제시
- 과제명: 수산 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연구자(연도): 홍현표 외(2010) - 연구목적: 수산 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안 마련	- 우리나라의 ODA 추진실태 분석 - 외국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사례 분석 - 수산 부문 협력 가능성과 한국의 개발 경험 - 협력 대상국의 수산업 현황과 ODA 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 수산 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국외연구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의 외교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우선, 주요 공여국은 해양 정책과 국제개발협력과의 긴밀한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미국은 해양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국가 해양 전략의 일환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Waltz et al., 2024), 노르웨이는 ODA를 포함하여 해양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Norwegian Ministries, 2016). 일본의 경우,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ODA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SDGs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다(JICA, 201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많았다. 수산 분야 ODA의 흐름과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Pittman et al., 2019)와 해양 보전을 위한 자금 흐름에 대한 연구(Berger, Caruso, & Peterson, 2019)는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적 협력과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개발협력에 미친 영향(Brown, 2021)이나, 수산 분야 ODA와 국제개발 목표와의 연계성(Blasiak & Wabnitz, 2018) 등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외 연구들은 대부분 식민지 지원이라는 시혜적 관점에서 시작된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체계가 장기간 구축되어 온 선진 공여국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 성과 평가에 기반한 포괄적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해양수산이라는 특정 분야의 수행 체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사점

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수행을 위한 실용적 지침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표 1-4〉 본 연구의 주요 국외 선행연구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과제명: 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 연구자(연도): Waltz et al.(2024) • 연구목적: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해양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해양 전략을 수립	• 미국 해양 부문 쇠퇴 원인 및 경제성 분석 • 중국 해양력 부상과 미국 현황 비교 분석 • 미국 해양 부문 경쟁력 회복 방안 평가 • 전략적 제언 및 투자 계획 제시
• 과제명: Foreign aid, human agency, and self-reliance in the Pacific: Lessons from the pandemic • 연구자(연도): Teaurere et al.(2023) • 연구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이 태평양 섬 주민들(통가 및 쿡제도)의 외국 원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탐구	• 코로나19 팬데믹이 통가 및 쿡제도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영향에 대한 인터뷰 분석 결과(경험적 측면 및 자원적 측면) • 정책적 함의
• 과제명: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day : A Radical Shift Towards a Global Paradigm • 연구자(연도): Develtere et al.(2021) •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 국제개발협력 역사 • 국제개발협력 인식의 전환 분석 • 국제개발협력 성공 및 실패 사례 •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제시
• 과제명: The impact of COVID-19 on development assistance • 연구자(연도): Brown(2021) • 연구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이 ODA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한 변화 평가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원조 흐름 및 구조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 및 부정적 변화 • 향후 국제개발협력 방향
• 과제명: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연구자(연도): Ryabinin et al.(2019) • 연구목적: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해양과학 협력 방향	• 현황 및 여건 파악 • 국제 어젠다 분석 • 전략 제시
• 과제명: A global assessment of structural change in development funding for fisheries	• 수산 분야 ODA 흐름 • 수산 분야 ODA의 공여국 및 수원국 간 형성 관계 구조 분석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연구자(연도): Pittman et al.(2019) - 연구목적: 2002년에서 2016년까지 수산 분야 ODA의 구조적 패턴과 변동성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식 조사	식민지적 연계성과 지정학적 우선순위가 수산 분야 ODA 흐름에 미치는 영향
- 과제명: An updated orientation to marine conservation funding flows - 연구자(연도): Berger, Caruso, & Peterson (2019) - 연구목적: 2010년부터 2015년까지 ODA와 민간 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해양 보전을 위한 자금 흐름 이해도 제고	- ODA와 민간 재단 자금 흐름 - 기타 자금 출처 분석 - 제언
- 과제명: Aligning fisheries aid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targets and goals - 연구자(연도): Blasiak & Wabnitz(2018) - 연구목적: 수산 분야 ODA 감소 원인 분석을 통해 수산 분야 지속가능발전 및 공동이익 창출 방안 모색	- 수산 분야 ODA 지원 현황 - 타 분야와 수산 분야 ODA 현황 비교 - 수산 분야 ODA 정책 변화
- 과제명: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battlefield: between the OECD and the UN - 연구자(연도): Esteves & Assunção(2016) -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주체와 실행 방식 변화 규명	- 구조 및 남남협력(SSC)의 부상 여건 분석 - 국제기구 역할 변화 평가 - 정치적·역사적 맥락 분석 - 탈중심화 과정
- 과제명: SDGs 達成への貢献に向けて : JICAの取り組み - 연구자(연도): JICA(2016) - 연구목적: 일본의 개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기여 방안 제시	- SDGs 달성 위한 기본 방침 - 각 SDGs 목표에 대한 JICA의 정책 -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 과제명: Blue Opportunities - 연구자(연도): Norwegian Ministries(2016) - 연구목적: 노르웨이의 해양 산업 발전 및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제시	- 노르웨이 해양 경제의 역사적 배경 및 해양산업의 역할 -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한 통합적 해양 관리와 국제협력의 중요성 - 기존 해양산업과 신형 해양산업 발전 방안 - 해양 산업 재구조화 등을 통한 기술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과제명: Beyond Aid: A Conceptual Perspective on the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 연구자(연도): Janus, Klingebiel, & Paulo (2014) •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 변화에 대한 개념적 분석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한 미래 방향성 모색	• 국제개발협력 기존 정의 및 현황 •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구조(주체, 자원, 제도, 지식) •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제언

자료: 저자 작성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현황 분석이나 정책 제언을 넘어, 해양수산 분야의 고유한 특성과 전략적 강점을 반영한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와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협력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전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해양수산 ODA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라는 개별 부처의 접근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정합성을 갖춘 해양수산 ODA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해양수산 ODA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해양수산부 중심의 사업 발굴·기획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국가 정책 체계 안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둘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및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 기획 및 발굴 단계에 적용 가능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유형별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정책적 제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셋째, 해양수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ODA 성과지표(안)를 새롭게 설계하

고 관리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이 국가 국제개발협력 전략 내에 유기적인 정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정합성, 현장 실행력, 제도 개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국제사회의 어젠다, 협력국의 수요, 우리 정부의 정책 역량, 민간 및 시민사회¹⁵⁾의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과 이에 기반한 성과지표(안)는 일회성 또는 분절적 사업 구조를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안)과 단순한 사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화와 수행 과정에서의 성과관리 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표(안)와 함께 설계되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해양수산 분야의 고유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정부와 시장(기업) 부문 외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개인 및 집단의 활동 영역을 의미하며, 시민사회의 주체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노동조합, 종교 단체, 학술훈단체, 지역 공동체 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가 포함됨. 비정부기구(NGO)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하위 개념으로 인권, 개발, 환경,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주로 지칭함. 따라서, NGO는 시민사회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NGO라는 용어가 보다 구체적인 활동 단체를 지칭할 때 사용됨

0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제1절 국제사회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는 개발 격차와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 민간자금, 민간증여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수단으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 및 기술 협력을 의미한다.¹⁶⁾ 국제개발협력을 구성하는 자원 중 ODA가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ODA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16)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검색일: 2025.1.18.)

2.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및 규범

1) OECD DA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1961년에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어느 나라도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활동은 공적 개발원조 모니터링, 개발협력 기준 수립, 정기 동료평가 실시 등이다.¹⁷⁾ OECD DAC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선진 공여국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OECD DA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국제개발협력 수행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OECD DAC는 가입 후보국에 대해 개발협력 전략, 개발협력 정책 및 제도, 수행 실적,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을 통과한 국가에 한해 회원국 자격을 부여한다.¹⁸⁾ DAC 회원국이 되면 공여국으로서의 헌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 국제개발 시스템·정책 강화 및 개혁에 대한 조언 수령, 개발 금융 통계 수집 및 보고 개선, 국제개발 정책 지침 개발, DAC 의사 결정 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¹⁹⁾ 2025년 현재 DAC의 회원국은 32개이며²⁰⁾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가입이 확정되어 2010년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DAC 회원국은 가입 시점부터 DAC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법률 문서, 즉,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 규범 목록은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OECD의 규범은 결정, 권고, 기타 규범으로 구분되는데, 형식상 회원

17)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검색일: 2025.1.7.)

18) OECD(2024.8.22.) (검색일: 2025.1.7.)

19) OECD(2019, pp. 12-18; 2024, pp. 11-12).

20) 2025년 5월 기준

국의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규범은 결정뿐이며,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는 비구속적 규범에 해당한다.²¹⁾ 회원국은 또한 DAC의 모든 회의와 산하기관 회의 중 최소 하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중간 검토 참여 및 5년 이내에 동료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동료 검토는 DAC가 승인한 방법론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회원국은 다른 DAC 회원국의 프로그램 검토 과정에서 심사관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DAC 요건과 보고 기준, 방법에 부합하는 공식 및 민간 통계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발협력 보고서에 포함될 요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²²⁾

주요 규범으로는 1978년 채택된 「원조 조건 권고안(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이 있다. 이 규범은 공여국의 ODA 약정액에 대한 평균 증여율을 최소 86%까지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최빈국에 대한 ODA 증여율은 개별 국가 기준으로 3년 평균 86% 이상, 최빈국 그룹 전체에 대해서는 연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³⁾

2005년 채택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도 널리 알려진 규범 중 하나다. 이 규범은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최초의 국제 합의로, 개발협력의 질과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파리선언이 제시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공여국과 수원국 간 개발의제 및 시스템의 일치(alignment), 공여국 간의 조화(harmonization), 성과 중심 관리(managing for results), 그리고 상호책임(mutual accountabi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⁴⁾

21) 함기영·민영훈(2014), p. 213.

22) OECD(2024.8.22.)(검색일: 2025.1.7.)

23) OECD(1978), pp. 4-5.

24) OECD(2005), pp. 6-13.

〈표 2-1〉 OECD DAC 규범

규범 번호	규범명	채택일	상태
OECD/LE GAL/5022	DAC Recommendation on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14/05/ 2024	유효
OECD/LE GAL/0466	OECD DAC Declaration on a new approach to alig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27/10/ 2021	유효
OECD/LE GAL/5021	DAC Recommendation on Enabling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06/07/ 2021	유효
OECD/LE GAL/0458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	26/06/ 2020	유효
OECD/LE GAL/5020	DAC Recommendation on Ending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Harass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Key Pillars of Prevention and Response	12/07/ 2019	유효
OECD/LE GAL/5019	DAC Recommendation on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22/02/ 2019	유효
OECD/LE GAL/0431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on Managing the Risk of Corruption	16/11/ 2016	유효
OECD/LE GAL/0386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25/05/ 2011	유효
OECD/LE GAL/5018	DAC Recommendation on Good Pledging Practice	07/04/ 2011	유효
OECD/LE GAL/0381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9/04/ 2010	유효
OECD/LE GAL/0343	Declaration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04/04/ 2006	유효
OECD/LE GAL/5017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02/03/ 2005	유효
OECD/LE GAL/5015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5/04/ 2001	유효
OECD/LE GAL/5006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28/02/ 1978	유효

규범 번호	규범명	채택일	상태
OECD/LE GAL/0364	Declar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05/06/2008	폐기
OECD/LE GAL/5013	DAC Recommendation on Anti-Corruption Proposals for Bilateral Aid Procurement	07/05/1996	폐기
OECD/LE GAL/0246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an Environmental Checklist for Possible Use by High-Level Decision-Makers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 Institutions	22/02/1989	폐기
OECD/LE GAL/022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Measures Required to Facilitate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	23/10/1986	폐기
OECD/LE GAL/022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	20/06/1985	폐기

자료: OECD, OECD Legal Instruments(검색일: 2025.2.13.) DAC 위원회 관련 규범 검색 후 저자 정리

2) UN MDGs 및 SDGs

(1) UN MDGs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규범으로서 국제사회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2000년 제55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MDGs는 191개 UN 회원국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개발 목표로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을 조율하고 개발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개발 목표를 통합적으로 설정하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개발 정책을 조정하는 데 기여했다.²⁵⁾

25) UN(2012), p. 4, 5, 7.

MDGs는 빈곤 감소, 교육 기회 확대, 보건 개선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이 46%에서 27%로 감소했으며, 동아시아와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이 큰 성과를 보였다. 초등 교육 등록률은 2007년 기준 88%에 도달했고, 여성의 교육 참여율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유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며, 예방 접종 확대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보급 등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었다.²⁶⁾

그러나 MDGs의 성과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분쟁 국가에서는 빈곤 감소 속도가 더뎠다. 또한 MDGs는 불평등 완화, 환경 지속가능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교육의 경우, 등록률은 증가했으나 교사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나 정치 참여 확대도 일부 국가에서만 진전이 있었다. 보건 부문에서도 기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여전히 제한적인 국가들이 많았고, HIV/AIDS 및 말라리아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건 시스템이 취약했다.²⁷⁾²⁸⁾

이처럼 MDGs는 2015년 종료될 당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포괄성 부족과 국가 간 격차라는 한계를 남겼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채택하여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2) UN SDGs

SDGs는 2015년 9월 25일 UN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 개발 목표로, 2000년에 채택된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

26) UNDP(2015), pp. 3-5.

27) UN(2012), p. 3, 6, 9.

28) UNDP(2015), p. iv, 11.

하여 수립되었다. MDGs는 빈곤 퇴치, 교육 확대, 보건 개선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불평등 해소, 환경 지속가능성, 경제 성장, 평화·정의 등 일부 중요한 이슈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리우+20(Rio+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속 목표가 논의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의 협의를 거쳐 SDGs가 구체화되었다. MDGs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SDGs는 모든 국가(선진국 및 개도국 포함)가 실천해야 하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이들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Leave No One Behind(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포함하는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²⁹⁾

SDGs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고려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5P’ 원칙(사람·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으로 설명한다. 사람(People) 부문에서는 빈곤과 기아를 종식하고, 건강, 교육, 성평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보장하며, 지구(Planet) 부문에서는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영(Prosperity)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며, 평화(Peace) 부문에서는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 조성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 부문에서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및 기술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³⁰⁾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목표는 ①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② 기아 해소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③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④ 양질의 교육

29) UN(2015), pp. 3-4.

30) UN(2015), p. 2.

제공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 ⑤ 성평등 달성과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 ⑥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⑦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확대, ⑧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⑨ 산업·혁신·사회 기반 시설 구축, ⑩ 국가 및 사회 내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⑫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확립, ⑬ 기후변화 대응 조치 강화, ⑭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⑮ 육상 생태계 보호 및 복원, ⑯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 및 제도 강화, 그리고 ⑰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포함한다.³¹⁾

SDGs 17개 목표 중 목표 14(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는 해양수산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오염 감소(특히 육상 활동으로 인한 오염),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보호와 복원,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해양 산성화 대응,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해양 및 수산업의 경제적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개발도상국의 해양 자원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과학적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³²⁾

3) BBNJ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약(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은 국가관할권을 넘어선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2023년 6월 19일 UN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토대로 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

31) UN(2015), p. 6, 14.

32) UN(2015), pp. 23-24.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약 수립의 배경에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공해와 심해저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해양자원 채취와 환경 악화,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플라스틱 오염 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증가했다. 둘째, 기존 해양법 체계(UNCLOS)가 공해 및 심해저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셋째, 해양유전자원(MGR: Marine Genetic Resources)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과 혜택 공유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³³⁾

BBNJ 협약은 공해 및 심해저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해양 보호구역 및 관련 조치를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ABMTs: Area-Based Management Tools)의 설정을 통해 해양 보호구역을 현재 2%에서 30%까지 확대한다. 또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특정 지역 보호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해양 보호구역 내 불법 어업 및 과잉 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마련한다. 둘째, 해양환경영향평가(EI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의 의무화를 통해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생태계 접근법(Ecosystem Approach)을 적용하고, 기후변화 및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해양유전자원의 관리 및 공정한 혜택 공유를 통해 해양 유전자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개발도상국과 공정하게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이 해양 유전자 자원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 넷째, 개도국 역량강화 및 기술 이전(Capacity-Building & Marine Technology Transfer)을 위해 개도국이 해양 연구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33) UN(2023), pp. 11-53.

지원하고, 과학 기술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촉진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³⁴⁾

BBNJ 협약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으로, 2023년 9월 20일부터 서명이 개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5년 3월에 비준을 완료하였다.³⁵⁾ 협약은 2025년 9월까지 60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³⁶⁾ 협약이 발효되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설립되며, 이 총회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 과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해 생태계 보호 강화, 국제 해양 거버넌스 체계 개선, 해양자원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협약이 실질적으로 공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 메커니즘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BBNJ 협약은 공해 및 심해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 최초의 포괄적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해양 보호와 자원 이용의 핵심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34) UN(2023), pp. 11-53.

35) 외교부 보도자료(2025.3.21.)(검색일: 2025.4.1.)

36) UN, Status of Treaties(검색일: 2025.1.10.)

3. 주요국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1) 국가 선정 기준

해양수산 분야 ODA는 ‘해양수산’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규모, 비중, 세부 지원 분야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국가별로 해양수산 ODA의 분류 체계와 명칭이 다르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는 국가별 지원 규모와 내용의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DAC의 해양 경제(Ocean Economy) ODA 규모에 따라 주요 공여국을 선정하였다. 지난해 OECD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개발 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해양 경제 관련 ODA 총액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가 증가하였다. 해양 경제를 위한 ODA 주요 공여국 순위는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⁷⁾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 경제를 위한 ODA 주요 공여국 중 총 ODA 규모가 크며, 주요 선진 공여국으로 꼽히는 일본, 독일, 미국, 노르웨이와 OECD DAC 국가 중 군소 도서국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호주 및 뉴질랜드)의 해양수산 부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37) OECD Data Platform on Development Finance for the Sustainable Ocean Economy, (2022)
(검색일: 2025.3.18.)

〈표 2-2〉 해양 경제 양자 ODA 주요 공여국 순위(2022년 기준)

순위	국가명	지원 금액(백만 USD)
1	일본	949
2	독일	453
3	유럽연합	435
4	프랑스	347
5	영국	154
6	노르웨이	105
7	미국	104

주: 2022년 각 공여국 지출액(disbursement) 기준으로 통계 산출
 자료: OECD(2022), DATA Platform on Development Finance for the Sustainable Ocean Economy(검색일: 2025.3.18.)에서 각 공여국 연도 DB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일본

일본의 ODA는 외무성(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무성은 일본 ODA의 핵심적인 주무 부처로 국가별·지역별 원조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전체 ODA 전략에 대해서는 각료로 구성된 내각이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에서 결정한다. 일본은 2008년 10월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ODA 집행기관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 일원화하였으며, 외무성을 통해 수립된 계획과 내각을 통해 결정된 전략을 ODA 실행기관인 JICA에서 집행하고 있다.³⁸⁾

일본의 해양수산 ODA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산 관련 기술 이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둘째, 해양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연안 생태계 복원 및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IUU 어업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세 가지 정책 방향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경제적·

3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Foreign Policy(검색일: 2025.3.21.)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전략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³⁹⁾

일본은 상기 정책 방향에 따라 SDG 14번 목표(해양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을 위한 다양한 ODA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JICA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IUU 어업 억제를 위한 국가별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주요 연안협력국 대상 어업 기술 전수를 통한 소규모 어업인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양식업 기술 이전, 그리고 훼손된 연안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은 ‘One Village One Product(OVOP)’ 모델과 같은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생계 향상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⁴⁰⁾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ODA 총액은 약 175억 달러였으며⁴¹⁾, 그중 해양 부문 ODA 지원 금액은 9억 4천만 달러였다. 2022년 지출액 기준 일본의 해양 분야 ODA 사업은 해상운송(45%), 수산(31%), 해양환경(2%), 해양수산 재난 위험 예방 및 대비(1%) 등 순으로 추진 중이었다.⁴²⁾ 2019년 이전에는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었던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태평양 도서국 및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해양수산 ODA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협력대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는 주로 인프라 중심 지원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⁴³⁾

39) 일본 국토교통성(2023), 해양기본법(검색일: 2025.1.20.)

40) JICA(2023a), pp. 18-29.

41)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42)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43) JICA(2023b), pp. 18-19.

3) 독일

독일은 개발협력 전담 부처인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가 중앙에서 ODA 정책 입안 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집행은 전문성에 따라 분화된 별도 기관들이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공사(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와 금융협력을 담당하는 독일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Bankengruppe)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전문성에 근거한 집행기관이 존재한다.⁴⁴⁾⁴⁵⁾

독일의 해양수산 ODA 정책은 지속가능한 해양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핵심 목표로 하며, 국제협약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BMZ는 SDG 14번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 맞추어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리, 해양 오염 방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30×30 목표(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설정)’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IUU 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⁴⁶⁾

독일은 다자간 협력 및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해양 보호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정책을 ODA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 Blue Action Fund(BAF)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수산업 종사자의 가치 사슬 개선 및 공정한 자원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B: World Bank),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44) OECD(2021), p. 4.

45) BMZ(검색일: 2025.4.3.)

46)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2024), pp. 14-28.

Environment Facility),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등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양 경제 구축을 지원한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 해양 산성화 대응, 연안 재해 예방을 위한 자연 기반 해결책(NBS: Nature-Based Solution) 및 기후 적응형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민간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협력국의 제도적 역량강화도 병행하고 있다.⁴⁷⁾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독일의 ODA 총액은 약 350억 달러이며⁴⁸⁾, 그중 해양 부문 ODA 규모는 4억 5천만 달러를 차지했다. 해양 분야 ODA 사업의 경우, 해양환경 보호(62%), 수산(15%), 해양수산 재난 위험 예방 및 대비(5%), 해상운송(4%) 순으로 수행되었다. 2022년 기준 독일의 해양 관련 부문 양자 ODA는 주로 인도네시아(38%), 모리타니(15%), 인도(14%)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베트남, 방글라데시, 튀니지 순으로 나타났다.⁴⁹⁾

4) 미국

미국의 ODA 관련 주요 기관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이나 유일한 기관은 아니며,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등 20여 개의 미국 정부 기관이 ODA 집행에 참여하고 있다.⁵⁰⁾⁵¹⁾ 미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국가 및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빈곤, 질병, 인도주의적 위기 완화에

47) BMZ(2024), pp. 14-28.

48) OECD(2024.6.17.)(검색일: 2025.3.18.)

49) OECD Data Platform(2025.3.18.)

50) OECD(2022), p. 19.

51) U.S. Foreign Assistance(검색일: 2025.4.4.)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세계 무역 참여 역량강화를 통해 자국 이익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⁵²⁾

미국은 해양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전반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활동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ODA 참여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4월 기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미국의 해양수산 ODA 정책 방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국가 해양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해운 및 조선업의 재건, 해양 안보 강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 해양 질서 유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⁵³⁾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ODA 총액은 약 605억 달러이며⁵⁴⁾, 그중 해양 부문 ODA는 1억 4백만 달러이다. 해양 분야 ODA 사업의 경우, 해양환경 보호(68%), 해양수산 재난 위험 예방 및 대비(9%), 해상풍력발전(4%)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미국의 해양 관련 부문 양자 ODA 대상국은 필리핀, 예멘,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콩고 등이었다.⁵⁵⁾

5) 노르웨이

노르웨이 외교부(NMFA: The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ODA 정책의 수립, 조율 및 전반적인 감독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며, 외교부 산하기관인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이 일부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외교부 자체적으로도 상당 부분의 ODA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노르웨

5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5), p. 1.

53) Waltz et al.(2024), pp. 1-8.

54) OECD(2024.6.17.)(검색일: 2025.3.18.)

55)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이 투자기금(Norfund)과 대사관 등도 일부 ODA 프로그램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⁵⁶⁾

노르웨이 또한 SDG 14(해양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해양수산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ORAD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에 대한 지식 전수, 어업 데이터 관리 방안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해양수산 ODA 사업으로는 ‘난센 프로그램(EAF Nansen Programme)’이 있다. 주로 아프리카 연안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여국들이 자국 해양자원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어업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어획 생산성 유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⁵⁷⁾

이와 함께 노르웨이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선도적 대응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 플라스틱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국의 폐기물 관리 개선, 해안 및 강 유역 폐기물 수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및 폐기물 관리 역량강화, 그리고 해양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약 및 지역 정책 도구 발전이라는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⁵⁸⁾

2022년 기준 노르웨이의 ODA 총액은 약 51억 달러이며⁵⁹⁾, 그중 해양 부문 ODA 규모는 1억 4백만 달러였다. 해양수산 분야 ODA 사업의 경우 주로 수산,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기준 노르웨이의 해양 관련 부문 양자 ODA 대상 국가는 모잠비크, 예멘, 가나,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등이었다.⁶⁰⁾

56)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7.6.), pp.14-15.

57) NORAD(2022), pp. 15-18.

58) NORAD(검색일: 2025.4.3.)

59) OECD(2024.6.17.)(검색일: 2025.3.18.)

60)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6) 호주

2013년 호주국제개발청(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이 외교통상부(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에 통합된 이후, 호주의 ODA 정책 수립 및 집행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⁶¹⁾

호주의 ODA 정책은 2023년 발표한 「호주국제개발정책(Austral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호주 ODA 추진에 있어 핵심 영역은 ① 기후변화, ② 지역 주도 개발 그리고 ③ 양성평등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과 노력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⁶²⁾

또한 호주는 해양 환경의 관리,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해양 보존에 대한 효과적이고 보완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호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해양 포럼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는 태평양 지역 환경프로그램 사무국(SPREP: South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태평양 쓰레기 프로젝트(POLP: Pacific Ocean Litter Project), 산호초, 수산업 및 식량안보를 위한 산호삼각지대 이니셔티브(CTI-CFF: The Coral Triangle Initiative for Coral Reefs, Fisheries and Food Security), 태평양 거버넌스 강화(EPOG: Enhancing Pacific Ocean Governance), 아라푸라 및 티모르해 생태계 활동(ATSEA: Arafura and Timor Seas Ecosystems Action) 등에 참여하고 있다.

61) Australian Government(검색일: 2025.3.19.)

62) Australian Government(2023), p. 11.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호주의 ODA 총액은 약 30억 달러이며⁶³⁾, 그중 해양 부문 ODA 지원 규모는 9천 7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호주의 해양 ODA 사업은 해상운송(45%), 수산(31%), 해양환경(2%), 해양수산 재난위험 예방 및 대비(1%) 등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기준 호주의 해양 관련 양자 ODA는 대부분 파푸아뉴기니에 집중되었다.⁶⁴⁾

7)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ODA 추진 체계는 2009년 뉴질랜드 원조개발청(NZAID: The New Zealand Aid Programme)이 외교부(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에 통합된 이후, 외교부를 중심으로 ODA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⁶⁵⁾

뉴질랜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인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ffective Sustainable Development)」은 ‘퍼시픽 리셋(Pacific Reset)’ 기조에 따라 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정책은 뉴질랜드 정부가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참여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며, 개발협력 전반을 이끄는 네 가지 핵심 원칙(효과성, 포용성,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뉴질랜드는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자국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태평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과 안정을 증진하는 데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상

63) OECD(2024.6.17.)(검색일: 2025.3.18.)

64)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65) OECD(2023), p. 16.

호 이해, 우정, 상호이익, 공동의 비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 및 실행하고 있다.⁶⁶⁾

뉴질랜드의 해양수산 ODA 정책은 태평양 지역의 해양자원 보존과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태평양 도서국들을 대상으로 과학 기반 어업 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산자원 관리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태평양 어업을 위한 지역 로드맵(Regional Roadmap for Sustainable Pacific Fisheries)」에 명시된 태평양 국가들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어업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⁶⁷⁾⁶⁸⁾

이와 함께, 뉴질랜드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뉴질랜드와 주변 태평양 도서국에 심각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물종 멸종 위기와 어업 및 해양자원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의 생계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뉴질랜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3억 달러 규모의 기후 원조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최소 절반을 태평양 도서국 지원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⁶⁹⁾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질랜드의 ODA 총액은 약 5억 달러이며⁷⁰⁾, 이 중 해양 부문 ODA 지원 규모는 약 1천 9백만 달러다. 해당 연도 지출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해양 분야 ODA는 수산(54%), 해양 환경 보호(23%), 해상운송(17%) 순으로 집행되었다. 2022년 기준 뉴질랜드의 해양 관련 양자 ODA는 주로 솔로몬 제도, 투발루, 키리바시, 팔라우 등 오세아니아 국가에 중점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⁷¹⁾

66)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a)(검색일: 2025.4.3.)

67) Andrew & Ingrid(2022), pp. 3-10.

68)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b)(검색일: 2025.4.3.)

69)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Environment(검색일: 2025.3.19.)

70) OECD(2024.6.17.)(검색일: 2025.3.18.)

제2절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1. 대외전략 및 국정과제

1) 윤석열 정부

(1) 인도-태평양 전략

2025년 2월 기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로 정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대외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은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다.⁷²⁾

인태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고, 포용, 신뢰, 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포용’ 원칙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이 열려있다는 것이며, ‘신뢰’ 원칙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혜’ 원칙은 파트너 국가들과 성장 및 상호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미이다.⁷³⁾ 중점 추진과제는 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②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③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⑨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 9가지로 구체화된다.⁷⁴⁾ 요약하면, 인태전략은 우리나라의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서 국제사회

71)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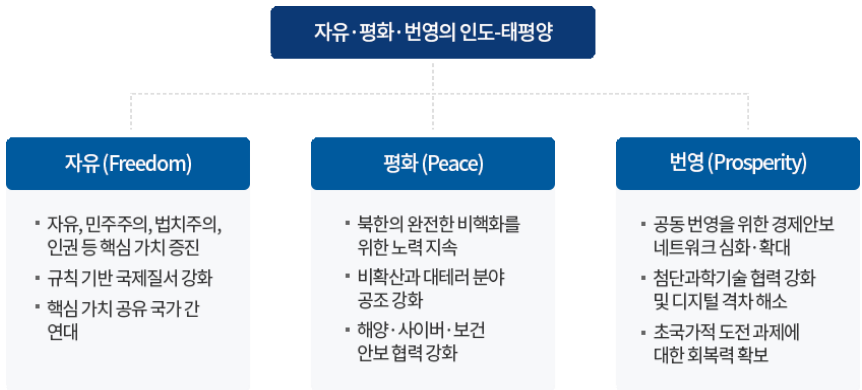
72) 외교부(검색일: 2025.1.23.)

73) 이대우(2023), p. 2.

의 기대에 맞추어 외교 공간을 확장하고, 역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⁵⁾

인태전략⁷⁶⁾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방향은 거버넌스 및 규범 강화, 해양 기반 협력 확대, 해양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협력 심화, 다자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표 2-3>과 같다.

〈그림 2-1〉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조



자료: 외교부(검색일: 2025.1.23.)

74) 대한민국 정부(2022b), p.18

75)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인도-태평양 전략(검색일: 2025.3.23.)

76) 대한민국 정부(2022b),

〈표 2-3〉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구분	관련 내용	ODA 적용 방향
거버넌스 및 규범 강화 (과제 ①)	- 국제해양법(유엔해양법협약, UNCLOS) 준수 기반 해양 관리 체계 구축 -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 참여 - 해양테러 대응과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공조	- 협력국 해양수산 행정 역량 강화 - IUU 어업 단속 기술 전수 - 해양감시 시스템 구축 지원 - 해양 데이터 및 위성 감시 기술 활용 협력국 지원
해양 기반 협력 확대 (과제 ⑤, ⑦, ⑧)	- 기후변화를 포함해 보건의료, 해양수산, 재생 에너지 문제 등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 -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과 해양 협력방안 -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안보, 해양영역 - 인식, 해양경제, 해양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	-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기반 구축 - 스마트양식 및 친환경 수산업 기술 전수 - 해양관광 및 블루이코노미 신산업 육성
해양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과제 ⑦, ⑧)	그린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개발원 조위원회(DAC)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	- 블루카본 연구 및 해양 생태계 복원 지원 - 해양 플라스틱 및 해양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대응형 수산업 지원
해양안보 협력 심화 (과제 ④, ①, ⑧)	-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다자협력 확대 및 정보 공유 필요성 강조 -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참여 확대 및 개도국 해양경찰·해안경비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한미일 협력, 한-아세안 협력, 태평양 도서국 지원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협력국 해양경찰 및 해안경비대 교육 - IUU 어업 방지 기술 지원
다자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과제 ⑧, ①, ④, ⑤)	- ODA 확대 및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강조 - 지역 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 해상 교통로 보호, 해적 퇴치 및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가 긴요	- 다자협력 기반 해양수산 ODA 연계 강화 (협력 프로그램 내 해양수산 개발협력 과제 반영 등) - 태평양 도서국 대상 특화 ODA 기획 및 발굴 - 역내 해양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2b) 참고 저자 재작성

(2)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달성을 위해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국제개발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은 국정목표 5로 규정되는 외교·안보 부문이다. 국정목표 5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이 중 국제개발협력은 ‘⑲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⁷⁷⁾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분석한 윤석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선진국형 ODA로의 전환, 경제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과의 연계, 다자외교 리더십 강화,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라는 네 가지 핵심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의 개발협력 기조에서 벗어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실용적 개발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를 담고 있다.

2) 문재인 정부

(1) 신남방·북방 정책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한국의 외교·경제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중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처음 제시한 對아세안 외교 정책으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 정책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사람 중심

77) 대한민국 정부(2022a), p. 4, 161.

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①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②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기반 구축, ③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⁷⁸⁾

한편,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외교·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전략으로, 일대일로(중국), 신동방정책(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 노력에 대응하여 한국을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북방지역을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책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 공동체이며, 4대 목표로는 ①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 ②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③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④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설정되었다.⁷⁹⁾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사업도 적극 추진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항만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항만 개발 지원, 해운·물류 네트워크 강화, 수산업 협력 확대, 해양 환경 보호 협력 등을 추진했다. 특히, 베트남,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항만 개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북방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산업 및 물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이 전개되었다.

(2)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8)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검색일: 2025.2.13.)

7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3.2.)(검색일: 2025.2.1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524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였다. 이중 국제개발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은 국정목표 5로 규정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해당되는 국정전략은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이다.⁸⁰⁾

문재인 정부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외교를 통해 경제협력 다변화,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체계적 개발원조 추진을 강조하였다. 인도 등 신흥경제권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공동위원회 및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ODA를 활용하여 국익 증진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자발적 감축 공약을 준비하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개발협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체계적 개발원조 추진을 위해 유·무상 원조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협력위원회 및 관련 기구를 활용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글로벌 보건 협력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 국제개발협력 정책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년,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이 되면서 제정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8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7.7.24.)(검색일: 2025.3.15.)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수립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⁸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또한, 달성 목표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⁸²⁾

개발협력 추진에 있어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동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제7조),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5년마다 심사·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제11, 14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및 역할(제12, 13조), 평가(제16조), 통계(제21조), 점검 및 관리(제2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⁸³⁾

8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

82) 위의 법, 제3조

83) 위의 법, 제6-7조, 제11-14조, 제16조, 제21-22조

한편, 동법은 제15조에서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⁸⁴⁾ 중점협력국이란 공여국이 특정 원조 대상 국가/지역을 우선 대상 국가/지역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국가/지역에 맞춰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원조 방식이다. 중점협력국을 설정하면 제한된 자원을 대상 국가와 개발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⁸⁵⁾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27개국의 ODA 중점협력국을 설정하고 있으며, 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앙아시아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중점협력국별로 지원 목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여 양국 간 중장기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ODA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⁸⁶⁾

2)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⁸⁷⁾ 2025년 기준 적용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이하 ‘제3차 기본계획’)으로, 2025년 종료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16-2020)」(이하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ODA 재원 확대와 양자·다자, 유·무상 비율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원 비중 증가와 최저개발국 대상 무상원조 확대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도적 지원 강화, 한국형 개발

84) 위의 법, 제15조

85) 김세원·김종섭·이영섭(2013), p. 30.

86) ODA Korea, 주요정책문서 국가협력전략(CPS)(검색일: 2024.12.5.)

87) 위의 법, 제11조

협력 콘텐츠 지원, 코로나19 대응, 통합적 ODA 기반 마련, 국제협력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ODA/GNI 비율과 비구속성 비율이 목표에 미달하였으며, 전략적 기획과 성과 관리가 부족하고, 범국가적 협력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⁸⁸⁾

이러한 긍정 성과와 한계 및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정책 방향을 “지속가능개발의제 5P⁸⁹⁾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국익 창출, 초국경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⁹⁰⁾

88) 관계부처 합동(2021.1.20.), pp. 2-4.

89) People(사람), Peace(평화), Prosperity(번영), Planet(지구), Partnership(파트너십)

90) 관계부처 합동(2021.1.20.), pp. 7-8.

〈그림 2-2〉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20.), p. 8.

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1)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법적 근거

해양수산부가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9년 8월에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개정(추가)되었다. 추가된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⁹¹⁾ 이를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없으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의 국제협력 부분에서 국제개발협력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해당 계획은 다음 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기본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원양산업 발전법」, 「항로표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계획들을 통해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 법정계획은 해당 분야별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과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9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 2, ① 및 ②

2) 해양수산 국가 종합 계획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⁹²⁾ 해당 기본계획은 ‘2030 해양 한국 비전: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①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②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③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②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③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④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⑤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⑥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등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전략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의 핵심 방향을 담고 있다.⁹³⁾

이 전략에서는 “K-해양수산”을 기반으로 특정 국가에 집중된 협력 구조를 다변화하고,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ODA 사업을 통해 한국의 해양수산 발전 경험을 전파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해양영토 보호 강화를 위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동북아 수산자원 및 해양동물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국제해사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 어젠다를 주도하는 한편, 국제어업관리 및 수산규범 수립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개년 계획(UN Ocean Decade) 참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도 추진 방향으로 설정되었다.⁹⁴⁾

다시 말해, 해양수산부는 ODA 사업을 활용하여 해운·항만, 수산, 해양

92) 대한민국 정부(2021.1.), pp. i-ii.

93) 위의 문서, pp. 95-98.

94) 위의 문서, pp. 183-185.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세안 및 남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해운·항만 ODA 사업을 확대하며, 수산 분야에서는 다자원조 사업과 타 산업과 연계된 ODA 사업을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해양공간계획 협력사업과 같은 신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⁹⁵⁾

3)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추진방향(K-OEI)

개발도상국 중 상당수가 연안국이며, 이들 국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또한,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와 국제적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ODA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국제협력 비전인 K-OEI(Korea-Ocean Economy Initiative)를 수립하였다. K-OEI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발굴 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의 부합도 제고를 위해 「제3차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ODA 추진전략인 과학기술·ICT ODA와 그린 ODA를 연계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K-OEI는 연안 도서국을 중심으로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Blue Economy 관련 국제 논의를 선도하기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비전이다. K-OEI는 <표 2-4>와 같이 ① 기후 위기 대응, ②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③ 해양환경 보전, ④ 해양수산 인재 양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⁹⁶⁾

95) 대한민국 정부(2021.1.), pp. 185-187.

96) 해양수산부(2024), K-Ocean Economy Initiative(K-OEI) 발표자료

〈표 2-4〉 K-OEI 4대 추진전략과 세부 내용

추진전략	내용
기후위기 대응	• 녹색 해운으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지원 • 해양기후변화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공동연구, 학술 교류 및 정책 개발 추진 • 해양 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을 추가 조성하여 탄소 흡수를 확대하고, 파트너 국가의 블루카본 관리 역량을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 항만국 조치협정(PSMA)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과 IUU 어업 근절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예방 • 여촌특화개발사업을 통한 협력국 어촌의 자가 발전 기반 마련 • 고부가가치 어종 지정과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 및 양식시설 지원을 통해 수산 양식 산업 국가 역량 제고
해양환경 보전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협업하여 발생원별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 개발 및 관련 교육 실시 •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관광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운영을 위한 지침 개발 • 체계적인 해양 관리·이용을 위해 해역별 공간계획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해양수산 인재 양성	• 국내 수산 관련 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IUU 어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국제 읍서버 양성 지원 • 여성 해기인력 양성, 해기인력 관계자 초청연수 등 추진

자료: 해양수산부(2024), K-Ocean Economy Initiative(K-OEI) 발표자료

4) 해양수산 주요 법정계획

(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① 생산량 425.7만 톤, ② 수산 식품 산업 규모 13.8조 원, ③ 어가소득 60,593천 원, ④ 수산물 수출 30억 불, ⑤ 어업 부가가치 5.1조 원 등을 제시하며 10대 전략, 30대 추진과제, 90대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⁹⁷⁾

이 계획에서는 수산 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 ODA 전담 기관을 선정하여 ODA 사업 관리 및 조정 기능을 위임하고, 수산 ODA 사업 플랫폼 구축 및 유관기관 간 ODA 사업 발굴의 장을 마련하며, 수산 ODA 사업의 융합화 및 대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생산 부문 에너지 절감 지원, 친환경 어선 건조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해양수산 ODA와 해외 조업 기반 확보 연계를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⁹⁸⁾

(2)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21~2025)

「해운법」에 따른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21~2025)」은 ‘글로벌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① 해운 매출액 증가, ②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증가, ③ 지배선대 증가, ④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 ⑤ 외항선 친환경 비중 상승, ⑥ 자율운항선박 시장점유율 상승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국적선사 경영혁신, ②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③ 디지털·그린 역량 확대, ④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3대 중점과제와 47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⁹⁹⁾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체계를 확충하며, 물류 부문의 교육·연수 ODA 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국가와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¹⁰⁰⁾

(3)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2019~2028)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2019~

97) 해양수산부(2021.3.), p. 195.

98) 위의 문서, pp. 218~222.

9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2021), pp. 25~26.

100) 위의 문서, pp. 56~57.

2028)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으로 글로벌 성장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선박관리 3,000척과 국적선원 관리 11,000명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② 선박관리 산업 역량강화, ③ 선박관리 산업 신규 시장 개척, ④ 선박관리 산업 제도적 지원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9개 추진과제와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¹⁰¹⁾

세부적으로는 국적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외국인 선원 인력 공급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선박관리업 육성기금(가칭)을 조성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선원 공급국과 MOU를 체결하여 해외 현지 훈련센터 및 선원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선원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ODA 사업을 활용하여 교육 장비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¹⁰²⁾

(4)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

「해사안전법」에 따른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를 30% 저감하고 인명피해를 3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③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 중심 인전관리체계 구축, ④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⑤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1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하였다.¹⁰³⁾

101) 해양수산부(2019.12.), p. 10.

102) 위의 문서, p. 16.

103) 해양수산부(2022), p. 121.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위상 확립을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하며,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하여 국제 해사 분야에서 중심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자 및 다자 회의를 통한 국제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세계해사대학(WMU: World Maritime University)과 국제해사법대학원(IMLI: IMO International Maritime Law Institute) 등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산하 대학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을 제공하여 국제 해사 분야 인재 양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협력 ODA 사업의 모범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해사 분야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해적 피해 예방과 대륙별 해적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글로벌 해상안전 강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¹⁰⁴⁾

(5)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은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과 생태 관리, ② 쾌적한 해양환경의 조성 및 이용도 증진, ③ 친환경적 해양 경제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청정한 물환경, ② 건강한 생태계, ③ 쾌적한 해양생활, ④ 친환경 해양이용, ⑤ 녹색 해양산업, ⑥ 기후 대응과 공간계획 등 6대 전략을 수립하고, 10대 대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¹⁰⁵⁾

특히, 해양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환경 국제협력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해양환경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104) 위의 문서, pp. 122~126.

105) 해양수산부(2021.1.), p. 38.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해양 기후변화 등 국제적 해양환경 이슈의 증가와 협력사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의를 통한 공동사업 발굴 및 국제규범 제정 선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국내 해양환경 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전수하는 ‘K-클린오션 ODA’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¹⁰⁶⁾

(6)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근거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다 함께 누리는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60% 감축 및 2050년 제로화 달성이며, 둘째는 2030년까지 해양오염퇴적물 현존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분야는 5개 추진전략과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는 5대 추진전략과 13대 추진과제를 각각 도출하였다.¹⁰⁷⁾

해양 플라스틱 문제 등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해양폐기물 국제협력 유관기관 대응팀을 구성·운영하며,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관련 ODA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협력 모델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남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¹⁰⁸⁾

106) 위의 문서, pp. 138-142.

107) 관계부처 합동(2021.5.), p. 47, 123.

108) 위의 문서, pp. 106-109.

(7)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지속가능한 원양산업 모범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원양어업 생산금액 증가, ② 원양산업 ODA 비중 증가, ③ MSC 인증기업 증가, ④ 오피버 육성(누적) 증가 등 4대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①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② 안정적인 선원수급 체계 구축, ③ 해외 어장 확보 전략 강화, ④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라는 4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¹⁰⁹⁾

특히,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선원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원양어선원 송출국을 대상으로 노후 원양어선을 훈련선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인 원양어선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양어업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어업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¹¹⁰⁾

또한, 연안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해외 어장 확보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등 주요 어장 보유국을 대상으로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첨단 어업 기술 이전 등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DA 사업으로 조성된 어항 및 냉동창고 등 인프라와 제공된 기자재, 현지 인력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기업의 해외 투자로 연계함으로써, 국내 원양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어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¹¹¹⁾

109)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 p. 7.

110) 위의 문서, p. 12.

111) 위의 문서, pp. 13-17.

(8)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25-2029)

「항로표지법」에 근거한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25-2029)」은 ‘초연결 항행정보로 안전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① 항행정보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② 항로표지 서비스 운영률 향상, ③ 세계 최초 국제표준 항로표지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 ④ 연간 등대문화이용자 증가라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① 기술 및 인프라 확대, ② 신항행정보 서비스 확대, ③ 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 강화, ④ 등대문화 확산이라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6개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¹¹²⁾

특히,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항로표지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출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ODA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¹¹³⁾

또한, 「항로표지 ODA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륙별 거점국 및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항로표지 ODA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항로표지 개량·신설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시 국내 기술 및 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대문화유산 보존관리 ODA를 통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이사국으로서 등대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차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¹¹⁴⁾

112)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2024.10.), p. 10.

113) 위의 문서, p. 22.

114) 위의 문서, p. 23.

<표 2-5> 주요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책 추진과제

법령	법정계획	국제협력 정책 추진과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2021~2030)	“K-해양수산”으로 국제사회 상생 견인 - 굳건한 해양안보로 해양영토 수호 - 해양협력으로 동북아 번영에 기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021~2025)	- 국제규범 이행 - 국제사회 공조 확대 - 수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해운법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2021~2025)	해외 진출 지원체계 확충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2019~2028)	선원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해사안전법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2022~2026)	-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 추진 - WMU 등 장차 지원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협력국 국제해사분야 기술협력 및 지원 - 국제협력 기반 해적피해 예방 역량강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	- 해양환경 국제협력 추진체계 고도화 - 해양환경 분야별 국제협력 강화 - 아세안 등 해양환경 역량강화 지원 (K-클린오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2021~2030)	- 국제기구·다자간 회의 대응 강화 - 아세안 대상 해양폐기물 관리 협력 강화
원양산업발전법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2024~2028)	- 외국인 원양어선원 보호·관리 - 연안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원양기업 경쟁력 강화
항로표지법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 (2025~2029)	- 항로표지 국제협력 및 산업 육성 지원 - 항로표지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ODA 추진 - 등대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1.1.); 해양수산부(2021.3.);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2021); 해양수산부(2019.12.); 해양수산부(2022); 해양수산부(2021.1.); 관계부처 합동(2021.5.);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2024.10.)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제3절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1. 해양수산 ODA 일반 현황

2022년 해양 경제 관련 공적개발원조(ODA)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나,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해양 보호 및 해양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은 22% 증가하여 해양 경제 ODA 총액의 69%를 차지했는데, 이는 2021년의 81%에서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2021~2022년 동안 해양 관련 ODA의 약 3/4은 해운, 해양 보호, 수산업 세 개 핵심 부문에 집중되었다.¹¹⁵⁾

2021~2022년 기간 동안 아시아는 연간 9억 7,700만 달러를 지원받아 해양 경제 ODA의 최대 수혜 지역이었다. 그 뒤를 아프리카(연간 8억 4,800만 달러)와 미주(연간 4억 100만 달러)가 이으며, 이들이 상위 세 지역을 구성했다. 해양 경제 ODA는 주로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 31%)과 하위 중소득국(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y, 30%)에 집중되었으며, 상위 중소득국(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y)은 16%를 차지했고, 나머지 23%는 특정 소득 그룹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소도서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에 대한 해양 경제 ODA는 2019~2020년 연평균 3억 5,000만 달러에서 2021~2022년 연평균 4억 3,7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기간 SIDS에 대한 전체 ODA 공여액의 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특히 SIDS를 대상으로 한 해양 경제 ODA의 대부분(91%)은 해양 보호 또는 해양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에 활용되었다.¹¹⁶⁾

115) OECD(2024.6.5.)(검색일: 2025.1.23.), p. 3.

116) OECD(2024.6.5.)(검색일: 2025.1.23.), p. 4.

국가별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 협력 수요는 상이하다. 우리 정부는 ODA 협력국에 대한 지원 목표, 중점협력 분야, 지원계획 등을 차별적으로 설정해서 ODA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ODA 중점협력국은 27개국으로 권역별로는 아시아 12개국¹¹⁷⁾, 아프리카 7개국¹¹⁸⁾, 중남미 4개국¹¹⁹⁾, 중앙아시아 4개국¹²⁰⁾이다.¹²¹⁾

〈그림 2-3〉 ODA 수원국 순위(2021~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방글라데시 212.17	1	에티오피아 124.99	1	방글라데시 174.87
2	필리핀 130.41	2	캄보디아 124.53	2	베트남 110.64
3	캄보디아 113.66	3	베트남 109.83	3	캄보디아 108.20
4	베트남 97.65	4	필리핀 101.58	4	인도네시아 104.87
5	에티오피아 82.94	5	방글라데시 87.89	5	필리핀 91.55
6	이집트 64.39	6	우크라이나 78.51	6	에티오피아 78.29
7	라오스 62.26	7	라오스 74.89	7	라오스 66.25
8	인도네시아 62.13	8	인도네시아 68.60	8	몽골 63.36
9	콜롬비아 60.77	9	몽골 64.95	9	엘살바도르 53.16
10	탄자니아 54.72	10	탄자니아 58.89	10	우크라이나 53.00

자료: ODA Korea(검색일: 2025.1.16.)

2024년 기준 해양수산 ODA 수원국은 아시아 6개국, 태평양 도서국 8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1개국, 유럽 1개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²⁾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나, 최근 에티오피아 등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며 ODA 지원 대상국이 다변화되는 추세다.

117)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118)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119)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120)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21) ODA Korea, 주요정책문서 국가협력전략(CPS)(검색일: 2025.12.5.)

122)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76-177.

해양수산 ODA의 세부 사업은 어로어획 모니터링, 양식 기술 이전, 인프라 구축, 국제조약 이행, 전문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며, 각 국가의 특수한 수요에 맞춰 사업 내용이 차별화된다. 예컨대, 가뭄이나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연안국과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중심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거나 기온이 높아 양식이 어려운 사막·열대 지역, 수산업 의존도가 높으나 IUU 어업이나 남획으로 자원이 감소하는 국가에는 스마트 수산양식 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친환경 기술 이전,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자원 관리 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어촌 마을의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소규모 어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과 양식 기술 보급, 관광 활성화를 연계한 어촌 특화 개발 사업이 실시된다.¹²³⁾

수산업은 자연을 대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1차 산업으로, 수산물 생산은 여전히 자연환경과 어병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산업은 각국의 산업 발전 수준에 따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인 동시에, 환경적 리스크가 큰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산물 생산뿐 아니라 가공, 어촌 개발, 어병 관리 등 전체 가치사슬을 고려한 통합적 사업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예방·처리 문제가 국제적인 해양오염 현안으로 논의됨에 따라,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와 협력하여 세계 최대 해양쓰레기 발생 지역인 필리핀, 동티모르 등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 생애주기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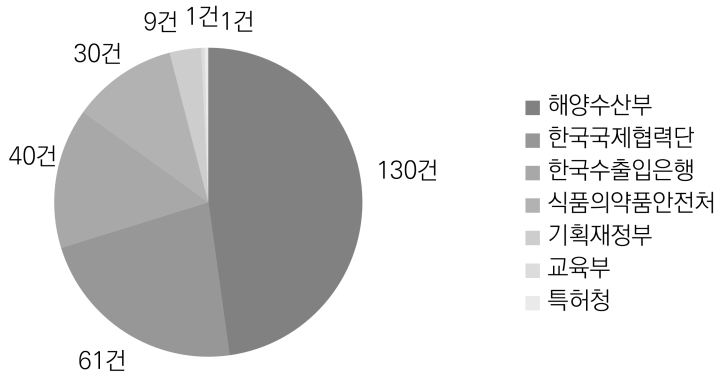
123) 해양수산부(2023.2.1.)(검색일: 2025.1.7.)

124) 해양수산부(2023.2.1.)(검색일: 2025.1.7.)

2. 해양수산 ODA 최근 4개년 지원 현황¹²⁵⁾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 사업은 중앙정부, 공공기관,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가장 많은 사업은 중앙정부 부처, 특히 해양수산부가 주도하고 있다.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수산 ODA 사업을 수행한 주요 정부 부처의 총사업 건수는 272건에 달한다. 기관별 사업 건수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130건)가 가장 많고, 이어서 한국국제협력단(61건), 한국수출입은행(40건), 식품의약품안전처(30건) 순으로 지원 사업이 많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4> 해양수산 ODA 주요 시행 기관(정부부처)(2019~202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해양수산부의 ODA 예산은 2023년 287.3억 원에서 2024년 428.9억 원으로 약 67%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ODA 예산 내에서 해양수산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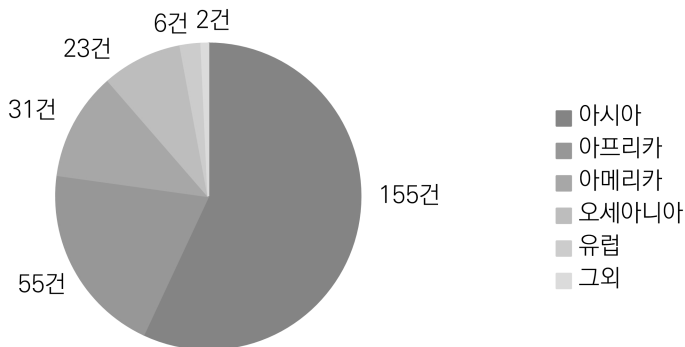
1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126) 관계부처 합동(2024a), p. 39, 169.

사업 지원의 자금 형태를 보면, 무상원조 및 출연·분담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약 85.3%, 차관 등의 유상원조가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로는 프로젝트형 사업(82%)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연수사업(10.9%), 프로그램(6.2%), 그리고 기타 기술협력(0.9%) 순으로 시행되고 있었다.¹²⁷⁾

대륙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이 전체 272건의 사업 중 아시아 지역이 15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아프리카(55건), 아메리카(31건), 오세아니아(23건), 유럽(6건)이 따르고 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여타 ODA 사업과 차별되는 해양수산 ODA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고려된다.

〈그림 2-5〉 해양수산 ODA 사업 대륙별 수원국 분포율(2019~202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표 2-6〉은 2019~202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사업의 주요 수원국과 사업 수를 정리한 자료이다. 총 272건의 사업 중 중점협력

127) 관계부처 합동(2024a), p. 165.

국 대상 사업이 117건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수가 많은 상위 국가들은 대부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이며, 이들은 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중점협력국이 아닌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연안국가에서도 해양수산 ODA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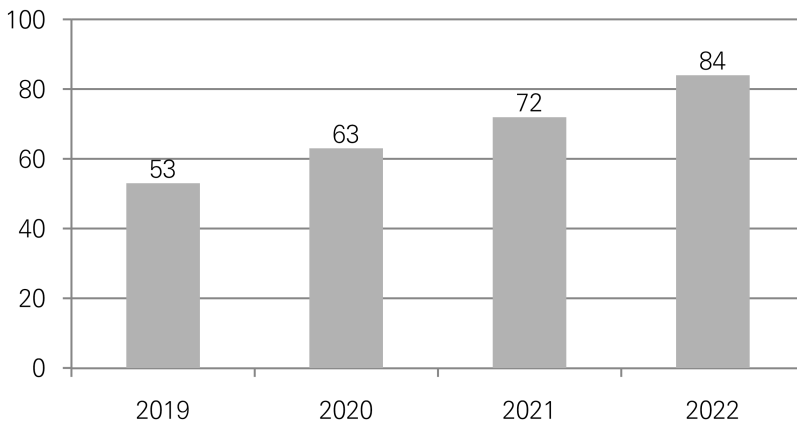
〈표 2-6〉 해양수산 ODA 사업 수원국 통계(2019~2022)

국가명	중점협력국 대상 여부 (2025년도 기준)	해당 수원국 총사업 수	국가명	중점협력국 대상 여부 (2025년도 기준)	해당 수원국 총사업 수
인도네시아	O	12	파키스탄	O	4
방글라데시	O	11	말레이시아	X	4
베트남	O	11	페루	O	4
필리핀	O	11	콜롬비아	O	4
세네갈	O	10	팔라우	X	4
스리랑카	O	9	인도	O	4
캄보디아	O	8	콩고민주공화국	X	3
사모아	X	7	브라질	X	3
라오스	O	6	과테말라	X	3
조지아	X	6	튀르키예	X	3
피지	X	5	나이지리아	X	3
케냐	X	5	미얀마	O	3
가나	O	5	몽골	O	3
태국	X	5	아제르바이잔	X	3
기타 국가 및 다국가		113			
합계			27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해양수산 ODA 사업 수는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해양 정책 및 항만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 이후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초청연수’를 포함하여 해양법 및 국제 해양 거버넌스 교육 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활동도 늘어났다. 2021~2022년에는 해양 행정 및 정책 개발, 해양수산업 및 식품 안전 관련 정책 협력, 해양법 및 국제법 관련 프로그램 지속 운영 등을 통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2-6> 해양수산 ODA 연도별 사업 수 증감 현황(2019~202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2025년도 해양수산 분야 ODA 사업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국내 외국인 해기사 공급 기여 및 해운 부분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한 해운·해사 역량강화, 해양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관리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어촌 특화 개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수산업 발전 등 세부 분야별 다양한 신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다.¹²⁸⁾

3. 해양수산부 ODA 최근 5개년 지원 현황¹²⁹⁾

최근 5년 동안의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사업 건수, 예산, 집행액, 수원국 수 등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7>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해양수산부 ODA 사업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표 2-7> 해양수산부 ODA 사업 5개년 변화 추이(2019~2023)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 건수(건)	19	23	25	20	30
예산(백만 원)	10,913	15,581	11,862	14,358	28,730
집행액(백만 원)	7,444	10,551	9,640	11,207	21,480
수원국 수(개국)	17	13	19	1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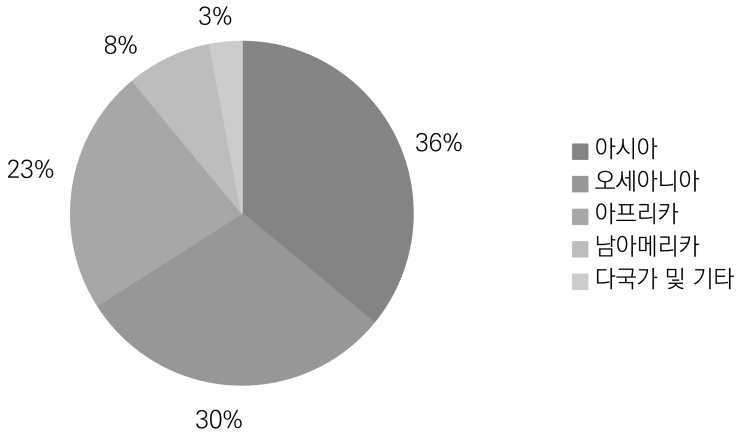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해양수산부 ODA 사업 건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58% 증가하였고, 예산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수원국 수는 17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되어 사업의 지리적 대상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수원국 분포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다음으로 오세아니아(30%), 아프리카(23%), 남아메리카(8%) 그리고 다국가 및 기타(3%)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128)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69-172.

1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c), 관계부처 합동 2019-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데이터셋 (내부자료)

〈그림 2-7〉 해양수산부 ODA 사업 대륙별 수원국 분포율(2019~2023)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지난 2019~2023년의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ODA 사업 총 117개를 대상으로 한 주요 지원 대상국은 베트남(17건), 인도네시아(10건), 세네갈(7건)로 모두 중점협력국에 속한다. 다만,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이 포함된 태평양 도서국 대상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며, 다자협력사업 수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의 상당수가 다국가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4. K-OEI 기반 해양수산부 ODA 사업 추진 현황

2024년 5월, 해양수산부는 해양, 첨단기술, 인재 양성을 세 가지 핵심축으로 하여 한국과 협력국들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비전인 K-OEI를 발표하였다. K-OEI가 공식적으로 제안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이미 K-OEI의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며 확대되어 왔다.

주목할 점은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 관련 사업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인재 양성 분야도 꾸준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것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양수산부의 5개년 ODA 사업들을 추진전략별 및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분석은 각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K-OEI 추진전략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이 두 가지 이상의 추진전략을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표 2-8〉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연도별 K-OEI 추진전략 분석(2019~2023)

K-OEI 추진전략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후위기 대응	1	1	1	2	3
지속가능한 수산업	9	11	8	7	10
해양환경 보전	6	6	9	7	9
인재 양성	2	4	5	3	5
기타	1	1	2	1	3
합계	19	23	25	20	3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먼저,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명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 키워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해양 산성화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관련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다수이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해양 기후변화 및 기후 관련 데이터 수집·관측과 같은 과학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응 역량강화가 중심이며 기후변화 자체를 중점으로 두는 사업 수가 적어, 향후 탄소 중립 및 해양 탄소흡수원(블루카본)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대다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주로 연안, 수산인프라,

모델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여 특정 국가에서 성공적인 수산개발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안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모델 개발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수산업 강국으로서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그린, 스마트, 친환경, 디지털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ODA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혁신 기술의 접목이 점차 중요시되고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해양환경 보전 관련 사업들은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 해양, 연안, 구축이 주된 키워드로 등장한 것을 보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기구 및 특정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해양환경 보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해양 쓰레기 관리, 해양보호구역 조성 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관련 사업에서는 초청연수와 같은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이며, 연안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해사, 수산, 선원 교육 등의 전문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향후 여성 해양 전문가 양성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확대 등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9〉 해양수산부 ODA 사업 수원국 통계(2019~2023)

국가명	중점협력국 대상 여부(2025년도 기준)	해당 수원국 총사업 수
베트남	O	17
인도네시아	O	10
세네갈	O	7
키리바시	X	5
조지아	X	4
가나	O	4
투발루	X	3
콜롬비아	O	3
피지	X	3
캄보디아	O	3
키르기스스탄	O	2
페루	O	2
미크로네시아 연방	X	2
기타 국가 및 다국가	-	52
합계		117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ODA 사업을 연도별 주요 키워드와 사업 유형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요 흐름과 변화 방향을 확인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연안 개발 및 수산업 기반 구축이 사업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연안 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기술 지원을 통한 수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증가했으며, 연안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해양 인력 양성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기부터 2023년까지 IUCN, FAO, IMO, PEMSEA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사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

했다는 것이다.

2023년에는 해양 인력 양성 및 실습 프로그램 중심 사업이 크게 늘어났는데, 특히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운 및 해사 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는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2-10>은 사업 분야별로 해당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ODA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0> 해양수산부 ODA 사업 분야별 변화 추이(2019~2023)

분야	2019~2020년	2021~2022년	2023년
수산업 및 연안 개발	연안기반 시설 구축, 수산업 발전 위한 기술 지원 사업 중심	지속가능한 어업 및 환경 보호 강화	해양 디지털 및 해사 교육 사업 증가
해양환경 및 기후 변화	-	해양 생태계 관련 국제기구 협력 강화	해양 플라스틱 저감 및 디지털 해사 분야로 확장
해양 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 연구, 기술 이전 중심	연안 도서국 중심 해양 인력 양성 사업 확대	승선 실습, 국제 교육 프로그램 등 해운 및 해사 인력 양성 집중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이러한 연도별 변화로 미루어보아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지원에서 점차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와 인력 양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점차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등 글로벌 해양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환경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절 소결

국제사회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BBNJ 협약 등 주요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OECD DAC는 공여국의 개발협력 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ODA의 기준과 규범을 설정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UN SDGs는 17개 목표를 통해 글로벌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중 SDG 14는 해양오염 방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해양 생태계 보호, 연안해역 관리, 개발도상국의 해양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23년 채택된 BBNJ 협약은 공해 및 심해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해양수산 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여국들은 자국의 국제개발협력 우선순위와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해양수산 분야 ODA를 특화하고 있으며, SDGs 이행,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보전, IUU 어업 대응, 해양 플라스틱 저감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주요국의 사례에서는 다자기구와의 연계, 수원국 협력 프로그램의 제도화, 전략적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은 최근 5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산 분야를 넘어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K-OEI의 발표를 계기로, 해양수산 ODA의 전략적 방향성과 부처 차원의 정책 메시지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해양수산부 중심의 단일 부처 사업 구조, 부처 간 연계 부족, 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 미흡 등은 제도적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규범과 공여국 전략, 우리나라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은 다음의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와 전략 고도화가 요구된다.

첫째, SDGs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해양관리 등 글로벌 의제와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의 국제적 위상과 정책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K-OEI 전략을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 체계를 정립하며, 전략별 성과지표를 설정해 기획-이행-평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해양환경 보호, IUU 어업 대응, 해양 플라스틱 저감, 블루카본 등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독자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ODA를 단일 사업 형태에서 정책 연계형 사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자협력, 민관협력 등 다양한 주체 간 연계를 강화하여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 학계,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기반 협력 모델을 통해 다층적인 협력 구조를 확대할 시점이다.

0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수요 분석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조건과 유형

1. 국제개발협력의 대상과 조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는 개발 격차와 빈부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협력 대상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 OECD DAC는 3년마다 ODA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하며, 이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만이 ODA 지원 대상이 된다.¹³⁰⁾

또한, 아무리 개발도상국이 협력 대상이더라도 개발 및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자원이 사용되지 않으면 ODA로 인정받을 수 없다. OD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¹³¹⁾

130) OECD(검색일: 2025.1.18.)

131)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검색일: 2025.1.18.)

〈표 3-1〉 ODA 인정 조건

조건	세부 내용
공적기관이 제공한 원조여야 함	개인, NGO, 민간기업이 제공한 원조는 ODA에 포함되지 않음
OECD DAC가 지정한 협력대상국(수원국)에 대한 원조여야 함	DAC 리스트에 없는 국가에 대한 원조는 ODA로 인정되지 않음
수원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함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에서 제외됨
차관의 경우, 소득 그룹별 증여율 기준을 충족해야 함	특정 증여율(Grant Element) 미만의 차관은 ODA로 인정되지 않음

자료: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검색일: 2025.1.18.)

2. 국제개발협력의 유형

ODA는 지원금의 전달 경로에 따라 양자원조(Bilateral Aid)와 다자원조(Multilateral Aid)로 구분된다. 양자원조는 공여국이 협력국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며, 다자원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여부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Grant Aid)와 상환 의무가 있는 양허성 차관인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s)로 구분된다.¹³²⁾

〈표 3-2〉 ODA 지원 형태

구분		주관기관	총괄
양자원조 (Bilateral Aid)	유상원조 (상환 의무 있음, 상업차관보다 유리한 조건)	기획재정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조정실)
	무상원조 (상환 의무 없음)	외교부	
다자원조 (Multilateral Aid)	국제금융기구	기획재정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자료: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검색일: 2025.1.18.)

132)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검색일: 2025.1.18.)

제2절 다자협력 수요 분석

1. 수산 분야

1) 국제식량농업기구(FAO)¹³³⁾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수산 및 양식 부문은 전 세계적인 수산식품 시스템의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 및 파트너와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 영양 상태 개선, 환경 보호 및 전반적인 인간 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특히 빈곤과 영양 부족에 취약한 연안 지역사회에 생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¹³⁴⁾ FAO는 특히 ‘Blue Transformation’ 전략을 통하여 수산 식품 시스템을 통합하고, 이를 글로벌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정책 옹호, 과학 연구 및 역량강화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양식업, 그리고 가치 사슬 개발 등의 활동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간 ODA 협력 측면에서 FAO는 기술 이전, 관리 역량 구축 및 지속가능한 수산 관리를 위한 국제 기준 설정을 주도하며, 수산 및 양식 분야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지원한다. 이 활동은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의 개선, 생태계의 건강 유지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도 연계되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 제공에도 중요한 국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AO는 ‘Blue Transform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133)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Blue Transformation(검색일: 2025.2.5.)

134)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검색일: 2025.2.6.)

(BPI: Blue Port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 BPI는 어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인프라를 개선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연안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¹³⁵⁾

해당 이니셔티브는 ① 사회 복지 증진, ② 환경 보전, ③ 시장 중심 혁신을 세 가지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과 워크숍을 통해 2013년에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특히, 폐기물 관리, 교육, 양성 평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와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¹³⁶⁾

2) FAO-IMO-ILO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¹³⁷⁾

FAO-IMO-ILO 공동작업반(JWG: Joint Working Group)은 FAO, IMO, ILO가 협력하여 해양 및 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노동 기준을 강화하며,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협력체이다. 이 작업반은 1999년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19년 ILO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JWG는 IUU 어업 방지, 해상 안전 및 보안 강화, 어업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보장 등의 주제를 다루며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어업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어선원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각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5차 회의는 2024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본 회의에서 WMU는 CAPFISH 프로젝트¹³⁸⁾의 성과를 소개하며 학제 간 역량강화를 강조했다.

135) FAO, Blue Port Initiative(검색일: 2025.5.9.)

136) Molares, Carballo, & Aragón(2023), pp. 4-32.

137) FAO, FAO-IMO-ILO ad hoc Joint Working Group on IUU fishing and related matters (검색일: 2025.2.7.)

2. 해운 및 항만 분야

1) 국제해사기구(IMO)¹³⁹⁾

국제해사기구(IMO)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IMO의 활동은 해운 안전, 환경 보호, 항만 인프라 개선, 해사 교육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MO는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항만 개발,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 해운 안전 및 역량강화, 그리고 국제협력과 법적·제도적 지원이라는 네 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IMO는 개발도상국의 항만 현대화와 친환경 항만 구축을 지원하며, 디지털 해운 시스템과 스마트 항만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해운 물류망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해운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친환경 연료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IMO 2020 규정 이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환경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¹⁴⁰⁾

해운 안전 강화를 위해 IMO는 해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해운 안전 기준의 이행을 위한 법적·기술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선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에서의 인적자원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IMO는 해운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고, 해양법 및 항만 운영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개발 및

138) CAPFISH(A capacity-building project to progres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combat IUU fishing) 프로젝트는 2021년 7월에 시작된 역량강화 사업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을 목표로 함.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해사대학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협력하여 추진됨. 2025년 기준 ODA 사업 형태로 지속 추진 중임

139) IMO(검색일: 2025.2.6.)

140) IMO(검색일: 2025.2.5.)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자 협력을 통한 해운 및 항만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노동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다자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ILO는 특히 해상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어선원노동협약(C.188) 및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통해 국제적인 어선원의 노동 표준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⁴¹⁾

ILO는 해양 노동자의 권익 보호, 어업 및 해운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 불법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발전 등을 목표로 해양수산 ODA 부문에서 다양한 다자협력사업을 기획·수행하고 있다.¹⁴²⁾ 앞으로도 ILO는 해양산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국제협약 준수 및 이행 지원, 해양산업 내 노동자들의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해양산업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연구 지원 등의 관련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141) ILO(검색일: 2025.2.7.)

142) ILO(검색일: 2025.4.12.)

3) 세계해사대학(WMU)

세계해사대학(WMU: World Maritime University)은 IMO 산하의 고등교육기관으로, 해사 및 해양 관련 교육을 통해 글로벌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MU는 특히 해사 분야의 정책 결정자, 관리자 및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고급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사회에서 해운 및 해양 분야의 기술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¹⁴³⁾

WMU는 개발도상국의 해사 역량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IMO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 정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IUU 어업 분야에 대해서도 역량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 중 하나는 우리나라와 2024년부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OD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계해사대학(WMU) 연안개도국 IUU 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¹⁴⁴⁾이다. 이 사업은 연안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여름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효과적인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¹⁴⁵⁾

WMU는 향후에도 해양 정책, 해운 경영, 해사 법률, 항만 운영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 지원, 실무 중심의 단기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혁신적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제 해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43) WMU(검색일: 2025.2.7.)

144) CAPFISH(A capacity-building project to progres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combat IUU fishing) 프로젝트

145)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b), pp. 1-6.

3. 해양 환경 및 연안 생태계 분야

1)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연안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IUCN은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MPAs) 설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IUCN은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여 해양 생태계 관리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IUCN의 ODA 다자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해양 보호구역 설정 지원, 해양 생태계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다. 특히, IUCN은 개발도상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해양 보호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¹⁴⁶⁾

2)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¹⁴⁷⁾로, 해양수산 부문에서는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Blue Economy)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해지고 있는 연안국 및 도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양 기반 기후 행동(Ocean-Based Climate Actions), 블루카본(Blue Carbon) 시장 활성화,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해양 재

146) IUCN(검색일: 2025.2.8.)

147) GGGI(검색일: 2025.2.8.)

생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다.¹⁴⁸⁾

3)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는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및 연안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력 체이다. PEMSEA는 해양 오염 저감, 연안 지역 관리(ICM),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 공간 계획(MSP)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가들의 해양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¹⁴⁹⁾

PEMSEA의 다자협력 활동은 연안 도시 개발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모델 구축, 해양 기반 기후변화 완화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PEMSEA는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ODA 사업으로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저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동티모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지속가능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⁵⁰⁾

4. 기타

1) 세계은행(WB)

세계은행(WB)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다양한 ODA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과 해양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다자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¹⁵¹⁾ 그

148) GGGI(2021), pp. 2-8.

149) PEMSEA, What We do(검색일: 2025.2.8.)

150) PEMSEA(2025.1.30.)(검색일: 2025.2.8.)

151) World Bank(2025.4.21.), Blue Economy(검색일: 2025.2.10.)

중에서도 블루 이코노미를 촉진하기 위한 PROBLU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PROBLUE는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다중 기여 신탁 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 오염 방지, 해양 기반 경제 활동, 해양 공간 계획 등의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WB는 이와 관련한 정책 개발, 역량강화, 지식 공유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협력을 촉진하고 있다.¹⁵²⁾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¹⁵³⁾

OECD는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개발과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연구, 정책 권고,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OECD는 ‘Sustainable Ocean for All’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양경제 ODA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래 표는 본 이니셔티브의 주요 네 가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3〉 OECD ‘Sustainable Ocean for All’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구분	주요 활동	내용
1	해양 관련 개발협력에 대한 지침 제공	• 해양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와 전체 개발 협력 생태계 간의 상호 교류, 학습, 조정 촉진
2	해양 개발 자금에 대한 데이터 분석	• 플라스틱 오염 억제를 포함하여 해양 경제를 위한 개발 지원, 민간 자금 동선 추적 및 분석
3	국가 수준 분석 및 정책 자문	•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국가 진단을 통한 국가 해양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제공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권고사항 제공
4	주제별 및 지역별 연구	•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촉진을 위한 정책 문제 및 특정 국가 그룹에 대한 분석 수행

자료: OECD(b), Sustainable Ocean for All(검색일: 2025.2.10.) 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52) World Bank(2022.2.10.)(검색일: 2025.2.10.)

153) OECD(검색일: 2025.2.10.)

제3절 양자협력 수요 분석

1. 아시아

1)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해외투자 규모가 크며, 우리나라와 이미 구축된 협력 빈도가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협력 내용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가공 건설 및 해운물류·해사 분야의 역량강화 육성이 주요하다.¹⁵⁴⁾

동남아시아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권역이다. 특히 아세안은 우리 ODA의 최대 지원 지역이자, 중점협력국도 다수 존재한다. 아시아의 중점협력국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일반협력국은 말레이시아, 태국이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등을 통해 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¹⁵⁵⁾, 중점협력국 6개국은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ODA를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ODA는 아시아 개도국의 식량안보 강화,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수산 양식 기술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기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물 부족·고온 등으로 양식이 어려운 사막·열대 지역 등 내수면 국가는 식량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양식 협력사업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 스마트 양식장 조성, 수산

154) 윤일선 외(2017), p. 216.

155) 관계부처 합동(2024b), p. 1.

양식 개발센터 건립 및 연구개발 인력 양성, 해기 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남아시아 해역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역내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및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입원으로 조사되었다.¹⁵⁶⁾ 현재 매년 약 1,100만 메트릭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향후 20년 이내에 그 양이 세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¹⁵⁷⁾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각국은 플라스틱 관련 정책과 주요 산업·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는 행동 계획 및 순환 경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¹⁵⁸⁾ 해양 플라스틱 및 폐어구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어족자원과 해수를 오염시키고, 수산물과 소금 등의 형태로 전 세계 식량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¹⁵⁹⁾ 대응이 시급하다.

World Bank Group에서는 정부와 민간 분야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¹⁶⁰⁾ 아세안 지역해에서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USD 2천만 달러의 지역 기금을 제시했다. 이 기금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 육상 및 해상 기인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연안 경제 및 청색 경제에의 영향으로 어업, 관광, 물류 등 주요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⁶¹⁾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모니터링 및 해양쓰레기 처리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인도네시아 해안쓰레기 관리정책 역

156) Plasticbank(검색일: 2025.1.7.)

157) Pew Charitable Trusts and SYSTEMIQ(2020), p. 9.

158) UNEP(검색일: 2025.1.5.); World Bank(2022.7.22.)(검색일: 2025.1.5.)

159) Alberghini et al.(2022), p. 5.

160) World Bank Group(검색일: 2025.2.3.)

161) World Bank Group(검색일: 2025.2.3.)

량강화 사업(KOICA, 2021~2023)을 추진했으며, 타 공여국·국제기구(국제해사기구 등)와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¹⁶²⁾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¹⁶³⁾은 1990년대부터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간 협력을 도모해 왔다. 의학, 농업, 유전자 등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해양 생명 자원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취약한 생태계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역 협력 강화와 확대를 강조했으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¹⁶⁴⁾

우리나라는 SAARC와 1.5 트랙 회의체인 연례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하며 당면 과제와 해결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년 개최된 회의에서는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¹⁶⁵⁾

필리핀과의 양자협력 수요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설치된 ‘한-필리핀 수산공동위원회’의 논의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는 지속가능한 수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2021년 1차 공동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산 및 양식 분야의 정책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ODA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특히 수산물 무역, 기술 이전과 혁신을 위해 관련 자문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과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기술 개발을 통해 어업 및 양식업과 함께 가공 후처리로 제품 부가가치 창출, 무역 활성화로 양국의 수산 분야 협력 및 글로벌 식품 공급망 연결을 위한 협력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

162) 관계부처 합동(2024b), p. 13.

163)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협력체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8개국을 회원으로 하며, 한국(2006년 가입)을 포함한 9개 옵서버 국가가 활동함(외교부(2014.12.23.), 기타기구정보(검색일: 2025.2.1.))

164) SARRC, Environment, Natural Disasters & Biotechnology(검색일: 2025.2.3.)

165) 외교부(2024.7.4.)(검색일: 2025.2.1.)

다.¹⁶⁶⁾ 2024년 개최된 양국 수산공동위원회에서는, IUU 어업 근절, 해양 플라스틱 저감,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해양교통관리시스템 구축, 해기사 양성 등에 대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어구 보증금제,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 등 한국의 어구 관리 정책도 공유했다.¹⁶⁷⁾

인도네시아와의 경우는 2022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체결한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에서 해양 교통 협력을 위해 스마트 항만 구축 포함 해양 교통 인프라, 해양 교통안전 등에 대한 개발 협력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¹⁶⁸⁾ 2024년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에서는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녹색 전환 부문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해양환경 보호 등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¹⁶⁹⁾

베트남과는 2024년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신설했는데, 특히 베트남 측은 자국의 해양전략인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사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2030 목표 및 2050 비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다. 양국은 해양산업, 항만개발, 수산·양식업 생산성 향상, 해양인력 양성,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등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대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¹⁷⁰⁾

166) Department of Agriculture(검색일: 2025.3.27.)

16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1.19.)(검색일: 2025.1.7.)

168) 경제외교 활용포털(검색일: 2025.3.16.)

169) 외교부(2024.3.13.)(검색일: 2025.3.15.)

170) 외교부(2024.3.20.)(검색일: 2025.3.15.)

2)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5개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필수적인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다변화와 글로벌 질서 재편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고 있다.¹⁷¹⁾ 이들 국가 중 우리 ODA 중점협력국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다.

중앙아시아는 모두 바다가 없는 내륙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물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소련 붕괴 후 독립 과정에서 겪은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사회 인프라 개발이 뒤쳐져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인근 산지에서 흘러든 물로 형성된 담수호를 중심으로 양식업과 담수어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양식시설 구축부터 어병 관리, 저장·가공시설, 양식업 교육에 이르는 수산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산 양식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례로, 키르기스스탄과는 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협력 사례가 있다.¹⁷²⁾ 이러한 협력의 시작은 유사 협력사업이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양식업 생산량이 2000년 86톤에서 2019년 736톤으로 증가했으며, 11.96%의 연간 성장률을 보여 양식 산업에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내륙 개발도상국가와 세계 평균보다는 높고, 중앙아시아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이다.¹⁷³⁾ 그러나 양식 종류가 세계 평균 대비 한정적

171)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25.1.10.)

172) 김성인(검색일: 2025.1.5.)

173) FAO(2022), Aquaculture growth potential in Tajikistan, p. 54(검색일: 2025.1.13.)

이어서 수산자원의 다양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요 측면에서는 2019년 9.3백만 명이었던 인구가 2030년 11.6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식량자원으로서의 내수면 어업과 양식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¹⁷⁴⁾

〈표 3-4〉 아시아 국가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사업명	기간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사업	'22~'26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21~'25
키르기스스탄공화국 국립수산양식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22~'26
인도네시아 국가해양관리를 위한 한국 정지궤도위성 활용시스템 구축	'22~'26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지원	'23~'27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과학 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23~'28
(다자성 양자) 동아시아 해역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 사업(PEMSEA)	'23~'28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설립	'24~'26
아시아·중남미 국가의 해기교육 이해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사업	'24~'26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강화	'25~'29
(다자성 양자) 내륙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어류 가치사슬 프로젝트(FAO)	'25~'28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76-177; 2025a, pp. 154-156)

2. 아프리카

어업은 아프리카 특히 연안 지역의 매우 중요한 식량자원 공급원이자 고용 창출의 근간이다. 특히 2030년까지 수산물에 동물성 단백질원으로서의 비중이 30%까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세계시장에서의 아프리카 수산업 경쟁력은 넓은 수역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류와 보유하고 있는 어획량이 많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및 IUU 어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 미비로 인한 자원감소는 아프리카

174) FAO(2022), Aquaculture growth potential in Tajikistan(검색일: 2025.1.13.)

국가에 큰 위기가 될 것이다.¹⁷⁵⁾ 전 세계에서 불법적으로 잡힌 어획량의 약 20%가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세네갈, 시에라리온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⁶⁾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수산 프로그램(PROFISH)은 정보, 지식 제품 및 전문성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 설계 및 실행을 지원했다. PROFISH의 성과를 바탕으로, World Bank는 서아프리카 지역 수산 프로그램(WARF-P: West Africa Regional Fisheries Program)을 설계하였으며, 모리타니에서 가나까지 서아프리카 연안을 포함하는 1억 7천만 USD 규모의 투자(추가 1억 2천만 USD 예정)를 추진했다. 2015년, 세계은행은 남서 인도양 수산 거버넌스 및 공동 성장 프로그램(SWIOFish: South West Indian Ocean Fisheries Governance and Shared Growth Program)을 승인했으며, 동아프리카 및 주변 도서국을 대상으로 2억 1,550만 달러 규모의 투자(추가 1억 달러 예정)를 진행한 바 있다.¹⁷⁷⁾

아프리카 지역은 어업에 적절한 정박시설 부족, 연중 지속되는 고온다습한 기후, 불규칙한 해양 조건(파랑·조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잠재적 어획 자원이 풍부한 해역에 접근하는 데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얼음 확보가 어렵고, 냉동·냉장 시설 부족과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인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 제대로 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어망 사용 및 대륙붕에서의 남획 등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아프리카 지역은 주요 어업국들의 원양어업 선단이 상당한 규모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원양어업 국가는 아프리카 연안국과 어업 협정을

175) World Bank Group(검색일: 2025.1.15.)

176) Africa Defense Forum(2023.3.14.)(검색일: 2025.1.13.)

177) World Bank Group(검색일: 2025.1.15.)

체결하고 어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그중 일부 협정에서는 현지 어선원 고용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과 기니비사우 간의 ‘지속가능한 어업 파트너십 협정’에서는 EU 선박이 기니비사우 해역에서 조업 시 현지 어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을 권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¹⁷⁸⁾ 관련 협정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조건과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공개된 자료가 한정적이다. 일부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아프리카 연안국들은 타국과의 어업 협정 체결 시 자국민 고용 기회 확대와 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해서 현지 선원의 승선 조항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선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IUU 어업 방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관리 조치 및 규제 준수 촉진하는 한편,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인도양 참치위원회(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는 인도양에서의 참치 및 유사 어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¹⁷⁹⁾,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데이터 수집 능력 부족으로 인해 모니터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현재 IOTC 조업에는 5%의 옵서버만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어획량과 혼획, 기타 과학적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¹⁸⁰⁾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IOTC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데이터 수집과 보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옵서버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도입된 전자 모니터링 표준을 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인력 양성 ODA 사업이 주요 분야로 고려될 수 있다.

178) European Parliament(검색일: 2025.4.3.)

179) FAO(검색일: 2025.3.7.)

180) FAO(2023a), RESOLUTION 23/08 ON ELECTRONIC MONITORING STANDARDS FOR IOTC FISHERIES

종합하면, 아프리카의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양식기술 협력 및 수산 양식 인력의 역량 강화, 훈련된 오피서 재교육 및 어선원 양성, 국제 협력 기반 구축 등을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촌 개발을 통한 어업 환경 개선, 여성 어업인 지원, IUU 대응을 위한 오피서 전문성 강화, 해기 인력 양성 등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협력 모델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초청연수를 통한 실무 교육 지원도 추진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3-5〉 아프리카 국가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사업명	기간
(다자성 양자)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촌개발사업(FAO)	'20~'25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사업	'23~'26
(다자성 양자) 군소도서국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모델 개발 및 도입(FAO)	'20~'25
세네갈 해양수산경제부 역량강화	'21~'24
탄자니아 해양수산 위성활용센터 설립 지원사업	'25~'29
기니비사우 소규모 어항 및 냉동창고 건립 지원 사업	'25~'29
(다자성 양자) 기니만 해적 및 해상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연안국 역량강화 지원 사업(IMO)	'25~'29
케냐 선진 해기교육시스템 전수사업	'25~'26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76-177; 2025a, pp. 154-156)

3. 오세아니아(태평양 도서국)

태평양 도서국은 지리적 특성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데, 중서부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장으로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¹⁸¹⁾ 또한 해양 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도 활성화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관광이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낙후한 사회 경제 인프라, 자본 및 기술 부족,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국가 발전에 어려움을 겪

181) Global Fishing Watch(검색일: 2025.1.8.)

고 있다.¹⁸²⁾

태평양 도서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협력국으로, 태평양 해역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업 어획량의 20%를 차지하며, 특히 우리나라 참치 어획량의 92%를 담당¹⁸³⁾하는 주요 어장이다.

이런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존은 곧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일 것이다. 태평양 지역에 증가한 IUU 어업에 대한 대응을 위해 태평양 도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 간 협력, WCPFC 등 지역수산기구의 법제도 기반 관리, Global Fishing Watch, MRAG Asia Pacific¹⁸⁴⁾과 같은 민간기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IUU 어업 선박의 추적, 불법 환적 방지, 공동 대응 훈련,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IUU 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협력이 활발하다. 아울러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산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어업 인증제 및 친환경 라벨링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남태평양 도서국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5m 미만 저지대여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태풍과 해일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향후 30년 이내 투발루, 키리바시, 피지 등의 국가는 15cm 이상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여¹⁸⁵⁾, 이들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재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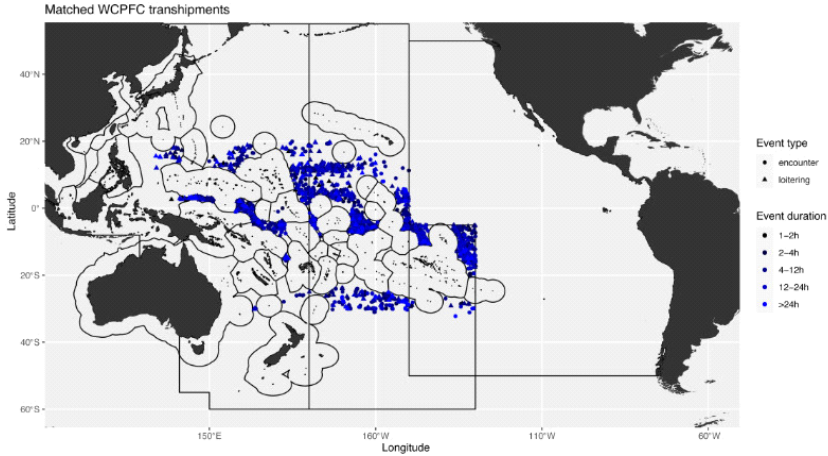
182) 외교부, 서남아시아태평양(검색일: 2025.1.8.)

183)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검색일: 2025.1.10.)

184) MRAG Asia Pacific은 호주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독립 컨설팅 회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산자원 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30년 이상의 경험과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부, 국제기구, 민간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MRAG Asia Pacific(검색일: 2025.2.6.)

185) NASA(검색일: 2025.1.16.)

〈그림 3-1〉 태평양 지역 IUU 어업 선박 데이터



자료: MRAG Asia Pacific(검색일: 2025.1.16.)

어업 분야 역량강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ROP: Regional Observer Program)을 통해 옵서버 활동을 지원하며, 태평양도서 지역 옵서버는 태평양 도서국 지역수산 옵서버(PIRFO: Pacific Islands Regional Fisheries Observers)의 훈련체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는다.¹⁸⁶⁾ 태평양 지역 옵서버의 업무에는 어업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데, 특히 참치 어획량과 함께 그 과정에서 혼획되는 어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WCPFC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 조치(CMM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보존 및 관리 조치는 중서부 태평양 지역의 참치 어업 관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사항으로 어종별 관리 조치, 부수 어획 감소 조치, 어업활동 모니터링 및 규제, IUU 어업 방지, 해양 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다.

186) 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검색일: 2025.3.15.)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 보존관리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는 어족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위해서, 옵서버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조치를 채택한 바 있다.¹⁸⁷⁾

또한 어업 또는 참치 어업 관련 산업 및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수산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어업 기반 시설 개발, 자원 관리 능력 강화 등을 포함한 지원을 위해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국의 가공시설·환적 인프라 등의 이용과 함께, 수산물의 현지 가공과 연료·장비의 현지 구매, 현지 선박 수리 시설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¹⁸⁸⁾

어업 분야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평등에 대한 고려도 대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어업은 선박에서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주로 남성들의 영역이었다.¹⁸⁹⁾ 하지만 최근 여성이 선원으로 보다 더 참여하고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업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오세아니아 지역 어업인 중 여성의 비율은 평균 약 25%로 추정되며(멜라네시아 45%, 미크로네시아 31%, 폴리네시아 19%), 어획 이후 단계(post-harvest)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⁹⁰⁾ 한편, 일부 국가의 수산 노동 자료에서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여성의 어업인 등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생산 단계 어업인 통계에서 여성 비율이 과소추정되기도 한다.¹⁹¹⁾ 따라서 어업 종사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추적, 여성어업

187) WCPFC(검색일: 2025.3.15.)

188) 위의 문서, p. 4.

189) WWF-Pacific(Fiji)(2021)(검색일: 2025.1.16.), p17.

190) Mangubhai et al.(2022.10.), p. 2.

인의 역량강화와 함께 인권, 임금,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2023년 한-태도국 정상회담 기간 중 국가별 양자회담에서도 관련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마셜제도는 해수온도차 발전 사업, 키리바시는 어촌 특화 개발 분야¹⁹²⁾, 통가는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투발루는 탈탄소 해운업 분야, 바누아투는 항만개발 사업에서의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¹⁹³⁾ 이에 한-태도국 정상회의와 함께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¹⁹⁴⁾을 기반으로 태도국 국제읍서버 역량강화 사업이 2024년 해양수산 ODA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바 있다.

현행 ODA 추진전략에서도 태평양 도서국의 중점 분야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태평양 도서국이 직면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원양어선들의 해외어장에서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 등을 위해 주요 어장 보유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해양조사와 관측, 읍서버 역량강화 등 협력사업이 집중되어 있다.¹⁹⁵⁾

191) 위의 논문, p. 2.

192) 외교부(2023.5.29.)(검색일: 2025.3.16.)

193) 외교부(2023.5.28.)(검색일: 2025.3.17.)

1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6.12.)(검색일: 2025.3.16.)

195)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76-177; 2025a, pp. 154-156)

〈표 3-6〉 태평양 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사업명	기간
(다자성 양자) 기후변화 대응 해양 산성화 관측 고도화 및 지속성 확보지원(SPREP)	'22~'26
해수온도차 발전 및 배출수 이용을 위한 마셜아일랜드 SDGs 역량강화	'23~'26
(다자성 양자) IMO 협약이행 역량강화 및 국제해사 리더 전문교육(IMO)	'23~'27
투발루 어촌특화개발사업	'23~'26
피지 마코가이 수산양식연구소 재건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24~'28
피지 해수열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피지 남태평양대학교 그린캠퍼스 시범사업	'24~'26
(다자성 양자) 피지·통가·바누아투 대상 저탄소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GGGI)	'24~'28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대상 국제읍서버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24~'26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해양수산교육 역량강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	'24
(다자성 양자) 해양플라스틱 오염에 의한 생태계 영향 저감사업(IUCN)	'24~'28
(다자성 양자) 세계해사대학(WMU) 연안개도국 IUU 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WMU)	'24~'28
키리바시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커뮤니티 개발	'25~'29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76-177; 2025a, pp. 154-156)

태평양 지역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므로 어업 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권역으로 고려되며, 다양한 국제기구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인적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수산자원의 공동관리,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항만·냉동·물류 등 기반 인프라 확충, 해양 안전 및 해사 분야의 역량 강화 등이 주요 협력 수요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와의 연계 가능성 또한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4. 중남미 및 카리브해

중남미의 경우 우리나라와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례는 드물지만 국가 경제에 있어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기여 비중이 높고 국제협력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¹⁹⁶⁾ 중남미 ODA 중점협력국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이다.

페루와 에콰도르 해역은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남획, 번식력 감소, 환경 영향으로 인해 어획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FAO에서는 해양자원의 보호와 연안어업의 유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연안어업 이니셔티브(CFI: Coastal Fisheries Initiative)’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연안어업 이용 및 관리 촉진, 혁신적인 거버넌스 개선 및 해산물 가치사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¹⁹⁷⁾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 기반 어업 관리 도입과 주요 어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협력적 관리 강화, 해양 공간 계획의 수립과 적용, 연안 어업 관리 위한 모범 사례 공유 및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교육 등이다. 현재 중남미에 연안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CFI 지원으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제보전기구(CI: Conservation International) 및 세계자연기금(WWF)과 협력하여 지구환경기금(GEF)으로부터 6,500만 달러 지원 및 추가 4억 2,500만 달러의 공동자금을 확보해서 5년간 진행 중이다.¹⁹⁸⁾ 2024년 진행된 한-페루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식량안보가 포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 그리고 저탄소 정책 및 식품안전관리 디지털 전환 중요성 등을 확인한 바 있다.¹⁹⁹⁾

196) 윤일선 외(2017). p.16.

197) FAO(검색일: 2025.1.7.)

198) FAO(검색일: 2025.1.14.)

중남미의 경우 내수면 어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전체 어획량 중 내수면 어획량이 26.8%²⁰⁰⁾이고, 내륙국인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는 100%에 달한다. 해당 국가의 식량자원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수면 어업은 노동 집약적이며,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세한 근로환경에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²⁰¹⁾ 콜롬비아의 어업에 대한 관심은 2022년 콜롬비아 국립수산청장 내한 시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시 우리의 높은 양식 기술과 어업 관련 장비 도입 논의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을 방문한 바 있다.²⁰²⁾

남미 국가의 경우,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정부 간 교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연수 등 인적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식량 수급 측면에서 남미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 위생관리 및 수산가공 등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해운·물류·해사 분야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²⁰³⁾

〈표 3-7〉 중남미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년 기준)

사업명	기간
(페루) 페루 기후변화 대응 수산양식교육 역량강화사업	'22~'2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54-156.

19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11.17.)(검색일: 2025.3.15.)

200) FAO(검색일: 2025.2.4.)

201) FAO(검색일: 2025.2.4.)

202) 연합뉴스(2022.4.14.)(검색일: 2025.3.15.)

203) 윤일선 외(2017). p.16.

제4절 국내 이해관계자 수요 분석

1. 정부 및 산하기관

1) 해양수산부

앞서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ODA 규모와 사업 수가 증가했으며, 전체 ODA 예산 내의 비중도 확대되어 왔다. 해양수산부의 ODA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어업과 경제 개발,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 제고 등을 목표로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여 추진된다. 따라서 부서별로 담당하는 분야의 목표와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담당 분야의 종합계획, 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부서의 ODA 수요 역시 관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양산업과에서는 ODA 확대를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의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과 주민 역량강화, 아프리카 등 어장보유국가 대상 자원관리, 어업 기술 이전 등 협력사업 발굴 등을 바탕으로 원양산업 ODA 비중을 2028년 10% 증가 목표를 제시했다.²⁰⁴⁾ 아울러 현지 자체 선원교육기관이 부족한 원양어선원 송출국을 대상으로 노후 원양어선을 훈련선으로 제공하고, 원양어선원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ODA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²⁰⁵⁾

해양환경정책과에서는 국내 해양 환경기술과 정책 등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해양환경 분야 역량강화,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해수 측정 및 관리,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 방지 지원 등에 대한 ODA를 지속 추진할 예정

20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 p. 7, 13.

205) 위의 자료, p. 12.

이다.²⁰⁶⁾

해사안전정책과에서는 국제 해사 분야 위상을 확립하고, 중심국가 입지 확립을 위해 국제협력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4개 ODA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IMO와의 ODA 사업 협력으로 글로벌 해사역량을 제고하고, 기존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 ODA 사업 중 모범 사례를 분석해 신규 사업 발굴과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²⁰⁷⁾

수산정책과에서는 해양수산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성·단발성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수산 ODA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자 원조사업의 확대 및 수산 ODA 사업의 융합화·대형화를 제안했다. 또한, 주요 원양 조업국 대상 해양수산 ODA 추진으로 해외어장 및 충분한 조업 쿼터 확보를 통해 원양조업 여건을 향상시키는 계획도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해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참여형 수산 ODA 사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²⁰⁸⁾

해양보전과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해양폐기물 관리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해양쓰레기 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을 제시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을 남태평양 도서국과 아프리카 등의 연안개도국으로 확대 추진 예정이다.²⁰⁹⁾

206) 해양수산부(2021.1.), p. 47, pp. 141-142.

207) 해양수산부(2022), p. 121, 125.

208) 해양수산부(2021.3.), p. 54, pp. 218-219.

209) 관계부처 합동(2021.5.), p. 108.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기관으로, 개도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²¹⁰⁾ 그중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역량강화와 같은 교육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그 외에 어업개발, 환경 개선, 운송 정책 및 행정 관리 지원, 수산물 유통 지원 분야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0년 이후 사업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정책 개발, 소규모 어민 지원, 수산물 가공, 양식업, 해수온도차 발전 관련 연수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3-8〉 KOICA 해양수산 관련 ODA 목록(2020~2023년)

사업명	사업설명	수원국	사업 분야	원조 유형	사업 개시	SDGs
솔로몬군도에 농수산물 가공업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농수산물 가공업 관련 해외봉사단(1명) 파견	솔로몬 제도	농수산물 가공업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20	12.3
해운항만물류 관리자 역량강화('20~'22)	항만관리 및 항만물류 실무, 해양환경, 선박오염방지, 배후지 관리 교육	코트디부아르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0	16.b
해운항만물류 관리자 역량강화('20~'22)	항만관리 및 항만물류 실무, 해양환경, 선박오염방지, 배후지 관리 교육	콩고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0	16.b
시에라리온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형 공무선박 지원	시에라리온 근해 IUU 단속 지원, 영세 어민 조업 여건 개선	시에라리온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프로젝트 원조	2020	14.4
피지 어촌지역 태양광 냉동고 지원 사업	태양광 냉동고/부품	피지	수산물 유통 지원	프로젝트 원조	2020	12.a

210) KOICA 오픈데이터포털(검색일: 2025.1.15.)

사업명	사업설명	수원국	사업 분야	원조 유형	사업 개시	SDGs
해운항만물류 관리자 역량강화 (2021)	항만관리 및 항만물 류 실무, 해양환경, 선박오염방지, 배후 지 관리 연수사업	콩고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1	17.14 ; 15.5
해양정책개발 및 항만행정 역량강화 (2021)	개도국 해양정책 개 발과 항만행정 제반 제도 조건의 개선 위 한 온라인연수 제공	피지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1	9.2
필리핀 아클란주 친 환경 양식 기반 치패 종묘장 및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 사업	맹그로브 숲을 이용 한 친환경 참꼬막 양 식장 조성, 수산물 2차 가공시스템 도입	필리핀	어업 개발	프로젝트 원조	2021	2.3
해운항만물류 관리자 역량강화 (2022)	항만관리 및 항만물 류 실무, 해양환경, 선박오염방지, 배후 지 관리 연수사업	콩고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2	9.4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역량강화 (2022)	해수온도차 발전, 수 산 양식 개발, 태평양 도서지역 친환경 선 박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 개선 및 기후 변화 대응 항만 방재 시스템 구축 등	사모아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2	14.7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역량강화 (2022)	해수온도차 발전, 수 산 양식 개발, 태평양 도서지역 친환경 선 박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 개선 및 기후 변화 대응 항만 방재 시스템 구축 등	피지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2	14.7
파푸아뉴기니 해사 안전청 엔진룸 세물레이터 지원	선박 운항(엔진룸 운 용) 교육을 위한 모의 훈련 시스템	파푸아 뉴기니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프로젝트 원조	2023	14.3

자료: KOICA 오픈 데이터 포털(검색일: 2025.1.15.)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개발도상국 산업인재 양성,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혁신적 농촌 공동체 개발, 보건 의료 서비스 고도화 등 4대 프로그램을 KOICA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개도국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도국의 숙련·전문 인재 교육 활동과 취업 연계 활동을 통해 산업 기반 강화에 필요한 현장 경험 있는 산업인재 양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²¹¹⁾ 이를 통해 한국이 국내 외국인 인력의 고용수요와 연계해 국내 노동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도국 정부는 숙련 인재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으며, 외국인 근로자 개인은 역량 개발 및 소득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²¹²⁾

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도국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한 우리의 ODA 정책기금으로 ODA 중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을 주로 지원한다.²¹³⁾ 2010년부터 2023년까지 5,200여 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원조 유형으로는 프로젝트 원조, 기타 기술협력, 채무 구제, 다자기구 및 글로벌 기금 지원,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이 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살바도르 아카후틀라 항만 개발사업(2024년 승인), 방글라데시 해상안전운항시스템 구축사업(보충용자, 2024년 승인)²¹⁴⁾, 가나 지역해양대학 현대화사업(2020~2022)²¹⁵⁾, 필리핀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2017~2021)²¹⁶⁾, 세네갈 냉동탑차 공급사업(2019~2020), 세네갈

211) 연합뉴스(2024.10.7.)(검색일: 2025.1.10.)

212) 위의 자료.

213) 대외경제협력기금(2024), p. 4.

214)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사업본부(2024), p. 2.

215)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검색일: 2025.3.19.)

216) KOICA 오픈데이터포털(검색일: 2025.1.15.)

냉장창고 건립사업(2019~2020) 등이 있다. 세네갈 냉동탑차 공급사업과 세네갈 냉장창고 건립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었다.²¹⁷⁾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국제 표준 부재, EDCF로 추진 가능한 사업 부족, 해양 투자에 대한 자금 부족, 데이터 및 전문인력 부족, 협력국의 해양수산업 생태계 미성숙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기존 EDCF 사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항만 개발 수요가 EDCF를 통해 접수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여 항만 타당성 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EDCF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협력은 주로 항만 및 해안 지역 개발 관련 수요 대응이 될 것이며, EDCF에 부족한 해당 분야 전문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²¹⁸⁾

한편,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등에서 수요가 많은 어항 개발의 경우, 개별 어항 단위로는 사업 규모가 작아 차관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도로·전선망 구축, 배후단지 개발 등과 연계하거나, 여러 어항을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EDCF는 차관 형태의 자금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협력국에서 국회 승인을 포함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전략 수립, 사업 발굴, 사업 준비, 사업 실행, 운영 지원, 사업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타 부처 및 다른 분야와의 사전적 융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²¹⁹⁾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추진 구조 내에서 타 부처와의 협력 경험도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최근 연계된 세네갈 관련 EDCF 연계사업 1건 역시 EDCF 측의 요청에 근거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217) 관계부처 합동(2020), p. 35.

218) 2022년 해양수산 ODA 역량강화 프로그램, EDCF ○○○ 부장(2022.6.26.)

219) 2022년 해양수산 ODA 역량강화 프로그램, EDCF ○○○ 부장(2022.6.26.)

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²²⁰⁾ 기획재정부가 주관부처이며, 부문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KSP를 추진한다. 협력 방식은 정책 자문, 역량강화 연수, 정책자문관 파견 등의 사업이 포함된 정책자문사업, 공동컨설팅 사업,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²²¹⁾

2018년 이후 KSP 사업 중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도서지역과 해안지역 개발 지원, 국가해양개발계획 수립 지원 등이 진행되었다.

〈표 3-9〉 KSP 해양수산 관련 사업 목록(2018~2023년)

사업명	수원국	기간	유형
도서지역의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구축 방안	볼리비아	2018/19	정책 자문
민자유치방식(PPP)에 의한 도미니카(공)도서지역 브로드밴드 구축	도미니카	2018/19	공동컨설팅 (IDB)
수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페루	2018/19	
국가해양개발계획 수립 지원	조지아	2020	정책 자문
세네갈 해양·하천 운항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립 타당성 조사	세네갈	2021/22	양자
세네갈 해양운송망 개발 국가 전략 수립 사업	세네갈	2021/22	
메콩델타 동부해안 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2023/24	공동컨설팅 (ADB)

자료: KSP(2018.8.27., 2020.7.29., 2024.2.28., 2024.1.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5.1.6.)

220) KSP(검색일: 2025.1.5.)

221) KSP(검색일: 2025.1.6.)

2. 산업계

산업계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는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기술 이전, 인프라 개발, 친환경 및 스마트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증가하는 ODA 협력 수요에 비해 정부 ODA 재원 증가는 제한적이므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재원 투입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²²²⁾

ESG²²³⁾ 및 CSR²²⁴⁾ 활동이 전 세계적 흐름이 됨에 따라 기업 측면에서도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은 ESG와 CSR을 기업 운영의 필수 요소로 강조하며 규제 및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ESG 실천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추세다.²²⁵⁾ 아울러,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ESG 지표가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되고 있다.²²⁶⁾ 우리나라 금융권도 ESG 평가 반영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심사 시 ESG 평가를 반영하고, ESG 우수 기업에는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²²⁷⁾²²⁸⁾, 한국거래소도 ESG 평가를 기반으로 코스피 ESG 지수를 개발하여 ESG 우수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²²⁹⁾

222) 관계부처 합동(2021.1.20.), p. 5.

223)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포함함

22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함

225) EU의 기업 지속가능 보고서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2024년부터 ESG 관련 공시 의무가 확대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 중임. 우리나라도 ESG 공시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ESG 공시 의무가 적용됨

226) Kristen McGachey(2024.8.8.)(검색일: 2025.1.18.)

227) 신한금융그룹(2023), p24.

228) WWF(2024), p15.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밀레니얼 및 Z세대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며, 이러한 가치관을 반영한 윤리적 소비를 선호한다.²³⁰⁾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공급망 내 ESG 기준 준수 여부를 홍보하고 있다. B2B 시장에서도 애플, 테슬라, 월마트 등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ESG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거래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ESG 실천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²³¹⁾

해양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근해 분야에서는 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영향으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다. 주요 수요는 연근해 어선원과 양식장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원양어업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간 조업해야 하는 고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선원 및 해기사 구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해외 어장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의 특성상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국 어선원을 승선시키거나, 해당국에서 수산물을 양륙하거나 가공할 것을 요청받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또한, 조업 시 옵서버 승선이 요구됨에 따라 옵서버 확보에 대한 수요도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수산업의 가공 및 유통 부문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김 등 한국산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가통합 수산물 브랜드인 K-FISH 등에 대한 홍보 요청이 제기되었다.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에서도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식량안보

229) 한국ESG기준원(검색일: 2025.1.18.)

230) 이상권·정인희·조윤진(2022), p. 453.

231) 미디어피아(2022.12.26.)(검색일: 2025.1.18.)

차원에서 어종 변화에 따른 자원 확보를 위해 신규 어장 개척 등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었다.

조선업계에서는 용접공 등 기술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연기관 기반 선박과 핵심 기자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친환경 기술 적용 선박 상용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보급 및 확산이 주요 수요로 부각되고 있었다.

해운업계를 살펴보면, 상선 분야에서도 어선 분야와 동일하게 해기사와 부원 모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존재하였다. 상선은 국제 해기협정 체결 국가에 한해 선원 승선 교류가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해기협정을 맺은 국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수급하고 있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공해 등을 통한 녹색 해운항로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전환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해운협회는 KOICA의 개도국 산업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해기사 양성 ODA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친환경 선박 및 첨단 무인 자동화 선박 운용에 필요한 해운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적선사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²³²⁾

그러나 ODA 사업을 통해 양성된 협력국의 전문인력이 실제로 우리나라 업계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민 고용 절차와 관련 업계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훈련된 젊은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제도적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32) 한국해운협회(검색일: 2025.1.10.)

3. 학계 및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학계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면서, 그 참여 방식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학계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및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단순 현장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의 구체적 연계가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학술적 연구와 데이터 기반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한 분야별 학술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는 개발도상국의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역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²³³⁾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KAOSTS: Korea Association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가 학술대회에서 ODA 세션을 별도로 마련해 관련 학술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²³⁴⁾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환경 조성 및 고급 인재 양성 차원에서 해양·수산,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과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연수 과정,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33) 국제개발협력학회(검색일: 2025.2.14.)

234)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검색일: 2025.2.15.)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국내 교육기관의 퇴역 훈련선을 활용한 특수한 협력 수요가 존재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해기사 양성 수요와 우리나라의 훈련선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기사 등 해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승선 실습이 필수적이거나, 개발도상국은 관련 전문 교원이 부족하고, 교원이 확보된 경우에도 실습용 훈련선이 없어 실질적인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훈련선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역 대상이 되어 폐기해야 하나, 여전히 선박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역 훈련선을 개발도상국에 공여하고, 승선 실습과 관련한 교육 역량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해양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훈련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양성된 인력이 국내 국적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원 수급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감척어선을 세네갈 선원학교에서 훈련선으로 활용한 ‘수산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세네갈 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퇴역 훈련선 한나라호를 베트남 해양대학교에서 훈련선으로 활용한 ‘베트남 선원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이 있다. ‘세네갈 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서부 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척사업에서 발생한 감척어선을 세네갈에 기증하는 ‘연안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사업(수산자원관리선 기증)’의 후속 연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세네갈 선원학교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공여 선박을 활용한 선박 안전운항 및 수리보수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세네갈의 선원 양성 분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²³⁵⁾ ‘베트남 선원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진

2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2a). pp.7-9.

사업으로, 한나라호는 한국에서 수리 후 베트남 선원학교에 공여되어 현지 해양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선으로 활용되고 있다.²³⁶⁾ 이와 유사한 국제개발협력 수요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국립부경대학교, 해양경찰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참여 수요 또한 개발도상국 현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NGO와 시민사회는 정부나 국제기구가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 밀착형 개발협력 활동을 주도하며, 인권 보호,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현지 NGO는 빈곤 해소,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국제개발협력의 인도적 성격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여성 인권, 장애인 권리 보호, 난민 지원 등에서 이들의 역할은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월드비전(World Vis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국제 NGO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인권 보호와 교육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통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개발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ODA 사업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력국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활동은 개발협력사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236)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2b). pp. 7-8.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감시하고, 정책제언을 수행하며, 개발도상국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및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²³⁷⁾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에서 NGO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참여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그 필요성과 수요는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현지에서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이행이 요구되지만,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현장 적용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해양수산 ODA 사업은 대체로 연안 지역에서 추진되며, 이러한 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소외 지역인 경우가 많아 빈곤 문제나 문맹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 기반 조성 and 지역민 인식 개선을 위해 NGO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현지 주민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원활히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양수산 ODA에 있어 NGO 및 시민사회의 참여 수요로 주목할 수 있는 과제 중 하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활동이다. 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 보호뿐 아니라 어업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나아가 인권 문제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협력국의 연안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생계 수단 확보를 우선시하여,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IUU 어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지 NGO 및 시민사회단체는 인식 개선 캠페인,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통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현지 협력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3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검색일: 2025.4.3.)

제5절 소결

국제개발협력은 빈곤 해소와 개발 격차 축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공적개발원조(ODA)가 있다. ODA는 공적 기관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로,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최근 국제개발협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역으로, 협력 대상국과 국제기구의 전략적 관심사에 따라 협력의 유형과 내용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FAO, IMO, ILO 등 국제기구는 수산 식량안보, 해운 안전, 해양 환경 보호 및 해양노동권 향상 등 전문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WMU, IUCN, GGGI, PEMSEA 등도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 ODA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자협력 측면에서도 해양수산 분야 ODA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 그 사업 유형이 고도화되고 있다. 해기사 및 어선원 양성, 지속가능한 양식기술 이전, 해양폐기물 저감,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해양 디지털 역량강화, 연안개발 및 항만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며,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력 모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협력국과의 전략적 대화 및 정상회의 등 양자 플랫폼을 통한 논의는 이러한 수요의 제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이해관계자의 수요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어업기술 이전, 연안환경 보호, 선원·해기사 양성, 해양 플라스틱 대응 등 과별 정책 목표에 기반하여 ODA를 추진하고 있으며, KOICA,

EDCF, KSP 등 타 부처도 해양수산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계 역시 ESG 및 CSR의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해운·조선·수산업계에서는 인력 수급, 기술 확산,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ODA 연계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퇴역 훈련선을 활용한 실습 기반 조성, 어업인·오피서버 역량강화,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등에 있어 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자문, 공동연구 등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현장 수요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양수산 분야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전략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자·양자 협력 수요, 국내 이해관계자의 요구, 권역별 전략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협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토대로, 정책적 정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갖춘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 모델 사업(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04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사업 설계 전략

제1절 기존 사업 발굴 체계의 한계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방향

우리나라의 ODA는 2024년 기준으로 총 46개 ODA 시행기관이 1,976개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다원화된 ODA 추진체계를 보여준다. 패키지 사업 개념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안)²³⁸⁾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무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컨설팅, 인프라, 역량개발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접근법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추진전략·실적의 하나로 제시되었다.²³⁹⁾

한편, 2024년 OECD Peer Review에서는 같은 국가 내 ODA 시행기관

238) 우리나라 ODA는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후 ODA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이 계획에는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 실적 및 평가, 발행 연도의 ODA 사업 추진 계획, 추진과제, 기관별 ODA 사업 예산 현황 등이 포함되며, 국가의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과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ODA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39) 관계부처 합동(2015), p. 3.

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추진 순서를 조정하는 등 통합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를 권고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ODA 노력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²⁴⁰⁾

더불어,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에서도 향후 사업 발굴 방향에서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기업·NGO 등)과 적극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유·무상 민관 연계 시그니처 사업 발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ODA 추진 체계의 고도화를 제안하고 있다.²⁴¹⁾

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현황

1) 발굴 체계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70개국을 대상으로 총 163개의 ODA 사업을 추진하였다.²⁴²⁾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부처 재설립 이후 개발도상국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시작은 국내 어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들의 어장 상실

240) OECD(2024.5.21.), p. 32.

241) 관계부처 합동(2024a), p. 6, 8, 41.

242)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등 행정 개편으로 인해, 공식적인 해양수산부 ODA 통계는 2014년부터 확인 가능함

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어선의 해외 어장 진출 지원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2년 ‘감척어선 대외 무상원조 지원’ 사업이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까지는 단순 물자 지원 중심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부합하는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ODA 사업의 발굴 및 계획 수립에 있어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하향식 사업 발굴에서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기본 방향인 K-OEI(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를 기반으로 타당성 조사 우선순위 선정과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통한 협력 의제 발굴 등을 추진하며, 「제3차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ODA 추진 방향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상향식 사업 발굴에서는 이에 더해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은 법정계획에 포함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4-1〉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ODA 관련 계획

구분	계획명
총괄	•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년)
수산	•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 •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해운·항만	•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25~2029) •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 •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21~2025) •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2019~2028)
해양·환경	•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자료: 저자 작성

2) K-OEI

2023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비전인 K-OEI는 제2장 제2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 전략 전반을 제시하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도 포함하고 있다. K-OEI는 ① 기후위기 대응, ②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③ 해양환경 보전, ④ 해양수산 인재 양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ODA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에 적용되는 기본 방향이다. 세부 내용은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⁴³⁾

3)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ference on Oceans and Fisheries)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정례적인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태평양 도서국,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등 권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²⁴⁴⁾

이 콘퍼런스는 단순한 성과 확산의 장을 넘어, 해양수산 국제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국 및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해양수산 ODA의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KICCOF는 분야별 및 권역별 맞춤형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표 4-2>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243) 해양수산부(2024), K-Ocean Economy Initiative(K-OEI) 발표자료

244) 개최 현황: 스페인 라스팔마스(2014년), 피지(2015년), 인도(2016년), 케냐(2018년), 미얀마(2019년), 한국(2021년), 피지(2022년), 한국 부산(2023년), 한국 서울(2024년)

〈표 4-2〉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 기능

기능	내용
국제개발협력 수요 확인 및 기획 단계 협의	• 권역별 국제개발협력 수요 파악 및 기획 단계 협력 강화 • 태평양 도서국(기후변화·수산자원), 아세안(스마트 양식·해양환경), 아프리카(수산업·연안개발), 중남미(해양기술·연안재해) 등 권역별 맞춤형 협력 이행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학계·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 • 부처 간 연계를 통한 패키지 모델 및 지속가능 협력 모델 개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및 성과 홍보	• 해양수산 ODA 성과 확산 및 국제개발협력 모델 구현을 위한 플랫폼 •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 한국 해양수산 ODA 성과의 가시성 제고
신규 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다자협력 강화	• FAO, WB, ADB, GGGI 등 주요 국제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발굴 및 협력을 위한 핵심 협의체 역할 정립

자료: 저자 작성

4) 해양수산 정책 성과 확산 프로그램(BADA)

해양수산 정책 성과 확산 프로그램인 BADA(Best Achievement Program in Oceans and Fisheries ODA)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에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협력국 공무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해양수산 ODA 사업 발굴·추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원국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ODA 관련 전문 강의, 현장 견학, 세미나 등을 제공하며, 해양과학, 수산양식, 해양환경 등 분야별로 국내 유관기관과 매칭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협력국이 효과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 파트너인 수원국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BADA 프로그램은 수원국 공무원이 한국의 해양수산 개발협력 경험을 직접 학습하고, 자국의 정책 및 사업 기획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협력국 사업 제안 시 필수 제출 서류인 PCP(Project Concept Paper)

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실제 ODA 심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ODA 사업이 협력국의 정책 역량 및 운영 능력을 강화하여 자립적인 해양수산 발전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도전과제

첫째, 사업 우선순위의 일관성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해양수산부 부처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적 ODA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각 과에서 분야별 국제협력 목표에 근거한 개별적 ODA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중장기적 계획과 일관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 확대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가 필요하다. 2024~2025년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ODA 사업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강조하는 패키지·융합·연계형 사업 모델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협력국의 복합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사업 발굴 과정에서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여지가 있으며, 현재는 부처 내 과별 전문성 기반의 사업 기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다자협력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넷째, 제도적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2010년

대 후반부터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체계는 일부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자체 평가지침은 2019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과 일부 차이가 있다. 또한, ODA 사업 전 주기에 대한 제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계기관 및 사업 수행기관에서 다른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ODA 연구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협력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위한 기초 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연구 기반이 강화되면 정책과 사업 기획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향상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력이 제고될 것이다.

제2절 사업유형별 사례 분석

1. 패키지 사업

2025년 2월 현재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패키지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패키지 사업은 기존 사업들을 단순 연계하는 것과 차별되며,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무상 사업(5~6개 이상)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전 기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²⁴⁵⁾

2024년 발표된 OECD DAC Peer Review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

²⁴⁵⁾ 관계부처 합동(2025c), p. 2.

력 개선을 위해서는 패키지 사업이 필요함을 여러 권고사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권고사항 1은 ODA 전략의 일관성과 조정 강화에 관한 것으로, 한국 ODA의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을 제고하고 단편적 프로젝트에서 탈피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조정 체계 개선을 통한 다부문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권고사항 8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도하는 패키지 사업 프로그램의 경험과 주관기관의 사업 연계조정에서 도출된 교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협력국 현지사무소의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이와 함께 권고사항 7과 10은 각각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간 참여 다각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²⁴⁶⁾

우리나라는 단일 지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서 패키지 사업의 당위성 및 추진방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한 사업 내에서 인프라 구축, 기술 지원, 정책 자문, 교육 및 역량 개발 등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면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활동 연계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²⁴⁷⁾

2025년 2월에 공개된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효율적·통합적·지속적 ODA 패키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적·맞춤형 사업화, 통합적·효율적 집행, 참여 기반 확대, 성과관리·환류 강화의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대외전략,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우선 반영하며, 글로벌 현안 대응,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사업을 기획·발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KOICA 시그니처 프로그램, EDCF 종합 제안,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부처 중심의 특화패키지 모델화 등 다양한 패키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패키지 사업 모델화를 권장하고 있다.²⁴⁸⁾

246) OECD(2024.5.21.), p. 32.

247) 관계부처 합동(2025c, p. 1; 2024a, p. 23; 2022a, p. 22; 2020, p. 18)

248) 관계부처 합동(2025c), pp. 5-6.

〈표 4-3〉 패키지 사업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내용
전략적·맞춤형 사업화	• 전략적 기획·발굴	• 대외전략 등 활용 • 글로벌 현안 대응 • 중장기적 접근 • 개발 컨설팅 활용
	• 다양한 패키지 모델화	• 시그니처 프로그램 • EDCF 종합제안 • 특화 패키지
통합적·효율적 집행	• 통합관리체계 구축	• 제도적 기반 마련 • 정기 점검 추진 • 현장 협업 강화 • 사업 유연성 제고
	• 정보공유 강화	• 사업정보 공유 확대 • 통합플랫폼 구축
참여 기반 확대	• 사업화 지원	• 기획예산 지원 • 협업 예산 우대 • 우선 심사
	• 민간참여 촉진	• 해외투자 연계 • 민관협력 강화
성과관리·환류 강화	• 성과관리체계 마련	• 성과지표 개발 • 협력 매뉴얼 수립
	• 성과 공유·활용	• 우수사례 개발 확산 • 성과홍보 및 학습 정례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c), p. 4.

패키지 사업의 실제 집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정기 점검 추진 및 사업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ODA 자금, 기업의 사업공헌 및 임팩트 투자,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합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²⁴⁹⁾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성과관리체계에도 반영되어 패키지 성

249) 관계부처 합동(2023.2.9.), p. 30.

과 평가 지표 개발 및 협력 매뉴얼 수립을 하고자 한다.²⁵⁰⁾ ODA 패키지 사업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가 활성화된다면 협력국의 정책과 제도 개선, 경제·사회적 발전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연계·융합 사업

우리나라의 ODA는 시행기관 사업의 중복 방지 및 사업 간 연계 강화를 고려하여 사업 발굴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N-2년 예비사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며, 기관 간(유·무상, 무·무상) 및 분야 간 연계·융합을 추진하고 있다.²⁵¹⁾ 최근 연계융합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상 간 연계가 유·무상 연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유·무상 연계사업은 48건(81개 사업), 무상 간 연계사업은 107건(21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²⁵²⁾

〈표 4-4〉 사업 간 연계 및 중복 방지 연도별 실적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유무상	건수	13	10	15	12	12	24	29	36	33	39	48
	사업 수	30	21	45	33	28	67	79	88	62	80	81
무상 간	건수	24	16	7	12	38	88	108	59	89	91	107
	사업 수	54	38	17	27	77	193	259	154	215	200	219
중복 방지	건수	19	14	16	10	11	11	3	3	6	14	9
	사업 수	45	30	56	21	23	23	3	4	17	14	9
총계	건수	56	40	38	34	61	123	140	98	128	144	164
	사업 수	129	89	118	81	128	283	341	246	294	294	309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a), p. 13.

250) 관계부처 합동(2025c), p. 9.

251) 관계부처 합동(2024a), p. 40.

252) 관계부처 합동(2025a), p. 13.

유·무상의 연계는 유상원조(EDCF)로 인프라를 구축한 후, 무상원조(KOICA)를 통해 운영 컨설팅, 기술지원, 정책 자문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2022~2026)은 EDCF를 통해 병원을 건립하고, KOICA 및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관리 운영 컨설팅 및 의료 인력 교육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²⁵³⁾

부처 간 융합은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림청이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진행하고, 해양수산부가 인근 어민 소득 보전을 위한 양식기술 보급을 전파하는 것으로 연계되었다.²⁵⁴⁾ 그러나 해당 사업의 연계 및 융합사업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연계융합사업은 유·무상 연계, 무상 간 연계, 부처 간 연계 외에도 공공-민간 협력과 다자협력 및 국제기구 연계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ODA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분절화된 사업을 사전에 조율하여 연계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처 전략 사업

1) 기획재정부

(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정책 지식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경제발전경험공유

253) 관계부처 합동(2024a), p. 297.

254) 관계부처 합동(2023.2.9.), p. 286.

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출범하였다.²⁵⁵⁾ 이 사업은 협력국 맞춤형 연구와 정책 자문을 통해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한국의 개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KSP는 협력국의 요청을 바탕으로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며, 부문별 전문성을 갖춘 총괄·수행기관²⁵⁶⁾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KSP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정책 연구와 자문을 통해 협력국 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수요에 따라 정책 자문사업²⁵⁷⁾, 공동컨설팅사업²⁵⁸⁾, 사례연구²⁵⁹⁾로 다양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²⁶⁰⁾, 2004년 이후 97개국 및 12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²⁶¹⁾

(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기획재정부는 2019년 2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력제고를 위해 KSP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을 신설하였다. EIPP는 협력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및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를 선정한 뒤 해당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관련 인프라 사업 기획, 소요 자원

255) KSP, KSP 소개-KSP Way(검색일: 2025.1.6.)

256) 경제·사회정책 분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건설·인프라 분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산업·무역·투자 분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각각 총괄 및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KSP, KSP 소개-사업 운영-주관기관(검색일: 2025.1.6.))

257) 정책 자문사업 유형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첫째, 현지조사 및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정책 자문, 둘째, 협력국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책 기획 및 실행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역량강화연수, 셋째, 한국 전문가를 협력국에 파견하여 정책 개선 및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자문관 파견이 있음(KSP, KSP 소개-사업운영-협력방식(검색일: 2025.1.6.))

258) 공동컨설팅 사업은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의 지역 전문성과 KSP의 정책 전문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KSP, KSP 소개-사업운영-협력방식(검색일: 2025.1.6.))

259) 사례연구는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식공유를 위한 실증적인 지식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KSP, KSP 소개-사업운영-협력방식(검색일: 2025.1.6.))

260) KSP, KSP 소개-사업운영(검색일: 2025.1.6.)

261) KSP, KSP 소개-KSP Way(검색일: 2025.1.6.)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3년 이상 집중적으로 제공한다.²⁶²⁾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에 따르면, 총 5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케냐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2024년에 종료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방글라데시 대상의 신규사업이 2025년부터 시작된다. 2024년에 종료된 사업의 성과 확인은 어려우나, 심화된 중장기 국가 대 국가 정책 자문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상생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⁶³⁾

2) 산업통상자원부

(1) 생산기업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도상국 현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현지 판로개척을 연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도국 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을 추진하고 있다. TASK 사업은 식품가공, 섬유, 농기계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섬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현지 기업에 방문하여 정밀 진단을 수행한 후, 공정 효율화, 품질 향상 등을 목표로 종합적인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²⁶⁴⁾

(2) 생산기업현장애로기술(TASK) 센터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베트남 생산현장애로기술(TASK) 센터 조성 및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TASK 센터 조성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262) 한국개발연구원(2020), p. 25.

263) 관계부처 합동(2024a, p. 57, 68; 2025a, p. 57)

264) KIAT(2022.5.11.)(검색일: 2025.1.31.)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요 산업 분야의 전문가 맞춤형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켜 협력국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장치·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²⁶⁵⁾ 이 사업은 기존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사업(2018-2020), 파라과이 자동차부품 TASK 사업(2019-2021)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된 형태이며,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에 따르면 총 3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²⁶⁶⁾

3) 현장 중심 사업

(1)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농촌진흥청은 개발도상국 현지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소농의 소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기술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을 추진하고 있다.²⁶⁷⁾ KOPIA 사업은 수원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KOPIA 센터 설치를 요청한 후, 외교부와 농촌진흥청 간 업무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검토·심의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 사업의 주요 특징은 수원국이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KOPIA 사업은 각국에 설치된 KOPIA 센터 중심으로 운영된다. 농업기술전문가(민간 포함)를 개발도상국 현지 KOPIA 센터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KOPIA 공식 웹사이트 기준으로 총 22개국²⁶⁸⁾에서 센터가 운영

265) KIAT(2023.5.3.)(검색일: 2025.1.31.)

266) 관계부처 합동(2025a), pp. 134-135.

267) KOPIA(검색일: 2025.1.31.)

268) 현재 KOPIA 센터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CIS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파키스탄에서 운영 중이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케냐,

중이다.²⁶⁹⁾

(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보건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을 통해 모자보건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 결핵 등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응급의료 체계 강화, 유·무상연계 및 건강보험 제도 컨설팅,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지원, 보건의료인적 역량강화 등의 보건의료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OFIH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총 23개 국가²⁷⁰⁾에서 보건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국가²⁷¹⁾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²⁷²⁾ 해외사무소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사업 수행, 지속적인 모니터링, 현지 협력 강화, 보건협력 채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협력국의 보건 정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²⁷³⁾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에서 활동하고 있음. 중남미 지역에서는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과테말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CIS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69) KOPIA, KOPIA 소개, 국가별 사업현황(검색일: 2025.1.31.)

270) 아시아 지역에서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중국, 키르기스스탄, 피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모잠비크, 르완다, 케냐, 남수단, 세네갈, 짐바브웨, 에리트리아가 사업 대상국임. 중남미 지역에서는 볼리비아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음

271) 해외사무소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272) KOFIH(검색일: 2025.3.26.)

27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21), p. 7, 12, 17, 23.

4) 민간 협력 중심 사업

(1) 혁신적개발협력사업(DIP)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개발협력사업(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 효과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²⁷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FS: Inclusive Business Solution)²⁷⁵⁾,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²⁷⁶⁾의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개발협력에서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²⁷⁷⁾ DIP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투자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자격 기준, 프로젝트 기간 및 운영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²⁷⁸⁾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협력에 적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⁷⁹⁾

274)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소셜 벤처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 사업에 적용하여,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임. 이를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275)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직면한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 및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충족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됨

276)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 지역, 방식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이 프로그램은 학습 결과를 내재화하여 KOICA 내 타 사업 유형으로 신규 사업 모델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277) KOICA(검색일: 2025.2.3.)

278) 한국국제협력단(2024), p.13.

279) 한국국제협력단(2023.6.), p. 5, 9.

(2) 시민사회협력사업

한국국제협력단은 1995년부터 정부,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민간의 인적자원, 지식, 기술, 사업역량 및 재원을 활용해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민간참여형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우수파트너 육성 및 모델사업화 프로그램,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및 DAK 정책협력사업, 성과관리 지원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총 80개 기관이 참여하여 31개국에서 130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²⁸⁰⁾ 시민사회협력사업은 국내 NGO, 대학 등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 유형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사업은 기간과 규모에 따라 진입형, 성장형, 전략형 파트너십으로 분류하며, 현지 기반의 사업 추진 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성과기반 관리가 가능한 사업 수행을 유도하고 있다.

제3절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델(안)

1.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 구성 전략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협력국의 복합적인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패키지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²⁸¹⁾ 이에 따라 해양수산 ODA 사업

280) 한국국제협력단(2025)

281) 관계부처 합동(2025c), p. 2.

도 단일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기반 시설 구축, 산업 발전,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보호, 교육 및 역량 개발, 법·제도 정비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패키지형 접근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타 분야와의 부처 간 연계, 민간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전략안은 국내외 수요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 패키지 사업 모델(안)을 제시한다.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국무조정실, KOICA 등)²⁸²⁾, 국제기구(GGGI, PEMSEA 등), 민간업체(한국원양산업협회²⁸³⁾, 현지합작회사 등), 학계(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등), 시민사회 및 NGO(굿네이버스 등)²⁸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타 부처 및 기관의 협력 기대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의 사업 추진 방향성과 연계하여 통합 모델로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본 전략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발굴 방향인 K-OEI의 중점 전략을 SDG 14의 세부 목표와 정합하도록 재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패키지형 해양수산 ODA 사업 모델을 설계하였다. 여기에는 협력 국 맞춤형 정책 자문(KSP), 법·제도 정비(EIPP), 산업기술 이전(TASK), 현지 거점화(KOPIA·KOFIH 센터 모델), 민간혁신기술 적용(DIP, CTS, IBS) 등 기존 타 부처의 전략과 운영 방식을 반영한 실행 방식도 포함된다.

아울러 기존 해양수산 ODA 사업이 직면했던 도전과제(우선순위의 일관성 강화,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제

282) 한국수산자원공단 ○○○ 대리, ○○○ 전문관(2025.3.24., 대한민국 부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주임연구조사원(2025.3.18., 대한민국 부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2025.3.19., 화상 회의), 국무조정실 ○○○ 사무관(2025.2.10., 4.14., 유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교수, ○○○ 교관(2025.3.18., 대한민국 부산), 한국국제협력단 ○○○ 실장, ○○○ 과장, ○○○ 대리(2025.4.22., 대한민국 성남) 등 참여하였으며 발간 시 개인정보 삭제 요청함

283) 한국원양산업협회 ○○○ 부장, ○○○ 과장(2025.3.21., 화상 회의) 등 참여하였으며 발간 시 개인정보 삭제 요청함

284) 굿네이버스 ○○○ 팀장(2025.3.25., 화상 회의) 등 참여하였으며 발간 시 개인정보 삭제 요청함

도적 체계 보완, ODA 연구 기반 확대)를 극복하기 위해 <표 4-5>와 같이 전략적 방향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각 추진과제는 과제 성격에 따라 본 장 패키지 사업(안), 제5, 6장에서 구체화하였다.

<표 4-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도전과제 극복 방향 및 추진과제

도전과제	극복방향	추진과제	비고
우선순위의 일관성	우선순위 명확화 및 전략화	• 해양수산부 전체의 ODA 목표 수립	제6장
		• K-OEI, 대외전략, SDGs 종합 반영	제4장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패키지 사업 기획 및 참여	• KOICA 시그니처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식량안보 참여
		•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 개발	제4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민간 및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 구체화	• 참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6장
		• 참여 가능한 구체적 사업(안) 개발	제4장
제도적 체계 보완 및 연구 기반 확대	세부 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 추진	• 현장 관리 체계 마련	제6장
		•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 개선	제5장
		• 기존 제도 개선 및 신규 제도 개발	제6장

자료: 저자 작성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 ODA 패키지형 접근을 ① 산업 인 재 확보 패키지, ②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③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지원사업 패키지, ④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 패키지, ⑤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등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체화하였다. 각 유형은 협력국의 수요 기반, 국내외 실행 주체의 협업 가능성, 연계 가능한 유·무 상 자원, SDG 14의 달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이 설계되었다.

이러한 패키지형 접근은 단일 사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해양수산 분야 발전 과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각 패키지는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패키지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를 촉진하고, 단계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표 4-6〉에서는 상기 추진 방향에 맞춰 유형별 패키지 사업(안)에 K-OEI 세부전략과 SDGs 세부 목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패키지가 단순한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임을 알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이 국제사회의 주요 어젠다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6〉 K-OEI 및 SDG 14의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안) 반영 방향

K-OEI 중점 전략	연계되는 SDG 14 세부 목표	패키지 사업(안)명
해양수산 인재 양성	14.a 해양과학 연구 및 기술 이전 강화 14.c 국제해양법(UNCLOS) 이행 강화 14.4 과학적 어류자원 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14.7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경제 이익 확대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14.4 과학적 어류자원 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14.6 남획 및 특정 수산보조금 금지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인의 시장 접근성 확대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기후위기 대응	14.3 해양 산성화 대응 및 영향 완화 14.4 과학적 어류자원 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14.5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생태계 보전 14.7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경제 이익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해양환경 보호	14.1 해양오염 및 해양폐기물 저감 14.2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복원 및 보호 14.4 과학적 어류자원 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14.5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생태계 보전 14.6 남획 및 특정 수산보조금 금지 14.7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경제 이익 확대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수산 패키지 사업 모델(안)

앞서 제시한 해양수산 패키지 사업 구성 전략에 따라 ①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②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③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지원사업 패키지, ④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 패키지, ⑤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등 총 다섯 가지 사업 모델(안)을 개발하였다. 각 모델은 대상 권역 및 주요 국가, 사업의 핵심 목표와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주요 추진 내용 및 협력 방식,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들 사업 모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그중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안)를 최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 이는 협력국과 현지 유관기관의 수요와 의지, 해양수산부 관계기관의 수행 역량, 협력 부처의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기반한다. 나아가 제5장에서는 각 패키지 사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안)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패키지 사업(안)은 실무 차원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화되었으나,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사업전략협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1) 대상 권역 및 주요국가

우리 정부는 「25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계획」에서 제시한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전략’을 이행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

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지역에서는 기존 협력 성과의 확산을 위해 대형 시그니처 사업, 타 공여국과의 공동 사업, 민관협력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재난 및 자연재해 예방, 인력 양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농업·보건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²⁸⁵⁾

이러한 권역별 전략을 반영하여, 본 사업은 아프리카와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케냐, 태평양 도서국, 가나를 핵심 협력 국가로 설정하였다. 케냐는 동아프리카 최대 항구인 몸바사(Mombasa)항을 중심으로 해운·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해기사 양성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가나는 어장 내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서아프리카의 주요 해운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선원 역량 부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서 해양 산업 의존도가 높아 해양 기반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2) 사업 핵심 목표, 구성 요소 및 협력 가능 기관

본 사업은 협력국의 해양수산 분야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 개발 패키지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우리나라 또한 본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를

285) 관계부처 합동(2025a), p. 20.

구축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해기사(상선)·어선원·오퍼버 역량강화를 통해 협력국 내 해운·어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둘째,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국 정부가 자국 상황에 맞는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병행한다. 셋째,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고, 연수·인턴십·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 양성과 실제 고용이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KOICA, 기상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IMO, FAO, RFMO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물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국내외 민간기업 및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협력국 내 자생적 산업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핵심 추진 내용 및 협력 모델

가.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케냐 정부의 「제4차 중기개발계획(2023~2027)」은 해운·해양 분야의 인재 양성을 청색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양교육기관 육성, 청년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Vijana Baharia) 운영, 수산 자원 개발, 청색 경제 투자 등을 추진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케냐는 국제 해운노동시장 진출을 통한 외화 유입 증대뿐 아니라, 국내 해양 안전 관리 능력 향상, 청년 고용 확대, 산업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활용 기반 마련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²⁸⁶⁾

해기사는 일반적으로 어선 해기사와 상선 해기사로 구분된다. 개발도상국인 협력국에서는 원양어선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어선 해기사보다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상선 해기사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케냐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 일본, 중국, 스페인 등 해운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에 해기사를 공급할 때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우리나라와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된 바 있어 양국 간 해기 인력 교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 기준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승선 실습이 필수적이거나, 케냐 내에서는 실습선 부족, 연수생 정원 미달, 교원 수급 문제 등으로 실습 교육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케냐 현지에서 양성된 연수생들에게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승선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해기사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더불어, 해양 산업의 안전성 확보는 케냐 해양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해상 교통의 안전 확보와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의 구축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기사를 양성하는 것뿐 아니라, 해양 산업 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본 사업의 핵심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기사 승선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케냐 연수생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2개월간의 승선 실습 교육을 실시한 후, 국내 선사와 연계하여 10개월간의 유급 인턴십을 운영함으로써 총 12개월의 실습 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국제 해기사 면허 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12개월간의 승선 경력을 충족시키는 조치이다.

286)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Republic of Kenya(검색일: 2025.4.18.) pp.18-182

이와 같은 실습 과정을 통해 연수생은 해기사 면허 시험 자격을 갖추게 되며, 실습 종료 후에는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즉, 케냐 연수생들이 국제 해기사 면허 취득 요건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현지 선사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중심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해상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케냐 현지에서 각국으로 송출되는 선원을 대상으로, 해상 안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계된다. 나아가, 본 사업의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의 최신화를 도모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은 케냐의 해상 안전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정책 담당자, 기술 전문가 등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사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안전공단(KOMSA: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이 주관할 수 있다.

셋째, 일반 보건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선원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케냐의 중점협력 분야인 보건·의료 분야 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일부 내용으로서 선원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밀폐된 선박 내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해기사의 직무 특성상, 승선 전 건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고 예방과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러한 선원 대상 검진 항목은 기존의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 내에 통합 운영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특화 검진은 민간 선사의 비용 부담 또는 후원을 통해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실질적인 보건 협력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KOICA 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 가능하다.

넷째, 해상 안전 대응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상청이 필리핀에서 수행 중인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2022~2025)’에서 착안하여, 해상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해상 안전 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기획한다.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연계·활용함으로써 해양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케냐의 해양 산업 위험 관리 정보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섯째, 해양 안전 및 교통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의 KSP를 활용하여 케냐 정부의 해양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 개발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는 정책 수요 진단, 제도 분석, 정책 로드맵 설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케냐의 해양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제 해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표 4-7〉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안)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세부내용
해기사 승선 실습 교육	• 해양수산부	• 해기사 승선 실습 교육 제공(2개월)
	• 민간기업	• 선사 연계 유급 인턴십 기회 제공(10개월) • 선사 문화 교육 제공
해상 안전 교육	• 해양수산부	• 해상 안전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제공(1주)
일반 보건 및 건강검진 제공	• KOICA 또는 보건복지부	• 건강 검진 프로세스 표준화 및 운영 • 선원 특화 건강 관리 프로그램 구축
	• 민간기업	• 건강 검진 비용 제공
해상 안전 대응 정보 제공 플랫폼	• 기상청	• 해상 안전 대응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플랫폼 전파 • 시스템 운영 위한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해양 안전 정책 역량강화	• 기획재정부	• 해양 안전 정책 개발 지원 • 해양 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자료: 저자 작성

나. 가나 어선원 양성

가나 수산업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체 인구의 약 10%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산업은 가나 GDP의 약 0.94%를 차지하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창출하는 핵심 경제 분야이다.²⁸⁷⁾

가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테마(Tema)는 수도 아크라에서 약 25km 떨어진 항구도시다. 테마항은 가나의 주요 어업 거점 중 하나로, 가나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참치와 같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어획하는 트롤선 등 대형 원양어선이 정박한다. 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인 카누를 이용한 연안어업에 종사하며, 정어리, 멸치 등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테마항에서 근무하는 많은 선원들은 외국인 선장의 지도 아래 관련 기술을 습득하나,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기계공 또는 엔지니어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²⁸⁸⁾

가나 ‘수산업법 2002’ 제625조 제50항은 가나 영해에서 조업하는 산업 어선 및 관련 선박의 선주에게 선원 고용의 최소 75%를 가나 국적자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²⁸⁹⁾ 그러나 2023년 3분기 기준, 테마항에 정박한 상업 어선 41척과 참치 어선 22척 중 가나 국적 선장은 8~10명 수준에 그쳐 법적 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²⁹⁰⁾

현지 선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한-가나 합작 선사들은 양국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선원 구성 비율 등 법적 요건이 일부 완화된 상태에서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가나 국적 어선원의 절대적인 부족에 대한 임시적 대응일 뿐, 구조

28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a), p. 12.

288) 위의 책, p. 18.

289)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Development(2022), Fisheries Act, 2002 Act 625

290)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a), p. 12.

적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은 지역 개발과 어선원 인력난을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가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산업 기반 일자리 연계는 현실적인 지역 개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가나 국적 어선원의 체계적인 양성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목표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테마 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사업의 핵심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부 주도로 단기 실무 중심의 어선원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이 과정은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직업훈련 형태로 구성되며, 해양수산부는 가나 어선원 양성을 위한 단기 실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교재를 제작·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나 국적 선원들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교육 공간과 시설을 확보한다. 가나 테마 지역에 위치한 지역해양대학교(RMU: Regional Maritime University)는 서아프리카에서 해양 교육 및 훈련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항해, 해양 공학 및 상업 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EDCF에서 추진 중인 지역 해양대학교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공간을 임차하고,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첫 번째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해양대학교 측과 지역해양대학교 교수진과 공동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세부 추진과 관련된 방안도 이미 긍정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셋째, 일반 보건 서비스 및 위생 교육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어선원에

국한되지 않고 가나의 중점협력 분야인 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테마 지역의 사회 보건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아무리 선원으로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기초 보건의 개선된 상황에서 자라야 한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초 보건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어업 종사자들의 질병 예방을 도모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KOICA 또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할 수 있다.

넷째, 문해 교육을 제공한다. 테마는 연안 지역에 위치하여 수도권에 비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특히 조업 시기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어업인이 많아, 이들과 함께 이동하는 아동·청소년은 해당 지역의 등록 인구로 분류되지 않아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나 선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많은 어선원들이 문해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서 작성, 안전 교육 수강, 업무 지시 이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역 개발 측면에서 아동 및 청년에게 최소한의 읽기·쓰기·기초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통해 노동 시장에 진입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나는 영어 외에도 현지어가 사용되므로, 문해 교육은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어선원 양성 교육과 연계하여, 민간 선사 등과 협력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병행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유급 인턴십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교육을 통해 검증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료생은 실제 일자리로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본 사업은 어선원 양성 프로그램이 단순한 직업훈련을 넘어 지역 내 실질적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4-8〉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안)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세부내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해양수산부	• 교육 과정 개발 • 교육 기자재 지원 및 교재 개발 • 교육 과정 운영
	• 민간기업	• 전문 강사 파견 • 선사 문화 교육
교육 공간 및 시설 확보	• EDCF	• 교육 공간 제공 (임차) • 교육 시설 및 환경 확보
보건 및 위생 교육	• KOICA	• 기초 보건 및 위생 교육 제공
문해 교육	• 국제기구 또는 NGO	• 기초 문해 교육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 민간기업	• 유급 인턴십 기회 제공 • 취업 기회 제공

자료: 저자 작성

다.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본 사업은 태평양 도서국(태도국)이 직면한 IUU 어업 확산, 해양자원 남획, 과학 기반 수산자원 관리 역량 부족 등 해양자원 거버넌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형 해양 ODA 패키지 사업이다. 기존 옵서버(Observer) 중심의 인력 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자 모니터링 기반의 과학적 어업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IUU 어업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연안국의 수산업 기반 약화, 고용 불안, 시장 왜곡 등 복합적 피해를 초래하는 국제적 문제다. 특히 광활한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보유하고 있지만 감시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국의 경우, 단속 회피와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이에 RFMO 등 지역기구나 FA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연계와 규범 이행이 핵심 대응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과학 기반 정보 수집, 제도 표준화, 법적 대응 역량 확보 등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국가 간 협력과 민간 참여도 중요하다.

한편, 옵서버(Observer)는 어선에 직접 승선해 조업 활동을 관찰하고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수집하며 국제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인력이다.²⁹¹⁾ 이들은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등 지역 내 조업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지역수산기구(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의 위임을 통해 선발되며, 자원 남획 방지 및 국제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지역수산기구는 연승선 조업일의 5% 이상 옵서버 승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규범의 이행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²⁹²⁾

태도국 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지역수산기구의 인증을 받은 옵서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물리적 거리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교육 접근성이 낮고 국가 간 양성 체계 차이로 역량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의 인증 기준은 국가 단위 운영체계에 집중되어 있어, 개별 옵서버의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²⁹³⁾

태도국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주요 입어국으로, 어업 협상 과정에서 자국 옵서버의 승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투발루는 우리 원양어선이 진출한 핵심 입어국 중 하나로, 일정 수의 옵서버를 자체적으로 양성해 왔으며, 교육 거점과의 거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적 이점도 갖고

291) 한국수산자원공단(검색일: 2025.3.27.)

292) 해양수산부(검색일: 2025. 3.27.)

293) 2025년 4월 기준

있다. 또한, 옵서버 출신 인사가 고위 정책 결정권자로 활동하고 있어, 태도국에 비해 옵서버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정책 연계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옵서버의 실질적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 전반의 정책적·행정적 개선 여지가 크다. 특히 정부 부처의 제한된 예산 편성과 운영 능력으로 인해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정책 컨설팅 수요가 산업계와 협력국 정부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태도국의 IUU 어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된 옵서버들의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며, 이러한 역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을 함께 지원하는 데 있다.

본 사업의 핵심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UU 어업 대응을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태도국은 광범위한 해역과 도서로 인해 물리적 감시가 제한되며, 기존 옵서버 중심 체계만으로는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사업은 위성 기반 원격탐사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활용해 조업 위치, 시간,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감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감시 장비는 한국 측 기술협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태도국 해양수산 행정기관을 통해 운영·유지관리 역량을 병행 강화한다.

둘째, 국제협력 기반의 IUU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본 사업은 FAO, RFMO, WMU 등과 협력하여 IUU 관련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선박 식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동 블랙리스트 운영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현행법 분석과 단속 절차 교육을 통해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행정·사법 기관의 실무 능력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한다. 이 과정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국내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셋째, 옵서버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투발루에서 양성된 옵서버들이 최

신 기술과 규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3~4주간 한국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 연수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한국 민간기업 또는 명예해양수산관의 협조를 통해, 오피서버 대상 선사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기초 실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오피서버의 현장 적응력과 한국어 이해도를 높인다.

넷째, 오피서버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한다. 현재 오피서버 제도는 전통적인 인간 모니터링 방식에서 전자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 과도기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밀한 자원 관리와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이 필수화되고 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제기구, 지역수산기구가 협력하여 전자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지원하고, 오피서버 대상 데이터 분석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과 국제 기준 이해도를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국가 예산 및 행정 정책 개선을 지원한다. 태도국의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 편성 부처와 행정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컨설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KSP를 활용하여 태도국 정부가 오피서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배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해양수산 인재 육성 제도의 개선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와 연계하여, 해양수산 인재 양성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통한 장기적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오피서

버는 조업 현장에 승선하여 다양한 어획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수산자원 관리 정책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인간 모니터링에서 전자 모니터링 체계로의 이행기(transition period)인 점을 고려할 때, 오피서버의 기능은 단순 현장 감시자에 머물지 않고, 과학적 해양수산 인재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기존에 양성된 오피서버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해양 생태계 분석, 어장 관리, 자원 평가 등 과학적 기반이 요구되는 분야에 실질적인 전문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측과는 오피서버 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투발루 수역의 자원 현황을 정밀히 파악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설계에는 기획재정부의 KSP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실질적 연구 및 인재 육성 과정에서는 한국의 해양수산 연구기관 및 대학,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일곱째,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투발루는 군도 형태의 지리적 특성과 소규모 인구 구조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인프라가 미비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본 사업은 특정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투발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 보건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단기적으로는 오피서버 인력의 고용 지속성과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KOICA는 태도국의 보건·위생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적합하며, 공공·민간 연계 모델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9〉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안)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세부내용
IUU 어업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WMU, FAO 등 관련 국제기구	• 위성,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기반 어업 활동 감시 체계 도입 • 국제협력 기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국제규범 및 법적 대응 인적 역량강화 • IUU 어업 방지 위한 법 제도 개선
오피서버 보수 교육	•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 한국 초청 연수 통한 보수교육 제공
	• 민간기업 (또는 명예해양수산관)	• 선사 문화 교육 제공 • 기초 실무 한국어 교육 제공
데이터 분석 역량강화	• 국제기구 • 지역수산기구 • 해양수산부	•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분석 교육 제공
국가 예산 및 행정 정책 개선	• 기획재정부	• 예산 및 행정 체계 개선 정책 컨설팅 제공
해양수산 인재 육성 제도 개선	• 학계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인재 양성 및 유지 제도 지원 • 과학 기반 해양수산 자원 데이터 확보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 KOICA	• 건강검진 제도 구축 및 재정비 • 해양 안전 연계 건강 보호 방안 도출

자료: 저자 작성

(4) 기대효과

산업 인재 양성 패키지 사업은 협력국이 기존에 보유하고 운영 중인 인재 양성 체계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인위적인 제도 이식이 아닌 현지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각국의 제도와 현실을 존중한 맞춤형 개입을 지향한다.

특히, 본 사업은 협력국 인재의 실무 현장 투입 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교육과 산업 수요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양성된 인재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교육 종료 이

후에도 인재가 산업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며, 협력국은 지역 기반 산업 개발과 청년 고용 확대를,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분야 인력난 해소라는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아울러, 해양수산 산업은 단순 기능 인력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전문인력이 아니면 현장에 투입이 어려운 산업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타 부처의 인재 양성 사업이 주로 학위 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장기 연수 중심으로 설계되는 반면, 해양수산부는 면허 기반 실무 교육과 직업 보완 교육에 특화된 실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과 부처 간 역할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 후 곧바로 산업에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산업 인재 양성 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개도국의 해양법 집행 역량과 국제 해양규범 이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협력국 내 수산·해운·항만 인프라 발전을 견인할 고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 정책 지원을 통해 수산·해운·항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넷째, 민관 협력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도국 청년 인재들이 글로벌 수산·해운·항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그 외 모델

앞서 제시한 산업 인재 양성 패키지는 실질적인 협의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세부 내용을 설계한 사업이다. 반면, 이어지는 패키지 유형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기본 방향을 정리한 구상안 형태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구체적인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각 사업 유형은 해양수산부의 축적된 사업 경험과 실행 역량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성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후속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해양수산부의 부처 ODA 사업은 전반적으로 추진 이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수의 사업이 성과 도출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향후 실제 협력국 수요, 사업 효과, 성과 기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각 패키지 모델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가. 대상 권역

FAO의 『2024 세계 수산업 및 양식업 현황 보고서(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4)』에 따르면, 전 세계 수생동물 생산량은 아시아(70%)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중남미 및 카리브해(9%), 아프리카(7%) 순으로 나타났다. 어업 및 양식업 분야의 고용률 또한 아시아가 85%로 가장 높고, 아프리카 10%, 중남미 및 카리브해 4%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²⁹⁴⁾ 이는 수산업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단순한 식량 자원 이상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294) FAO(2024), pp. xxi-xxii.

그러나 해당 권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어획 후 부패율이 높아 가공·저장·운송 과정에서의 손실이 크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냉장·냉동 시설, 위생 가공 설비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다. 또한, 원료 수산물 위주의 수출 구조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적이며, 수산업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고도화된 가공 수출 산업 지원 제도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내륙국의 경우에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내수면 어업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적·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수로 기반의 물류 체계가 미비해 수산물의 유통 효율성이 낮고, 소비지 또는 수출 항구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항만 및 물류 네트워크가 부족한 일부 연안국에서도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이 취약하여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권역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단계 이후 가치사슬이 단절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가공·유통·물류 전반에 걸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패키지 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주요 대상 권역으로 설정하고,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시스템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였다. 본 사업은 전 주기의 연계성과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협력국의 수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사업 핵심 목표, 구성 요소 및 협력 가능 기관

본 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수산업 인프라 구축, 양식 기술 전수,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 및 포장·라벨링 기술 지원, 수산업 정책 개선, 보건·위생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하는 종합형 ODA 패키지 사업이다.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협력국의 수산물 유통·가공·물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제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국제 무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사업은 SDG 14(해양 생태계 보전)는 물론, SDG 2(기아 종식), SDG 9(산업·혁신·인프라), SDG 11(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SDG 13(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개발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다.

세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항과 배후단지, 물류·유통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연결하여 공급망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양식 기술을 이전하여 생산성과 위생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여 수혜자들의 단백질 섭취 기회를 높인다. 이는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라벨링·포장 기술 지원을 통해 수산물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현지 가공 산업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유통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넷째, 협력국의 수산업 정책 개선을 위해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위생·품질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식품 안전성을 제고한다. 수산물은 부패에 취약하여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식중독을 포함한 전염병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깨끗한 물 확보가 어려워 비위생적 환경에서 수산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산물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가공·유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본 사업은 위생시설 정비, 식품 안전 교육, 기본 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산업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동시에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가공 단계에서 여성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모자보건 프로그램 및 영양 개선 사업을 병행할 경우, 지역사회 보건 향상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산업은 국가별 발전 단계와 산업 특성에 따라 인프라 구축, 기술 이전, 정책 개선, 보건·위생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복합적 산업 분야이다. 특히 유통·물류 단계에서는 항만 및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본 사업은 수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는 다섯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설계되었으며, 구성 요소별로 협력 가능한 기관을 전문성과 기능에 따라 제안하였다. 해양수산부, EDCF,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KOICA,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각 구성 요소에 참여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구성은 <표 4-10>에 정리하였다.

본 유형은 현재 구상(안) 단계로, 구체적인 대상국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별 수산업 발전 수준과 어획 또는 양식 등 주요 산업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구성 요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구성 요소를 조합·적용하여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다. 그 예시는 <표 4-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안)

구성요소	핵심 내용	협력가능 기관
수산업 인프라 구축	• 어항 및 배후단지 조성 • 물류·유통 시스템 정비 • 수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수산물 가공·저장 시설 확충 • 기반 시설 접근성 개선	해양수산부, EDCF
양식 기술 이전	• 적정 기술 기반 양식 생산성 제고 • 어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양식 사료 수급 체계 구축 • 양식장 운영 역량강화 • 양식으로 인한 환경 오염 대응 방안 • 종 보존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민간기업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기술 지원	• 고부가가치 수산물 개발 • 라벨링·포장 기술 지원 • 수출 마케팅 및 판로 개척 • 수산물 가공 기술 이전 • 수출품 품질 관리 및 인증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민간기업
수산업 정책 역량강화	• 위생·품질 관리 기반 정책 컨설팅 •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위한 규제 및 정책 개발 • 수산업 통계·정보시스템 정비	기획재정부
보건·위생 개선	• 위생 시설 개선 • 위생 교육 프로그램 • 모자 보건 프로그램	KOICA, 보건복지부
식량안보	• 식품 안전 교육 • 식량 취약계층 대상 수산물 지원 • 수산물로의 동물성 단백질 수급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KOICA, NGO, 지역사회

자료: 저자 작성

〈표 4-11〉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주요 수요	적용 가능한 구성요소 조합
양식업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	• 양식 기술 이전 • 보건·위생 개선 • 수산업 정책 개선
수산물 가공 고도화, 지역 경제 활성화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포장 기술 지원 • 양식 기술 이전 • 수산업 정책 개선
기후변화 대응	• 양식 기술 이전 • 수산업 정책 개선 • 수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위생 개선	• 보건·위생 개선 • 모자보건 프로그램 • 수산업 정책 개선

자료: 저자 작성

다. 기대효과

수산 분야는 협력국의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이나, 국가마다 수산업 발전 단계가 상이할 뿐 아니라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이에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은 고정된 사업 모델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각국의 산업 발전 수준과 지역적 특수성에 맞춰 구성 요소를 탄력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 단계에서는 남성,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와 함께 가공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모자보건 프로그램과의 연계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위생적인 가공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수자원 관리 및 공중위생과의 통합적 접근이 병행될 경우 지역사회 개발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유통·물류 인프라 개선 관련 사업은 국토교통부, EDCF 등 타 부처나 기관을 통해 별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항만 타당성 조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DA 중심의 개발협력사업이라는 범위를 고려하여 도로 및 항만 구축과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 부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주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본 사업 유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는 각 사업 요소의 유기적 작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실현함으로써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하여 협력국의 식량안보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사업 요소 간 유기적 연계와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수산업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내수 시장 확대는 물론 수출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보건·위생 분야의 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는 수출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가. 대상 권역

노트르담 글로벌 적응 지수(ND-GAIN: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dex)의 기후변화 노출 하위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192개국 중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노출된 상위 10% 국가(19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개

국이 군소도서개발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에 속한다. 이들 국가는 해수면 상승, 열대성 사이클론,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험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²⁹⁵⁾

태도국은 대부분 군소도서개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 의제로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협력사업이 다수 추진되어 왔으나, 타 부처의 경우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적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사업보다는 단기 연수 중심의 협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형 사업은 대부분 해양수산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타 부처가 주관한 사업이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해양수산 관계기관이 맡아 진행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패키지형 ODA 사업의 핵심 권역으로 태평양 도서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어서 유사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역시 주요 협력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태평양과 카리브해는 모두 지리적으로 대륙 간 해상 항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외교적 중요성이 크며,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의 우선 협력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본 패키지형 사업은 태평양 도서국과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을 주요 대상 권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기후위기 리스크를 완화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사업(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95) World Bank Blogs(검색일: 2025.3.26.)

나. 사업 핵심 목표, 구성 요소 및 협력 가능 기관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서 및 연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양 기반 인프라 구축부터 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기술 보급, 생태계 복원, 해운산업의 탈탄소화, 과학 기반 정책 역량강화에 이르기까지 다부문이 연계된 ODA 패키지형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핵심 목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서 및 연안국의 해양 회복력과 자립적 기후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주요 사업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 과학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체계를 마련한다. 해양 기후 관측소 설치, 위성 및 센서 기반 데이터 수집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협력국이 기후 관련 정보를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자체 분석 역량강화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생태 복원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다. 최근 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훼손이 심화되면서 군소도서개발국민의 생계와 삶의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다. 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맹그로브, 해초 등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블루카본 크레딧(Blue Carbon Credits)을 개발·활용함으로써 개도국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한다.

셋째, 해양 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소도서국의 기본 수요 충족을 위해, 해수 온도차·조류 등 해양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체계와 저에너지형 해수 담수화 기술을 실증·확산한다. 이를 통해 물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

하며,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점진적 자립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과학 기반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친환경 에너지 도입은 장기적 검증과 점진적 적용이 필요한 분야로,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체계가 필수적이다.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접근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과 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기후정보 기반의 정책 컨설팅과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협력국의 자립적 정책 수립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기구와 협력하여 국제 어젠다 형성에도 활용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단기적 조치와 장기적 전략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유형에서는 이를 다섯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각 요소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KOICA, 한국수자원공사, 민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협력 가능 기관을 제시하였다.

〈표 4-12〉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안)

구성요소	핵심 내용	협력가능 기관
해양과학 기반 인프라 구축	• 해양기후 관측소 설치 • 위성·센서 기반 해양기후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생태복원 및 블루카본	• 맹그로브·해초 복원 • 블루카본 크레딧 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산림청, 환경부, GGGI
해양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 태양광·풍력 등 해양재생에너지 실증 • 재생에너지 기반 저에너지형 담수화 기술 도입 및 확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KOICA, 수자원공사
과학적 정책 역량강화	• 공동연구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 기후정보 기반 정책 컨설팅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연구기관, 학계

자료: 저자 작성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역량 수준, 피해 양상, 대응 우선순위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유형 역시 앞선 유형과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 권역 및 국가별 수요에 따라 핵심 구성 요소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대한 적용 예시는 아래와 같다.

〈표 4-13〉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주요 수요	적용 가능한 구성요소 조합
해수면 상승, 식수 부족, 전력공급 문제	• 생태복원 및 블루카본 • 해양재생에너지 에너지 및 담수화 • 해양 인프라 구축
기후 재난 대응 및 기후 정보 부족	• 해양 인프라 구축 • 과학적 정책 역량강화
에너지 빈곤, 정책 역량 부족	• 해양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 과학적 정책 역량강화
연안 침식, 어업 기반 붕괴	• 생태복원 및 블루카본 • 해양 인프라 구축

자료: 저자 작성

다. 기대효과

기후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이슈로, 특히 군소개발도서국(SIDS)은 연안 침식, 생태계 파괴,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은 단기적 조치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대응 방식도 매우 다양하며, 고도화된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인적 역량 자체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협력국이 스스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과학적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패키지 사업은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을 종합적

으로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회복력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서 및 연안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 역량강화 및 블루카본 활용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기술을 도입하여 물·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자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해양 과학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이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3)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 패키지

가. 대상 권역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개발도상국들은 글로벌 물류 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낙후된 항만 및 물류 인프라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들 국가의 항만은 대부분 기본적인 하역 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동화와 디지털화 수준이 낮아 화물 처리 효율성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정보시스템 통합 부족으로 컨테이너 화물 추적, 세관 통관, 항만 운영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공급망 전반에 시간·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²⁹⁶⁾

이들 국가의 항만은 화석연료 기반 장비와 운송수단에 주로 의존하여 온

296) UNCTAD(2024), pp. 116-117.

실가스 배출의 주요 발생지로 지목되고 있다. 항만 내 선박의 대기 오염, 하역장비의 탄소 배출, 해양으로의 하수·폐기물 유입은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기후대응 및 녹색 전환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²⁹⁷⁾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인구 증가, 도시화, 제조업 확장에 따라 항만 물동량이 급증하며, 물류망 현대화가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형 연안국가와 내륙연계국가에서는 항만 중심 복합물류 허브 구축 수요가 높아지고, 친환경·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항만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 수출입 관문을 넘어 산업클러스터 및 지역경제 허브로서 항만 기능을 재편하는 움직임과 연결된다. 주목할 점은 스마트 항만 구축을 통해 ICT, 자동화, AI 등 디지털 기반 신산업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 중심의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실업률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국가 차원의 청년 역량개발 전략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다. 자동화 하역시스템 운영자, 항만 정보관리 전문가, 스마트 물류 설계 엔지니어 등 새로운 전문직 수요가 창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및 교육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²⁹⁸⁾

결론적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권역에서의 친환경 스마트 항만 및 물류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기반 시설 개선을 넘어 공급망 안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 고용 창출, 지역 산업 육성 등 다차원적 개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디지털 기술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 공여국의 국제개발 협력 전략에서 핵심 분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97) UNCTAD(2024), p. 115, pp. 124-126.

298) UNCTAD(2024), pp. 124-126.

나. 사업 핵심 목표, 구성 요소 및 협력 가능 기관

본 사업은 기후변화, 해양환경 오염, 탄소배출 증가, 항만의 비효율적 운영 등 복합적 해운·항만 분야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문 연계형 해양 ODA 패키지다. 해운·항만 탈탄소화, 저탄소 선박 보급, 항만 에너지 고효율화, 항행정보시설 개선, 미래지향적 항만 운영 역량강화 등 항만 운영과 물류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룬다.

핵심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항만과 물류 시스템이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후·환경 규범 이행을 지원하며, 지역 맞춤형 친환경 항만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력국이 글로벌 녹색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운·항만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은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기반을 조성한다. 항만 내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만 진·출입 화물의 철도 및 연안 해운 활용 확대를 위한 연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과정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EDCF 등과 협력하여 추진되며, 온실가스 감축과 물류 효율성 향상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한다.

둘째, 저탄소 선박의 보급을 지원한다. LNG, 메탄올, 암모니아 연료 등 저탄소 연료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도입을 촉진하고, IMO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 구성 요소는 해양수산부와 민간 해운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선박의 탈탄소화 촉진과 국제 해운 규범 준수의 이행력을 높인다.

셋째, 항만 에너지 시스템의 고효율화를 추진한다. 노후 하역시스템의

동력장치를 개선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항만 에너지 공급체계를 도입하여 운영비용과 탄소배출을 동시에 절감한다. 이는 산업 통상자원부, 항만공사, 민간 에너지기업의 공동 참여하에 추진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항행정보시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한다. 항로표지의 현대화 및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박 안전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와 재난 발생 시에도 항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회복력 있는 정보 인프라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가 주도하고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항만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친환경 항만 운영 인력과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전반적 역량을 제고하고, 해양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기후위기·재해 대응형 항만·임항 권역을 구축함으로써 항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환경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이 구성 요소는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관련 연구기관 및 지역 정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본 패키지 사업은 분야별 전문성과 국제협력 경험을 갖춘 국내외 기관의 역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처 간 연계와 다자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 항만 및 물류 부문의 기후 대응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항만 운영 모델 확산을 동시에 도모한다. 사업 구성요소는 <표 4-14>로 정리하였다.

협력국마다 수요와 추진 여건이 상이하므로, 본 패키지의 각 구성 요소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합 예시는 <표 4-15>에 제시하였다.

〈표 4-14〉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안)

구성요소	핵심 내용	협력 가능 기관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 친환경·디지털 항만 전환 지원(하드웨어) - 항만 진·출입 화물 철도 및 연안 해운 이용 확대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EDCF
저탄소 선박 보급	- 저탄소 연료 기술 적용 선박 보급 - IMO 등 국제협력 이행 지원	해양수산부, 민간업계 등
항만 에너지 고효율화	- 하역시스템 동력장치 개선 - 신재생에너지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업계, 항만공사 등
항행정보시설 개선	- 국제기준 부합 항로표지 구축 및 개선 - 항로표지 관리 역량강화	해양수산부 등
미래지향적 항만 운영 역량강화	- 친환경·디지털 항만 운영 역량강화 - 해양폐기물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역량강화 - 기후변화·재해 대응 항만·임항권역 구축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등

자료: 저자 작성

〈표 4-15〉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주요 수요	적용 가능한 구성요소 조합
항만의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	-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기반 조성 - 항만 에너지 시스템 고효율화 - 해양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역량강화
저탄소 선박 기반 확대	- 저탄소 연료 기술 적용 선박 보급 - IMO 등 국제협력 이행 지원
항행 안전성과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 항행정보시설 개선 - 기후변화·재해 대응 항만·임항권역 구축
스마트 항만 운영 및 관리 역량강화	- 친환경·디지털 항만 운영 역량강화 - 항만 정보시스템 개선 - 지역사회 기반 항만 운영 협력 모델 구축

자료: 저자 작성

다. 기대효과

해운·항만 부문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로, 특히 도서국과 연안국에서는 교통·물류의 필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기술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항만은 고밀도 에너지 소비시설인 동시에, 선박 진출입, 하역, 보관 등 다단계 공정을 수반하여 대기오염, 해양오염, 소음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저탄소 선박과 연계된 항만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국제 해운 규범 이행에도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사업은 해운·항만의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한 다부문 통합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도서국 및 연안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경제 및 교통안전성과도 연계된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였다.

본 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탄소 연료 기반 선박 도입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도국의 해운산업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물류망 내 지속가능한 운송 주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기반 항만 에너지 시스템 고효율화를 통해 항만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항행정보시설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형 항만·임항 권역 구축을 통해, 도서국의 항만 접근성과 항행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복원력을 높이는 회복탄력형 항만 운영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

넷째, 스마트 항만 운영 기술과 지역 연계형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항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항만관리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친환경 항만 기술, 스마트 물류 역량, 국제해양협력 경험을 접목하여, 개도국의 해운·항만 녹색전환을 주도하는 ODA 리더십을 확보하고, 한국형 항만모델의 국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녹색 해운 전환 역량과 자율적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촉진하며, 동시에 한국의 해양 ODA 정책이 국제적 탄소중립 이행 흐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가. 대상 권역

해양 환경 보호는 국지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권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쓰레기, 특히 플라스틱과 폐어구는 해양 생물자원 보호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물다양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인간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 해역에서는 ASEAN 회원국들이 ‘해양쓰레기 대응 행동강령(ASEAN Regional Action Plan for Combating Marine Debris)’을 채택하고 공동 감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²⁹⁹⁾

해양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어업 활동 중 버려진 폐어구로, 이는 회수되지 않으면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유발하며, 수산자원에 지속적인 피해를 준다. 유령어업은 IUU 어업의 한 형태이므로, 필요시 앞서 언급된 태평양 도서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내 IUU 어업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요소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

299) ASEAN(2021), p. 33, 44.

에 해양쓰레기는 수거 자체가 어렵고, 수거 이후에도 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인 기술적·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은 연안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접근법이다. 특히 해양 생태관광은 지역의 독특한 해양 생태계와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체 생계 수단을 마련해준다. 이는 과도한 어업 활동을 줄이고,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역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과 연결성을 반영하여, 본 사업은 특정 국가나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해양 생태계 보호 및 해양쓰레기 문제에 범세계적 접근을 지향한다. 특히, 두 사안이 상호 영향을 주는 점에 착안하여 동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 사업 핵심 목표, 구성 요소 및 협력 가능 기관

본 사업은 해양환경 훼손, 해양생물자원 고갈, 해양쓰레기 확산 등 복합적이고 상호 연계된 글로벌 해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다부문 연계형 해양 ODA 패키지 사업이다. 해양쓰레기 저감,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사회 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 해양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룬다.

본 패키지의 핵심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생태계 회복력과 자원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해양 규범의 이행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이 글로벌 해양 환경 보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국 내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폐어구 등 해양 유래 쓰레기의 수거-추적-재활용 등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IUCN, PEMSEA, GGGI 등 국제기구, NGO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쓰레기 대응 모델을 마련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한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대체 소득원으로 관광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MPA)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 해양관광 기업, IUCN, NGO와 협력하여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셋째,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보호종 지정 및 보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 기반의 자원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 이 구성 요소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IUCN, NGO, 민간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기반의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이다. 지역사회 주도로 해양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과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해양보전의 사회적 기반을 확산시킨다. 이는 NGO와 지역사회 주도의 참여형 모델을 통해 운영되며,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본 패키지 사업은 분야별 전문성과 국제협력 경험을 갖춘 국내외 기관의 역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처 간 연계와 다자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 해양 거버넌스 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모델 확산을 동시에 도모한다.

〈표 4-16〉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안)

구성요소	핵심 내용	협력 기관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의 수거, 추적, 재활용 체계 구축 •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 정책 수립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IUCN, PEMSEA, GGGI, NGO,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 해양보호구역(MPA) 기반 생태관광 • 지역사회 참여형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민간 해양관광기업, IUCN, NGO
해양생물 다양성 및 해양보호구역관리 강화	• 해양보호종 지정 및 보호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정책 연계 강화	해양수산부, 환경부, IUCN, NGO, 지역사회, 민간 연구기관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 해양 보호 인식 증진 캠페인 • 지역사회 기반 감시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NGO, 지역사회

자료: 저자 작성

협력국마다 수요와 추진 여건이 상이하므로, 본 패키지의 각 구성 요소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유형에서는 주요 소득원으로 해양관광을 제시하였으나, 협력국의 여건에 따라 필요시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패키지에 포함된 양식 기반 수산물 생산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해양관광 인프라가 미비하거나 관광 잠재력이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양식업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과 양

식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해양 생태계 보호라는 목적을 강조할 경우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내 태평양 도서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의 IUU 어업 대응 사업과 조합하여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유령어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법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와 불법어업 문제를 연계하여 대응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역 감시 인력 양성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해양 생태계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합 예시는 <표 4-15>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표 4-17〉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주요 수요	적용 가능한 구성요소 조합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쓰레기 관리	•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 해양생물 다양성 및 해양 보호구역 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지속가능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생물다양성 보존 및 정책 기반 마련	• 해양생물 다양성 및 해양 보호구역 관리 강화 •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 IUU 어업 대응

자료: 저자 작성

다. 기대효과

앞서 언급했듯,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과 폐어구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위협, 식량안보 저해, 인체 건강 피해 등 복합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회수와 친환경적 처리 모두에 있어 기술적·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본 사업은 권역 혹은 지역 차원의 통합적이고 범세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단순 규제에 그치지 않고, 규제 이후 생계 대안을 마련하는 소득원 제공 방안도 병행하여 설계하였다.

본 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연안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해양생물 보호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해양보호구역(MPA)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고, 해양 생태계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모델을 확산할 수 있다.

셋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과 해양보호종 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과학 기반의 자원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IUU 어업 대응과의 연계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해양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을 제고하고, 지역 기반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해양 회복력과 자원 관리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한국의 해양 ODA 분야 국제협력 리더십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해양수산부 ODA 사업 발굴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과제, 전략적 대응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모델로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발굴 체계는 정책 우선순위의 모호함, 단발성 과제 중심의 접근, 협력 주체 간 연계 부족, 제도화된 발굴 체계 부재 등으로 인해 전략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주요 도전과제는 ‘우선순위 일관성 강화’,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제도적 체계 보완’, ‘ODA 연구 기반 확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와 같이 패키지형 접근을 통해 해양수산 ODA의 전략적 통합을 시도하는 과제는 본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반면, ‘우선순위 일관성 강화’에 따른 중장기 목표 설정 제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에 따른 민간·시민사회 참여 기반 마련, 그리고 ‘제도적 체계 보완’ 및 ‘ODA 연구 기반 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기반 확충 과제 등은 대응 방안의 성격상 제5장과 제6장에서 각각 구체화하였다. 특히, 성과지표 마련과 지표 체계 구축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관리수단은 제5장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존 제도의 보완 및 신규 제도 설계와 같은 제도 개선 과제는 제6장에서 심화하여 다루었다. 이러한 장별 구성은 도전과제별 대응방안을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수단을 주제별로 분산·심화함으로써 해양수산 ODA 전략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된 것이다.

무엇보다 본 장의 핵심 성과는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단위사업 중심의 기존 접

근을 보완하고,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과제 발굴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실행모델이다. 본 장에서는 해양수산 패키지 구성 전략에 따라 ①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②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③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지원 사업 패키지, ④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 패키지, ⑤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등 다섯 가지 사업 모델(안)을 개발하였다. 각 모델은 대상 권역 및 협력국, 핵심 목표와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주요 추진 내용과 방식,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구체화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의 특성, 협력국의 개발수요, 협력기관 및 부처의 추진 의지와 역량, 민간에서의 관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정리하면 <표 4-18>과 같다. 각 패키지 사업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전략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설정되었으며, 특히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안)’는 협력국 수요의 명확성, 이행 의지, 국내 기관의 수행 역량 및 협력 부처의 참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각 사업의 현장 적용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5장에서는 이들 사업 모델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안)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본 장에서 제시된 패키지 사업(안)은 실무 검토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업화에 앞서 국무조정실 주관의 사업전략협의회 등 관계 부처 간의 공식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은 해양수산 ODA의 전략적 기획과 구조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후속 장에서 제시되는 이행전략, 성과지표 및 제도 개선 과제와 함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8〉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

패키지명	SDG 14 세부 목표	대상 권역	주요 협력기관	목표 및 핵심 추진 내용
산업 인재 확보	SDG 14.a, 14.c, 14.4, 14.7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해양수산부, EDCF, KOICA,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 NGO 등	- 해양수산 인력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선원, 해기사, 수산 기술인력(옵서버) 등 전문 인재 양성 - 현지 교육기관 역량강화, 교육과정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도 및 관련 정책 정비, 해양산업 기반 기술 교육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SDG 14.4, 14.6, 14.b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해양수산부, EDCF, KOICA,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민간기업 등	- 수산물 생산 후 단계의 부가가치 제고 및 시장 접근성 강화 - 위생·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콜드체인·저온 물류 구축, 중소기업 유통조직 역량 제고, 수출시장 연계 플랫폼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SDG 14.3, 14.4, 14.6, 14.b	태평양, 중남미	해양수산부, 국제기구, KOICA, 환경부, 산림청, 수자원공사, 민간기업, 학계 등	- 해안·연안 지역의 기후 회복력 강화 및 저탄소 기반 구축 - 해양탄소흡수원 보전,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정책 및 제도 보완, 과학 기반 데이터 활용 능력 제고 등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SDG 14.1, 14.2, 14.4, 14.5, 14.6, 14.7	아시아, 아프리카	해양수산부, 한국해외 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 EDCF, 산업통상자원부, 항만공사, 민간기업 등	- 개발도상국의 항만과 물류 시스템 탄소중립 및 디지털화 실현 - 친환경·디지털 항만 전환 지원, 저탄소 연료 기술 적용 선박 보급, 항만 에너지 고효율화, 항행 정보시설 개선, 항만 운영 역량 강화 등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글로벌	해양수산부, 국제기구,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산림청, NGO, 민간기업 등	- 해양수산자원 고갈 방지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 불법어업 규제,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관광 활성화, 수산자원 회복 등

자료: 저자 작성

0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제1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분석 —

1.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특수성

해양수산 ODA는 바다와 연안이라는 공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한 도구로, 지역적 수준에서 국제적 수준까지 포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³⁰⁰⁾ 전 세계 바다는 과도한 어획³⁰¹⁾, 오염,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해양 산성화, 온난화, 산소 결핍 등)로 인한 다차원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³⁰²⁾ 이러한 문제들은 해양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면서도 개발 촉진을 위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국의 협력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³⁰³⁾

300) OECD(검색일: 2025.2.6.)

301) 2024년 FAO의 세계수산물양식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족 자원의 약 37.7%가 남획 상태로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50.5%는 최대 지속 어획 수준에서 어획되고 있다고 함(2024), p.24.

302) UNDP(검색일: 2025.1.5.)

이러한 이유로 SDG 14는 해양 생태계 보호에 집중하며, 해양오염 감소, 해양 및 해양 생태계 관리·복원, 과학기술 강화를 통한 해양 산성화 영향 최소화, 어류 포획의 효과적 규제, IUU 어업 근절, 과학 정보 기반으로 제정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른 해안 및 해양 지역 보전 등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를 통한 군소도서개발 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³⁰⁴⁾

해양 수자원과 생물들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관리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려우며, 여러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해양수산 자원의 특성과 해결할 문제가 상이하고, 국가 간의 해양자원 및 어업자원 개발 등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규범 제정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들 규범과 협력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까지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공간계획, 수산자원 관리, 어업 기술 등은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요구한다. 수로 측량, 해수 유동, 해양 관측, 해양 산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해양 산성화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기술 지원과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³⁰⁵⁾

더욱이 항만 및 어항 시설, 자율 운항 선박 시스템, 수산업 클러스터 등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는 대규모 자본 투자와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양 인프라는 외부 요인에 취약하므로, 투자와 투입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해양수산 ODA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협

303) OECD(검색일: 2025.2.6.); PEMSEA(2025.1.30.)(검색일: 2025.2.8.), p. 1.

304) UN, Goals 14(검색일: 2025.2.6.)

3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c), p. 12.

력이 요구되며, 기술적인 도전과 외교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 성과 기반 관리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투입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기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 관리 체계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5조의2(국제협력사업의 추진) 및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사업을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협력총괄과를 중심으로 ODA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제협력총괄과가 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분야별 전문성을 전제로 각 과가 고유한 업무 영역에 기반해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실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타 부처에 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자성 양자 사업이 많은 편이며, 이에 따라 실제 사업은 국제협력총괄과와 관련 실무 부서 간의 협력 체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총괄과의 ODA 전담 인력은 2025년 5월 기준 2명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관리하기에는 인력과 기능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2019. 8.)과 함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을 제정(2020. 9.)하였고, 2020년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제개발협력센터는 ODA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교육 등 실무 전반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전문기관 중심의 운영 체계는 일정 부분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연구·개발팀과 관리·평가팀으로 구성되어 사업 발굴, 진도 점검, 평가 수행 등 전 주기 사업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 주도로 사업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정기적 진도보고서 제출 체계, 사업 수행 실무진 워크숍인 OCEANAID 운영, 해양수산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사업설계매트릭스(PDM: Project Design Matrix) 적용 등이 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차원의 공식 사업관리 지침은 아직 마련 중이며, 사업 관리는 국제협력총괄과와 전문기관 간 협의한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분기별 점검, 진도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양식 개발 등의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면 수행기관들이 보다 일관된 표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관리 체계 역시 이와 유사한 발전 과정에 있다. 사후관리 지침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2024년, 전문기관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후관리 수요에 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사업 사후관리 지침(안)」을 수립하고 시범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나, 공식 제도화는 준비 중인 상황이다.

관리 체계의 제도화가 시급한 이유는 해양수산부 ODA 사업 수행기관의 다수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이기에 자체 사업 관리 규정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전체 ODA 사업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각 기관이 내부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어 사업 간 편차

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라서 부처 차원에서 제도에 따라 각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처 ODA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 특성상, 단일 과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해양, 수산, 해운, 항만, 해상안전 등 각 분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과 주도의 실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부처 차원의 정책 조정력 및 전략적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현장 중심의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양수산부 ODA 사업 수행기관은 공공 또는 국가 기관으로 파견 인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전문기관 또한 국내 중심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협력국 현장에서의 실시간 점검 및 피드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현장 수요 기반 ODA 발굴, 참여형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을 중시하는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성과지표가 부재하다는 점은 성과관리 체계의 또 다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2022년 1월에 제시한 ODA 사업 성과지표 모델(안)은 보건, 공공행정, 교육, 농수산업·농촌개발, 물·수자원, 교통,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폐기물, 생태계, 과학기술 혁신, 성평등, ICT·디지털, 스마트시티·도시개발 등 16개 분야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성과지표들은 해양수산 분야, 특히 해양, 항만, 어촌 등 특수성이 강한 영역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농수산업·농촌개발 분야에서는 농수산업 생산 기반 구축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농업 중심의 맥락에 기초하고 있어 어획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등 수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담아내지 못한다. 또한 해양 생태계, 연안관리, 항만물류 등과 같은 해양수산 특화 분야에 대한 성과지표는 별

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 ODA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성과 기반 관리(RBM: Results-Based Management)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있다.³⁰⁶⁾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외공관과의 협력은 보완이 필요하나 수원국 중앙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OCEANAID 협의체를 통한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업 구조는 해양수산 ODA의 구조적 분산성을 보완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타 기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지표 분석

1) 유럽 해양수산 기금³⁰⁷⁾

유럽 해양수산 기금은 평가 톨박스를 개발하여 해당 자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을 모니터링하며 효과성을 평가하여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한다. 이 기금은 사업 개발, 환경 보호, 인적 자본 개발, 기관 역량강화, 혁신 및 지식 공유, 지역사회 주도 지역개발을 6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³⁰⁸⁾

306) 국무조정실(2022.1.), pp. 2-17.

307) 유럽 해양수산 기금은 EU의 해양 및 수산 정책을 위한 기금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여촌지원기금을 포괄하며, 유럽 5대 구조투자기금(ESI: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중 하나로 유럽의 성장과 일자리 기반 회복을 도모함. 해당 기금은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 어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금융 접근성 강화 등을 지원하는 데 쓰임(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0.7.), p. 8)

308) European Commission(2017), p. 25.

〈표 5-1〉 유럽 해양수산 기금 평가 톨박스 평가지표

구분	성과지표
사업 개발	• 수산 관련 활동의 다각화를 촉진하는 프로젝트 수 • 수산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력 증가 • 어업 방법 또는 기술의 혁신
환경보호	• 원치 않는 어획량 감소(톤 또는 백분율로 추정) • 보호 구역 또는 수거된 폐기물과 같은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노력
인적 자본 개발	• 새로운 기술 또는 지속가능한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은 어부 수 • 어업 작업장에서 안전한 조치 채택 • 평생 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관 역량강화	• 어업 관리 계획의 개발 및 실행 • 보전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 규제 프레임워크 준수율
혁신 및 지식 공유	•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 솔루션 도입 수 • 과학자와 어부 간의 보존 프로젝트 협력 수 • 지속가능한 관행에 대한 대중 인식 캠페인
지역사회 주도	• 해안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 소규모 어업 지원 • 지역 시장 및 가공 부문 강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Table 2, pp.26-30. 일부 요약

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어업 및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FAO는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SSF: Small Scale Fisheries)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³⁰⁹⁾ 이 프레임워크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소규모 어부와 지역사회가 자원과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공정하게 접

309) FAO(2023b), p. 6.

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AO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사회 발전·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관련,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어획 후 생산 및 거래 관련, 성평등, 재난위험 및 기후 변화 등 여섯 가지 핵심 영역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FAO는 이러한 성과지표를 통해 소규모 어업 공동체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투입 및 투자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³¹⁰⁾ 이 접근법은 해양수산 분야 특유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과관리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2023년 발간된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위한 소규모 어업 여성 어업인의 역량강화 통합 기초선 보고서³¹¹⁾는 가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기초선 조사의 설계 및 결과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 기초선 조사는 해당 사업의 영향 및 결과지표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기간 동안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측정할 구체적 지표를 선정하는 체계적 과정을 보여준다.³¹²⁾ 본 기초선 조사의 구조와 질문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와 사업의 주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향후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지표 개선(안)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성별, 지역별, 생계 유형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방법론은 향후 해양수산 ODA 사업의 포용적 성과 측정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10) FAO(2023b), p. 38.

311)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Small-Scale fisheries to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Livelihood through Better Policies, Strategies and Initiatives가 본 기초선 조사 해당 사업임 (Kadongola, R., Ahern, M. 2023)

312) Kadongola, R., Ahern, M.(2023), p. 3.

<표 5-2> FAO 성과(영향) 지표

영역	지표
책임 있는 거버넌스	• 소규모 어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정책 또는 법적 프레임워크 수 • 공동 소유 소규모 어업자원의 공동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적용되는 헥타르 • 토지 및 수자원, 수산자원, 어장 및 인접 토지에 대한 사용자 권리를 확보한 소규모 어업인(가치사슬 행위자)의 비율 • 법적 서류를 가진 소규모 어업인의 비율
사회 발전,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관련	• 사회적 보호의 혜택을 받은 소규모 어업 종사자 및 어부 비율 • 지역사회기반 사회보호제도를 제공하는 소규모 어업 공동체 조직 수 •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규모 어업 종사자 및 어부 수 • 소규모 어촌 지역사회의 직업 훈련센터 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 자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소규모 어업인 및 어업 종사자의 비율 • 수산자원 관리 모델로서 공동 관리를 촉진하는 수산 법률 및 정책 • 수산자원 관리에 참여하는 소규모 어업 공동체 조직의 비율 • 서면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어업 공동관리 협약의 비율
어획 후 생산 및 거래 관련	• 생산 및 어획 후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여 적용한 소규모 어업인 및 종사자의 비율 • 개발된 어시장 정보 플랫폼 수 • 온라인/모바일 수산시장 정보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소규모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의 비율 • 여성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를 갖춘 수산 시장의 비율
성평등	• 소규모 어업에서 여성 관련 적합한 기술 개발 건수 • 소규모 어업단체의 회원 중 여성 비율 • 소규모 어업조직에서 여성 고용 및 회원 가입을 유치하고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인센티브 수 •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
재난위험 및 기후변화	• 소규모 어업 공동체를 위한 적응 기금, 시설 및 기술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한 정보 보급에 관여하는 옹호단체 수 • 재난 대비를 통합한 개발 계획 및 투자 건수 • 역량 개발 이니셔티브 수 • 긴급 대응을 위한 개발 및 인도주의 활동가 간의 파트너십 체결 건수

자료: FAO(2023b), Appendix 2, pp. 84-185, 일부 요약

〈표 5-3〉 FAO 성과지표

영역	성과지표
식량 안보 및 영양	•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IES: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 여성을 위한 최소 식이 다양성(MDD-W: Minimum Dietary Diversity for Women)
의사 결정 및 여성 역량강화	• 어업 조직 또는 지역 의사 결정 기관에서의 여성의 참여 • 생산적 자산(예: 낚시도구, 보트)에 대한 접근성 및 사용에 대한 접근 • 성 기반 폭력의 발생 및 성 차별적 태도의 만연
어획 후 가치 사슬 개발	• 생산 건조, 훈제, 또는 소금에 절이는 것과 같은 어획 후 관행 채택 • 생산 가공, 마케팅, 또는 부가가치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비율 • 어업 관행 및 어획 후 지속가능한 기술 관련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
제도적 구조와 역량, 여성 어업 단체	• 소규모 어업(SSF) 가이드라인을 통한 정책 또는 이니셔티브 수 • 여성 및 소규모 어부의 어업 확장 서비스 이용 • 설립 또는 강화된 지역 어업의 조직 수
지식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 지식공유플랫폼 또는 교육 세션의 빈도 및 효과 • 소규모 어업의 모범 사례 보급 및 수용

자료: Kadongola, R., Ahern, M.(2023), 4. Survey summary results and discussion, pp. 21-59, 일부 내용 요약

〈표 5-4〉 ODA 사업 PDM 적용(안) 성과지표

단위	성과지표
영향	• 대상 인구의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IES) 감소 • 자산 소유 및 의사 결정에서의 성평등 증가
결과	• 지역사회에서 채택한 생선 가공 및 마케팅 기술 개선 • 대상 가구의 여성과 아동의 식단 다양성 강화
산출물	•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에 대해 수행된 워크숍 수 • 어부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훈련이나 접근을 받는 수(성별 구분)

자료: Kadongola, R., Ahern, M.(20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환경계획(UNEP)은 해양 및 어업 관리의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엔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UNEP가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산호초 보호기금(GFCR: Global Fund for Coral Reefs)은 2024년에 산호초 보호 및 관련 커뮤니티 개발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5-5〉 글로벌 산호초 보호기금 성과지표

성과지표	세부지표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중인 산호초의 면적	- 지역 관리 구역/공동 관리 구역의 산호초 면적(km²) - 맹그로브, 해초 또는 기타 관련 생태계와 같은 비산호초 생태계의 면적(km²) -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중인 산호초의 면적(km²)
의미 있는 결정에 참여한 커뮤니티 수, 공동 개발 및 역량강화	- 해양자원의 공동 관리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수 - 지역 주도의 보존 이니셔티브(예: 해양보호구역) 증가
생계, 직접 일자리, 소득 및 관련 영향을 통해 지원받은 사람 수	- 직접 창출된 일자리 수(성별, 청년, 원주민별로 세분화) - 소득 및/또는 영양이 사람들의 수(성별, 청소년, 원주민별로 세분화)
기후변화 및 주요 외부 충격의 영향에 더 잘 적응하고 대응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은 사람들의 수	- 총 직접 수혜자 수(성별, 청소년, 그리고 원주민) - 총 간접 수혜자 수(성별, 청소년별로 세분화) - 연안 지역사회가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 메커니즘/개혁의 수(예: 보험, 대출, 마을 저축, 복구 위기 계획 등) -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정책 수(예: 위기관리 계획, 임시 대체 고용을 위한 개혁)

자료: UNEP(2024), pp. 7-9, 펀드 지표 중 일부 발췌

해당 평가에서는 각 프로젝트의 목표, 변화 이론, 지표, 모니터링 방식,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며,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각 프로젝트의 지표 대비 진행 상황과 활동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³¹³⁾

313) UNEP(2024), pp. 32-35.

4) 항만 부두 운영 회사 성과 평가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성과지표에서 교통 분야는 주로 도로 교통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항만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DCF에서 항만 타당성 조사 시 활용하는 평가 지표도 존재하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은 주로 어항 및 접안 시설 개선 수요가 많아 대규모 상업항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에서 항만 부두 운영 회사 성과 평가 시 사용하는 일부 지표는 소규모 항만 인프라(어항 포함) 구축 사업에서 협력국의 인프라 운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5-6〉 부두 운영회사 성과평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지표	점수
물량 유치 노력(20점)	물량 증가 비율	10
	부두하역능력 대비 처리비율	10
생산성 제고(15점)	선박의 접안시간당 하역생산성	10
	척당 평균접안시간 절감률	5
투자비(15점)	하역능력당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비	15
안전성·신뢰도(20점)	산재 발생 횟수	20
이용자 만족도(5점)	선사 및 화주의 만족도(설문조사)	5
시장 건정성 제고(15점)	TOC 통합	5
	항만하역표준계약서 채택	10
환경 개선 노력도(10점)	환경 관련 규정 위반 횟수	5
	미세먼지 대응 노력도	5
합계		100

자료: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2절 성과지표 개선(안)

본 절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의 다섯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논리적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구조에 기반하여 활동(Activities), 산출물(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의 단계별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사업(안)에 대해 예상되는 산출물, 성과, 영향의 3단계 층위에 따른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한다.

제시한 성과지표는 본 장의 제1절의 3항에서 다룬 타 기관 해양수산 성과지표 분석과 기존 해양수산 ODA 사업의 성과지표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³¹⁴⁾ 이를 통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각 패키지 사업의 목표 달성 경로와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평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사업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사업’은 해기사(상선), 어선원, 오피서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은 상이하나 인력 양성 중심의 구조, 정책·제도 기반 강화, 안전 및 복지(건강 관리) 확대, 국제규범 대응 및 이행 체계 구축이라는 공통된 구성 요소를 공유한다.

3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의 ODA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11월 재지정되었음. 본 2절에서 참고한 기존 해양수산 ODA 사업의 성과지표는 2023년부터 국제개발협력센터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자체평가 사업 대상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ODA Korea 웹사이트 내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로 대외 공개된 자료임. 또한, 국제개발협력센터에 직접 의뢰한 ODA 수행기관 PDM 수립 컨설팅 자료(2024d)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OCEANAID 기관 발표 자료도 일부 참고하였음

이에 따라 성과지표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반영하여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일부 정성 지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으며, 사업 개입 전후(이전-이후)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우선,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사업은 총 5개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된 패키지형 사업으로, 협력국의 해운 및 어업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양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목적에 따라 구성한 사업 프레임워크(안)는 다음과 같다.

〈표 5-7〉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항목	내용
영향(Impact)	• 해양산업 인재 자립 및 해양 안전 대응 역량강화
성과 (Outcome)	• 협력국 해운·어업 산업의 전문인력 확보 및 해양 안전 기반 강화
산출물 (Output)	• 해기사 교육 및 인턴십 운영 • 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 건강검진 시스템 제공 • 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 정책 자문 수행
활동 (Activities)	• 승선 실습선 및 교육 콘텐츠 운영 • 현지 연수생 초청 • 건강 검진/보건 체계 지원 • 해양기후 플랫폼 기술 구축 및 전파 • 정책 마스터 플랜 자문

자료: 저자 작성

본 사업은 해기사 승선 실습교육, 해상 안전 교육, 보건 및 건강 검진, 기후변화 예측 플랫폼 구축, 해양 안전 정책 역량강화 등 상호 연계된 구성 요소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각 구성요소에 따른 성과지표(안)는 기존 해양수산부 ODA 사업 성과지표를 참조³¹⁵⁾하여 〈표 5-8〉과 같이 정리하였다. 실제 사업 기획 단계에서

는 SDG 5(성평등)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해상 안전 교육, 기후변화 예측 플랫폼 구축, 해양 안전 정책 역량강화 등의 항목에도 성별 분리 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및 보건 관련 사업은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설계될 수 있으나, 해양 산업 종사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항목에 한정된 지표를 제시하였다. 향후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성과지표는 협력국의 수요와 지역 보건 인프라 여건에 따라 조정하거나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 5-8〉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해기사 승선 실습교육	• 실습 교육 이수자 수 및 수수료율 • 유급 인턴십 참여자 수 • 여성 실습생의 비율	• 해기사 자격증 취득률 증가 • 해양 산업 취업률(해양 산업 종사자 수 증가)	• 해운 인력 부족 협력국의 인력 자립도 향상 • 해운산업 인력 수급 안정화
해상 안전 교육	• 시뮬레이터 교육 횟수 • 안전 교육 이수자 수	• 해양 사고 대응 숙련도 향상(사전·사후 테스트)	• 해양 사고율 감소 • 선박 운항 안전성 개선
보건 및 건강검진 제공	• 건강검진 시행 횟수	• 승선 불가율 감소	• 노동 지속가능성 제고
기후변화 예측 플랫폼 구축	• 시스템 설치 수 • 교육 이수자 수	• 해양 기후 경보 활용도 • 정책 반영 건수	• 연안재난 대응시간 단축 • 기후 예측 정확도 향상
해양 안전 정책 역량강화	• 정책 자문/컨설팅 횟수 • 마스터플랜 수립 건	• 해양안전 정책 도입 수	• 해양 안전 국제규범 이행률 향상 • 해양 법제도 기반 강화

자료: 저자 작성

가나 어선원 양성사업³¹⁶⁾은 기술 역량강화, 보건 및 위생 교육, 기초 문해 교육을 통해 어선원 직업훈련 성과 제고 및 취업 연계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구조화한 프레임워크(안)는 다음과 같다.

3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으로 2024년 12월 해양수산부 ODA 양자사업 대상 PDM(안) 서면 자문을 지원함. 자문 지원 대상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과 케냐 해기교육시스템 전수사업 PDM 성과지표 일부를 참고함

316) 202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한 가나 어선원 양성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참고 및 활용함

〈표 5-9〉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항목	내용
영향(Impact)	• 협력국 수산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고용 창출
성과 (Outcome)	• 기술 역량·보건·문해 교육을 통한 어선원 직업훈련 성공 및 취업 연계
산출물 (Output)	• 직업훈련과정 개발 • 교육 인프라 구축 • 문해·보건 교육 운영 • 민간 협력을 통한 인턴십 연계
활동 (Activities)	• 교육 콘텐츠 개발 • 교육 공간 임차 및 설비 제공 • 문해·보건 교육 실시 • 유급 인턴십 및 취업 매칭

자료: 저자 작성

본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 공간 및 시설 확보, 보건 및 위생 교육, 문해 교육,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 및 인턴십 참여 인원’ 등 정량적 수치를 주요 산출물 지표로 설정하였다. 성과지표는 교육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항해기술 숙련도, 안전사고 대응력, 보건 인식 수준, 독해력 향상률 등 참여자의 역량 변화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표 5-10〉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성과지표 체계는 직업훈련, 문해 및 보건 교육, 취업 연계를 통한 어선원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반까지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수자 수’,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 등은 정량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며, ‘문해력 향상률’, ‘보건 인식 개선도’ 등은 참여자의 질적 변화와 역량 향상을 측정하는 정성 지표로 기능한다.

〈표 5-10〉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과정 개설 여부 - 이수자 수 - 교재·기자재 제작 건수 - 참여자 만족도	- 교육 이수율 - 어선원의 항해기술 자격증 취득률 - 어선원 안전사고 발생 감소(기준 연도 대비) - 어업 전문기술 이해도 향상	- 연안지역사회 숙련 어선원 비율 증가 - 지역경제 성장을 증가
교육 공간 및 시설 확보	- 교육 공간 확보 여부 - 설비 개선 완료 수	- 교육 접근성 향상 - 수강 등록률 증가	- 지역 교육기관 활용률 향상 - 장기적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보건 및 위생 교육	- 교육 횟수 - 참여자 수	- 보건 인식 개선도 - 질병 예방률 향상	- 어업종사자의 노동 지속가능성 강화 - 의료 접근성 제고
문해 교육	- 문해 교육 이수자 수 - 교재 배포 수	- 기본 독해력 향상률 - 계약 이해도 및 안전 교육 수요율 향상	- 근로 환경 개선 - 권익 보호 역량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 유급 인턴십 기회 수 - 취업 연계 성공 사례 수	- 실제 취업률 - 민간기업 수요 충족도	- 지역 수산업 고용 증가 - 민관협력 기반 일자리 창출

자료: 관련 자료 참고³¹⁷⁾ 및 저자 작성

또한, 각 성과지표는 협력국의 현장 여건과 측정 가능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세분화할 수 있으며, 타 부처의 참여가 필요한 문해 및 보건 교육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설계할 수 있다. 아울러, 실사업 기획 시 기초선 조사 후 각 지표에 ‘여성 참여율’, ‘아동 수혜자 비율’,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자 수’ 등 사회적 포용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성과관리 체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17) 국무조정실(2022.1.), pp. 2-3, p.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a), pp. 31-32.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사업은 오퍼서 제도
의 전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력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자원 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IUU 어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위한
물리적인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이를 운용할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이 동시
에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투발루는 지역수산기구(RFMO)의 인증
을 받은 오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오퍼서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관리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량강화가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³¹⁸⁾ 이에 본 사업은 투발루 정부의
IUU 어업 대응 및 오퍼서 제도 전반에 대한 질적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운
영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표 5-11〉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항목	내용
영향(Impact)	• 국제규범 기반 해양자원관리,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능력 제고 및 근절
성과 (Outcome)	• 오퍼서 제도 전문화, 지속가능한 인력관리체계 확립, 데이터 기반 IUU 어업 대응 강화
산출물 (Output)	• 보수교육 및 초청연수 운영 • 전자 모니터링 도입 및 데이터 교육 • IUU 어업 감시 시스템 도입 및 활용 교육 • 제도 개선 컨설팅 • 건강검진 제도 구축
활동 (Activities)	• 국제규범 부합 IUU 어업 대응 제도 마련 • 선사 문화·언어교육 포함 실무 교육 운영 • 데이터 분석 모듈 개발 및 교육 • 예산/행정 정책 컨설팅 수행 • 해양 안전 연계 건강 서비스 도입

자료: 저자 작성

318) 한국원양산업협회 ○○○ 부장, ○○○ 과장(2025.3.21., 화상 회의)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사업의 성과지표는 구성요소별 활동 건수를 기준으로 한 산출물의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산출물은 실무 이해도 및 성취도 향상, 읍서버 제도 운영의 지속성 강화 등과 같은 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연계되며, 제도 전반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읍서버 보수 교육과 데이터 분석 역량강화 항목은 현재 일반적인 수준의 지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향후 교육 내용이 구체화되면 산출물을 성과지표와 직접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SDG 5(성평등)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성별 분리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국가 예산·행정 체계 개선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포괄적인 지표 중심이나, 실제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성과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건강검진 및 보건 관련 사업은 협력국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 보건 서비스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해당 지표 역시 지역 수요와 보건 인프라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및 세분화할 수 있다.

〈표 5-12〉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IUU 어업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 초청 연수자 수 - 교육 이수자 수 - 교육시간(시수)	- 실무 이해도 및 실습 성취도 향상 - IUU 대응 제도 마련	- IUU 어업 저감 - IUU 어업 방지체계 정착 - 국제규범 이행을 상승
	- 컨설팅 횟수 - 국제협력 정보 공유 횟수	- IUU 어업 대응 제도 운영 지속성 강화 -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사례 수	
	- 불법어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 AIS/위성 장비 설치 수 - 시스템 활용 교육 이수자 수	- IUU 어업 적발률 상승 - 위반 재발률 감소	
오피서버 보수 교육	- 초청 연수자 수 - 교육 이수자 수 - 교육시간(시수)	- 실무 이해도 및 실습 성취도 향상 - 양질의 오피서버 배출률	- IUU 대응 오피서버 배치율 향상 - 해양자원 감시 정확도 제고
데이터 분석 역량강화	- 전자모니터링 장비 설치 수 - 데이터 교육 이수자 수	- 자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률 - 데이터 기반 보고서 작성 및 정책 활용 사례 수	- 과학기반 자원관리 확대 - 국제 수산기구 보고체계 이행을 상승
국가 예산·행정 체계 개선	컨설팅 횟수	- 오피서버 제도 운영 지속성 강화 - 정책 반영 및 예산 배정 확보율	- 제도적 지속가능성 강화 - 해양관리 행정 신뢰 향상
인재 제도 개선	법·제도 개선안 마련 수	- 인재 유입/이탈 비율 개선 - 안전관리 매뉴얼 도입률	- 인재 확보 및 유인 구조 개선 - 장기적 인력 유지 기반 확보
보건 서비스 접근성	- 건강검진 시행 횟수 - 의료 교육 및 진단 횟수	질병 예방률 개선	- 근무 지속가능성 제고 - 인재 복지 기반 강화

자료: 관련 자료 참고³¹⁹⁾ 및 저자 작성

319) 국무조정실(2022.1.), pp. 2-3, p. 6, 15.

2.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사업은 협력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산업 인프라 구축, 양식 기술 이전,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기술 지원, 수산업 정책 역량강화, 보건·위생 개선 등 다섯 개의 세부 프로젝트를 통합한 패키지형 프로그램이다. 프레임워크상의 산출물은 각 세부 사업 단위에 해당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성과는 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식품 위생 환경 개선, 수산업 기술 및 제도 역량강화이다.

〈표 5-13〉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항목	내용
영향(Impact)	• 협력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 (Outcome)	• 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식품 위생 환경개선, 수산업 기술 및 제도 역량강화
산출물 (Output)	• 인프라 설치 • 기술 이전 및 교육 실시 • 고부가 제품 개발 • 제도 개선 • 위생 시스템 운영
활동 (Activities)	• 어항 및 유통센터 설계·시공 • 양식 기술 전수 및 교육 • 수산물 가공기술 도입 • 수산업 정책 컨설팅 • 보건/위생 인프라 지원

자료: 저자 작성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지표는 각 구성 요소별 활동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정량적 산출물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산출물로는 어항 및 배후단지 조성 준공 건수, 개발된 양식 생산 기술 매뉴얼 수, 라벨링·포장 기술 도입 사례 수, 정책 컨설팅 및 교육 실시

횟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산출물을 기반으로, 양식 어획물 처리량 변화율, 양식 생산성 증가율, 수산가공품의 품질 인증 획득 수, 정책 컨설팅 및 교육 만족도 등으로 연계된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부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농산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산업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단계마다 발전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사업 구성 요소 역시 대상국의 수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성과지표도 협력국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정책 역량강화 항목은 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제규범이나 수출 시장의 위생·보건 기준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다. 현재 많은 협력국에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환경오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식 기술 이전 또한 협력국 상황에 맞는 적정기술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현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기술 이전 지표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성과지표 중 예시로 제시된 HACCP 인증 또한 선진국 중심의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이 획득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 그러나 향후 기술 수준 향상과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방향성으로서 제시하였다.

실제 사업으로 기획할 시에는 기술 이전, 정책 역량강화, 품질 개선 등과 같은 핵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표 5-14〉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수산업 인프라 구축	• 여항/배후단지 조성 준공 수 • 장비 설치 수 • 운영 가능 장비 비율	• 시설 가동률 • 수산물 처리량 변화율 • 물류 시간/비용 절감률	• 수산물 자급률 변화율 • 수산물 수출 증가율 • 지역 고용 창출(수산업 신규 종사자 수)
양식 기술 이전	• 개발된 양식 생산 기술 매뉴얼 수 • 교육 인원 수 • 건조시설 및 양식시설 개소 수	• 양식 생산성 증가율 • 교육 수료자 중 실제 양식업 종사율 • 위생 인증(HACCP) 획득 양식장 수	• 사업지역 내 양식업 생산량 증가율 • 수산물 자급률 변화율 • 수산물 섭취 빈도 변화 혹은 식단 다양성 지수 • 양식업 관련 고용 창출 수 및 소득 증가율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기술지원	• 신제품 개발 수 • 라벨링/포장 기술 도입 사례	• 수산가공품 품질 인증 수 • 내수/수출 유통처 확대 건수 • 지역사회에서 채택한 가공 및 마케팅 기술 개선	• 수산물 수출 증가율 • 중소기업 수산 가공 참여율
수산업 정책 역량강화	• 정책 컨설팅 횟수 • 교육 실시 횟수 •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 여부	• 정책 컨설팅/교육 관련 만족도 • 위생 기준 제도화 여부 • 이해관계자 정책 반영 여부	• 지역 수산업 가공·유통·물류 개선 모델 적용 여부 • 국제 인증 획득
보건·위생 개선	• 식품안전 교육 인원수 • 위생 시설 설치 수	• 보건 인식 개선도	• 지속가능한 위생관리 시스템 운영 비율

자료: 관련 자료 참고³²⁰⁾ 및 저자 작성

3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a);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b)

3.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지원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해양경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연구와 산업의 협력적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본 사업은 해양과학 기반 인프라 구축, 해양 생태계 복원 및 블루카본 활용, 해양 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기술 도입,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과학적 정책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기술·제도·인적 역량의 통합적 투입과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해양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하고, 협력국의 자립적 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5-15〉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항목	내용
영향(Impact)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해양경제 기반 조성
성과 (Outcome)	• 협력국 연안국가의 기후회복력, 에너지·물·안보, 정책 자립도 향상
산출물 (Output)	• 해양기후 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 • 블루카본 생태 복원 • 재생에너지·담수화 기술 보급 • 탈탄소 선박/항만 확산 • 정책 연구 및 연수 수행
활동 (Activities)	• 관측소·센서 설치 • 맹그로브/해초 복원 시범 • 해상 태양광/풍력 시범 설치 • IMO 기준 연계 정책 자문 • 데이터 기반 정책 플랫폼 운영

자료: 저자 작성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활동 기반의 정량적 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성과 및 영향 단계에서는 해양기후 데이터 확보율 탄소 흡수량(tCO_2eq) 블루카본 크레딧 등록 건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량 지표를 제시하며³²¹⁾, 해당 지표의 측정과 검증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방식과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블루카본 크레딧 등록 건수나 재생에너지 보급률 등은 Gold Standard, Verra,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국제 인증 체계와 연계하여 지표의 신뢰성과 국제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지표와 측정법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층위별 성과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사업 유형은 현재 제안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정성적 지표에 대한 측정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정책 활용 사례 수나 생태계 회복 지수 등의 정성 지표는 정의와 측정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평가자 간 해석 차이를 야기할 수 있어, 사전 합의와 명확한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정성 지표는 정량 지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두 지표 간 중복이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성과 측정에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기획 시에는 구축된 설비의 가동률, 운영·유지관리 비용, 수원국 정부의 재정 부담률 변화 등과 같은 운영 유지 기반 지표를 성과관리 체계에 포함함으로써,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21) GCF(2021.7.16.), pp. 3-5; IUCN(2017.11.), pp. 1-2.

〈표 5-16〉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해양과학 기반 인프라 구축	• 해양기후 관측소 설치 수 •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 해양기후 데이터 확보율 • 정책 활용 건수	• 조기경보 시스템 정착 • 기후재난 대응 시간 단축
생태복원 및 블루카본	• 복원된 면적(ha) • 블루카본 파일럿 사업 수	• 탄소 흡수량(tCO₂ eq) • 블루카본 크레딧 등록 수	• 탄소중립 기여도 증대 • 지역 생태계 회복 지수 상승
해양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 해양에너지 파일럿 수 • 담수화 시스템 설치 수	•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율 • 식수, 산업용수 등 접근성 향상도	• 에너지 자립률 개선 • 기후취약지역 물안보 강화
과학적 정책 역량강화	• 공동연구 수 • 연수 참가자 수	• 기후정보 기반 정책 수립 수 • 정책 활용 사례 수	• 기후 리더십 강화 • 지역 정부의 자율적 정책 추진 기반 확보

자료: 저자 작성

4.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양 ODA 패키지로 설계되었다.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협력국의 항만과 물류 시스템이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후·환경 규범의 이행을 지원하며, 지역 맞춤형 친환경 항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은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저탄소 선박 보급, 항만 에너지 고효율화, 항행정보시설 개선, 미래지향적 항만 운영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항만 운영과 물류 체계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각 구성요소는 단순한 인프라 공급을 넘어, 제도 개선, 기술 전환, 인력 양성 등 다층적 개입을 통해 종합적이고 연계된 결과를 창출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히, 기술·제도·인적 역량의 통합적 투입을 통해 해양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물류 체계를 협력국 내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단순한 항만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제고 등 다차원적 개발 효과를 유도한다. 궁극적으로는 협력국이 국제 기후·환경 기준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자국의 항만을 지역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5-17〉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항목	내용
영향(Impact)	• 항만 및 물류 체계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제고
성과 (Outcome)	• 협력국 항만 및 물류 시스템의 친환경화·스마트화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
산출물 (Output)	• 친환경 하역장비 및 연계물류 시스템 구축 • 저탄소 연료 기반 선박 시범 도입 • 재생에너지 기반 항만 전력 설비 설치 • 항로표지 및 디지털 관제 시스템 구축 • 항만 운영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배출
활동 (Activities)	• 전기·LNG 기반 하역장비 도입 및 시범 운영 • LNG·메탄올 추진 선박 관련 정책 컨설팅 실시 • 태양광 및 풍력 설비 설계·시공 • 항로표지 시설 마련, 최신 항행안전장비 설치 및 시범 운영 • 항만 디지털·환경관리 교육과정 운영

자료: 저자 작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는 구성요소별 산출물과 성과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의 타당성과 측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디지털 전환, 제도 정착 등 실질적인 변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조합하였으며, 다층적 개발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영향 수준

까지 추적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량(tCO₂ eq)은 본 사업의 핵심 목표인 항만의 탈탄소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하역 장비의 전동화, 재생에너지 전환, 저탄소 선박 보급 등의 투입 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다. 해당 지표는 IPCC에서 제공하는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를 기반으로 산정 가능하며, 향후 Verra, Gold Standard 등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될 경우, 탄소 크레딧 등록·발행을 통한 글로벌 활용성도 확보될 수 있다.

저탄소 선박 시범 도입 척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설비 설치 항만 수, 항로표지 설치 수 등은 구성요소별 산출물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업 수행 기간 동안의 투입 대비 실현 성과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협력국 운영데이터를 통해 모니터링 가능하며, 연차별 단계 성과를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 성과 수준의 지표로는 항만당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량(tCO₂ eq), 국제규범 기준 CO₂ 배출 감축 수준, 항만 내 항행사고 발생 건수 감소 등이 포함되며, 이는 단순 설치 성과를 넘어 운영 체계의 전환, 제도 채택, 인력 역량강화 등 구조적 변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본 지표들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간접지표를 설정하여 추정할 수 있기에 사업 종료 후 후속 평가와 확장 사업 기획에 유용하다.

정성적 지표의 경우, 본 사업의 제도적 정착과 조직 역량강화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이들 지표는 사업 시행기관 및 협력국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통해 정의될 수 있으며, 현장 인터뷰, 정책 문서 분석, 제도 채택 여부 등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지표 체계는 현재 기획 단계에서 제안된 초안으로, 추후 협력국의 통계 수집 여건, 정책 목표, 관련 기관의 운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세부 지표와 측정 방식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민간 투자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성과

지표는 달라질 수 있다. 향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지표 정의서와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18〉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 저탄소 선박 도입 수 - 친환경 항만 시스템 구축 수	- 항만당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량(tCO₂ eq) - 국제환경협약 이행률	- 국제 탄소기준 준수율 향상 - 지속가능 항만 운영 체계화
저탄소 선박 보급	- 저탄소 연료 선박(예: LNG, 메탄올) 시범 도입 척수 - 블루카본 파일럿 사업 수	- 국제규범 기준 CO₂ 배출 감축 수준(%) - 저탄소 선박 운항 항로 수	- 해운 부문 탈탄소화 정책 이행 -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도
항만 에너지 고효율화	-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설치 수 - 친환경 하역장비 설치/도입수	- 항만 에너지 운영비 절감 - 항만 내 화석연료 기반 전력 사용 비중 감소율	- 항만 기반 에너지 전환 - 지역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활용 기여도
항행정보시설 개선	- 항로표지 설치 수 - 디지털 관제시스템 운영/적용 항만 수	- 항만 내 항행사고 발생 건수 감소율(%) - 기후재난 시 항만 접근성 유지 가능일수(일)	- 항만 운영 회복력 지수(RI) 향상 - 국제 항행 안전기준 충족
미래지향적 항만 운영 역량강화	- 전문 교육 수료자 수 - 친환경/디지털 항만 운영 매뉴얼 개발 수	- 항만 디지털/친환경 운영 기술 적용 - 지역 청년 고용률 증가	- 항만 전문인력 자급률 향상 - 청년층 대상 항만 분야 신규 고용 창출 수

자료: 저자 작성

5.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은 최근 협력국의 정책 수요와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대응 요구가 함께 고조되는 분야로, 특히 연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수산자원 관리와 양식 기술에서는 일정한 협력 경험이 있으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해양 거버넌스 정착 등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사업은 해양쓰레기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 구성요소별로 구체적인 산출물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국제기구 유사 사례에서 도출된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참조하여,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균형을 적용하고, 구성요소 간 연계성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추적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우선,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개선’ 요소에서는 수거량(톤), 재활용률 등 물리적 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해역 오염면적 변화, 생물 혼획 및 폐사율 등 생태계 영향을 측정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책적 활용을 위해 매뉴얼 개발 수, 정책 채택 사례 수 등 제도화와 실천 수준을 반영한 지표도 포함하였다.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요소에서는 MPA 기반 관광지 조성 수, 생태관광 기반 시설 수,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수 등 관광 자원의 개발 수준을 반영하고, 관광객 수, 지역소득 증가율 등의 정량지표를 통해 경제·환경 통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IUU 어업에서 관광업으로의 전환 비율은 소득 전환 및 해양자원 이용 방식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지표로 설정되었다. ‘해양생물 다양성 및 보호구역 관리 강화’ 요소에서는 현장의 생태 정보 수집 및 관리 수준 평가와 장기 성과 추적을 위한 지표를 도입하였으며, 협력국의 정책 정합성과 국제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지

표도 반영되었다.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요소는 정성적 성격을 포함하면서도 명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캠페인 횟수, 감시단 운영 건수, 주민 환경 인식 조사 결과 등은 사업 운영 성과와 지역 수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 시민사회 참여율, 자율적 감시활동 참여자 수 등은 참여 기반 해양관리체계의 제도화 수준을 보여주는 성과지표다.

이러한 성과지표 체계는 현재 기획 단계의 제안으로, 향후 사업 기획 및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협력국의 통계 수집 여건, 제도 기반, 데이터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생물 다양성 및 보호구역 관리 강화 요소는 필요시 자원 복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내 양식 기술 이전 사업을 모듈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식 기술 이전을 통해 자원 회복이 가능하므로,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 종 보존 등 생태계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표 5-19〉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항목	내용
영향(Impact)	• 글로벌 해양 생태계 회복력 및 해양자원 지속가능성 확보
성과 (Outcome)	• 생물다양성 보호, 시민사회 기반 해양관리체계 정착
산출물 (Output)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책 수립 • 해양생태 관광지 개발 • 보호종 관리 •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활동 (Activities)	• 해양쓰레기 수거·DB 시스템 구축 • 생태관광 기반 시설 조성 • 보호종 모니터링 • 주민 대상 캠페인 및 주민 중심 감시단 운영

자료: 관련 자료 참고³²²⁾ 및 저자 작성

322) KOEM·OSEAN(2021), pp. 13-15.

〈표 5-20〉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 폐어구 수거 장비 및 시스템 설치 수 • 수거된 해양쓰레기 양 (톤) • 수거·재활용 시범사업 수행 지역 수	• 폐어구 재활용률 향상(%) • 해양쓰레기 수거량 증가율(연간 톤 기준) • 해양쓰레기 재활용률 변화(%) • 시범사업 대상지 해양 쓰레기 발생량 대비 회수	• 오염된 해역 면적 변화(km²) • 연안 해역의 해양생물 혼획 사고 감소율 • 해양생물 폐사율 변화 • 지역 기반 해양폐기물 대응 모델 확산
	• 해양쓰레기 추적 DB 구축 건수 • 정책 제안/사례 보고서 매뉴얼 개발 수 • 사회·경제·환경 분석 도구 개발 수	• 관련 정책 채택·적용 및 매뉴얼 추진 사례 수 • 주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해양 쓰레기 영향 식별 수	• 협력국 해양쓰레기 관련 제도화 비율 • 국제 해양환경협약 이행 수준 향상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 MPA 기반 관광지 조성 수 • 생태관광 기반 시설 설치 지역 수 •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수 • 지속가능 관광 가이드 라인 발간 수	• 관광객 수 증가 •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가자 수(내·외국인 기준) • 지역주민 관광 수입 증가 • IUU 어업에서 관광업으로의 전환 비율	• MPA 내 관광-보전 균형도 향상 • 지역 경제 다변화 수준 (수산 의존도 감소율) • 관광 환경 영향 통제 수준 개선 • 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주민 인식도 향상
해양생물 다양성 및 보호구역 관리 강화	• 보호종 지정 수 및 관리 계획 수립 건수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정점 설치 및 모니터링 수	• 보호종 개체 수 증가율 (선정 종 기준) • 보호구역 관리 개선 사례 수	• 협력국 MPA 관리 표준 이행률(%) • 생물다양성 지수 (Biodiversity Index) 향상 • 생물다양성 국제협약 이행 수준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 지역사회 해양보호 캠페인 시행 건수 • 지역 기반 운영 횟수 및 활동 범위	• 지역주민 해양환경 인식 개선도(조사 기반) • 주민 자발적 감시 활동 참여자 수 • 정책 결정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비율	• 주민 기반 해양보호 활동의 제도화 수준 • 해양환경 관련 지역 정책 반영률 •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관리체계 정착 • 지역 해양 보전 거버넌스 운영 지속성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성과 관리 체계화 및 실행 기반 정비 방안

앞서 제4장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세부적인 사업 관리 체계의 정비와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성과지표 개발이 관리 부분 핵심 과제로 언급되었다. 이 중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은 본 장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성과지표의 제시만으로 성과기반관리(RBM)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표가 실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성과지표와 연계된 전반적인 성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1.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 측정법 마련

해양수산 분야는 공간적·기술적 특수성이 강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성과지표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은 해양수산 ODA 사업의 성과 관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는 대체로 보건, 교육, 농업 등 일반적인 ODA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복원, 항만물류 개선, 어업 생산성 증대, 수산물 유통 효율화 등 해양수산 분야의 고유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연안 공간의 다기능성, 수산자원의 회복 탄력성,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성과 같은 항목은 기존의 지표 체계 내에서는 평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의 세부 유형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ODA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사업별 지

표는 사업의 구조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산출물-성과-영향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표 개발과 실제 측정 기준 및 방식 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사업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거나 사업 간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 기반한 측정법 개발 없이 지표만을 제시하는 방식은 사업 설계자 혹은 평가자 간 해석의 차이를 초래하거나, 사업 성과를 과도하게 정성적 서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성 지표의 경우, 수치화가 어려운 특성상 전문가 자문, 참여도 분석, FGD(표적집단면접), 설문조사 등 간접적 측정 방식의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량 지표 역시, 기초선 데이터의 부재나 사업 전후 비교가 어려운 구조적 환경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쉽지 않다.

개발한 해양수산 ODA 성과지표를 실질적인 관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한 측정법 개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초선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성과 예측 체계, 확보된 데이터의 활용도에 대한 측정, 지원된 시설 및 시설의 운영을 통한 파급효과 등 객관적 수치를 활용한 간접 측정 방식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의 사전 정의(Definition), 단위(Unit), 산출식(Formula), 측정 주기(Period), 데이터 출처(Source) 등을 포함한 성과지표 측정 매뉴얼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측정법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유형별 시범사업을 통해 지표-측정법 연계를 검증하고, 협력국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수산 ODA 전반의 성과관리 정밀도와 정책 환류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성과기반관리 체계 정착 위한 지침 제도화 및 체계적 교육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다양한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고유한 기술적 전문성과 자체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성과관리 체계의 통일된 기준 적용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성과기반관리(RBM) 체계 도입에 있어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관리는 국제협력총괄과와 전문기관 간 협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 보고나 진도 점검은 대부분 자체 계획에 따라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화된 제도나 법적 지침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수행기관이 이를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는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과관리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성과의 정의와 측정 방식 또한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성과기반관리 체계는 사업의 목표 설정, 산출물 관리, 성과지표 설계, 기초선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평가와 피드백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한다.³²³⁾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부 ODA 사업에는 이러한 체계가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평가 단계에서 성과 자체가 모호하거나 사전에 정의된 성과지표가 부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도 한계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ODA 수행기관은 대부분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DA 전담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기관 내부에 충분히 구축되

323) UNDГ(2011.10.), p. 2.

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담당자 보직 이동 시 사업 관련 핵심 자료의 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실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기반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지침의 공식적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화된 지침은 모든 수행기관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최소 기준을 제공하며, 자료관리 방식, 성과지표 설계, 사후관리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과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성과지표 산출식 설계, 후속사업 연계 기준 등 성과관리 도구(Toolkit)를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한다면, 향후 성과기반관리 체계의 실질적 적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며, 성과중심의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사후관리 지침(안)」을 포함하여, 사업관리와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적 지침을 부처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정착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수행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ODA의 책임성, 지속가능성, 효과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해외협력센터 및 시민사회 연계 현장중심관리 활성화

해양수산 ODA 사업의 대부분은 협력국 현장에서 수행되지만, 사업 관리 구조는 한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행기관이 대체로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이라는 특성상 현지 파견 인력 운영에 일정한 제약이 있으며, 전문기관 역시 국내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실

시간 현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장 기반 정보 수집과 피드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현장 기반 맞춤형 사업 운영과 사후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OICA와 같이 현지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해양수산 부 ODA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에 구축된 해외연구협력센터를 활용한 현장 관리체계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일부 수행기관은 인도네시아, 페루, 피지, 라스팔마스 등에 해외 거점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정보 수집, 사업 모니터링, 협력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장 기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시민사회 및 NGO와의 협력 확대가 있다. 현지 NGO는 지역사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ODA 사업의 실시간 운영과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부 NGO와 학계는 성과 측정, 인식 개선, 제도 모니터링 등 연구 기반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면 사업의 실행력과 파급 효과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협력국 정부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통한 현지 책임성 확보도 중요하다. 현장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는 단지 한국 측의 모니터링 기능을 넘어서, 협력국 정부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공동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지 정부 부처와의 역할 분담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거나, 성과관리 기능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제4절 소결

본 장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가 목적성과 실행력을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체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양수산 ODA는 해양이라는 공간의 물리적 제약, 기술 요소의 다양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존 ODA 성과지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성과 측정과 환류, 목표 기반의 사업 설계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장에서는 먼저 국내외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해양수산 분야 성과지표 체계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해양수산 ODA의 구조적 특수성과 성과관리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유럽 해양수산 기금(EMFF)은 어업 전환, 환경 보호, 인적자원 개발 등의 영역에 걸쳐 정교한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소규모 어업 보호,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산호초 보호기금(GFCR)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등 해양 생태계 기반의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논리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 단계별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각 지표는 SDG 14(해양 생태계 보전)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병행하여 지표의 실효성과 평가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현장에서 성과기반관리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운영적 기반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ODA의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지표의 정의, 단위, 산출식, 측정주기 등을 포함한 측정법 개발이 필요하다. 지표 자체만으로는 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기획 초기부터 측정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지표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지침의 제도화를 통해 수행기관 간 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성과관리의 공식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행기관이 다양한 해양수산 ODA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 기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관리를 바탕으로 한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현장 기반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해외협력센터, 시민사회, 현지 정부와 연계한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구축된 해외센터의 활용, NGO·지역사회의 참여, 현지 정부의 성과관리 참여 등은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과 제안은 해양수산 ODA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단순한 평가수단이 아니라, 사업 설계와 실행을 포함한 전 주기 운영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본 장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안)와 체계 개선 방향은 제4장에서 도출된 패키지 사업(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다음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전략과 우선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06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과제

제1절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반영 전략(안) —

본 연구는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본 절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은 기존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분야를 반영한 주요 수정(안)이다. 다만, 해당 안은 어디까지나 해양수산 분야를 중점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기본계획 내 반영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도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먼저, “II. 제3차 기본계획 평가 및 대내외 환경분석” 중 “2. 대내외 환경 분석 □ (글로벌 난제 확산)”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해양수산 관련 도전과제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양오염 심화,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 확산 등 해양수산 분야의 글로벌 도전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195개국 중 182개국(93.3%)이 연안국이며, 이 중 80% 이상이 개발도상국으로, 2023년부터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존의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며, 특히 기후변화가 연안국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와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

〈표 6-1〉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기후변화 대응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기존(제3차)	변경
□ (글로벌 난제 확산)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 쏠지구적 도전과제로 인해 글로벌 연대·협력 및 국제공조 시급성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해 개도국 내 최대 1억 명 이상의 빈곤층 발생 전망('16년, 세계은행) ○ 위기 대응을 위한 ODA 수요* 지원과 함께 개도국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사회 복원을 통한 항구적 위기 대응역량 구축 지원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3) 후 100여 일 만에 150여 개국에서 방역물품 등 지원 요청	□ (글로벌 난제 확산)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 쏠지구적 도전과제로 인해 글로벌 연대·협력 및 국제공조 시급성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해 개도국 내 최대 1억 명 이상의 빈곤층 발생 전망('16년, 세계은행) ○ 위기 대응을 위한 ODA 수요* 지원과 함께 개도국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사회 복원을 통한 항구적 위기 대응역량 구축 지원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양오염 심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확산 등으로 정상회의에서 해양 기반 협력 요청 증가('23년, 한태도국 정상회의,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III. 제4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의 전략 2 “상생하는 ODA” 아래 세부과제 “**2** 녹색 전환 선도”의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항목에 해양수산 분야 협력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기존 내용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인 만큼, 연안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청색경제 발전 지원이 추가된다면 전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표 6-2〉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연안개도국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기존(제3차)	변경
전략 2 상생하는 ODA ② 녹색 전환 선도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 베트남·미얀마 등 개도국과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국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 * (목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제거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역량강화 ○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한 연안개도국을 대상으로 재해 대응·해양환경 관리·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 및 기술 이전 종합 패키지 지원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활용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청색경제 기반 역량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전략 2 상생하는 ODA ② 녹색 전환 선도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 개도국과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산업·수송·발전 등 주요 배출원 개선을 위한 R&D 및 법·제도 개선 추진 * (목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제거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역량강화 ○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한 연안개도국을 대상으로 재해 대응·해양환경 관리·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 및 기술 이전 종합 패키지 지원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활용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청색경제 기반 역량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IV. 제4차 국제개발협력 자원배분 방향”의 “4. 분야별 배분 방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라는 흐름 속에서, 오세아니아 권역 및 군소도서국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 ODA의 전략적 확대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역별 비교우위 분야로서 해양수산의 역할이 보다 명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3〉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분야별 배분 수정(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기존(제3차)	변경
4. 분야별 배분 방향 □ 개도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22년까지 보건 의료 분야 지원 대폭 확대('21년 3,358억원, 전년대비 21% 증액)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ODA, ICT 공공행정 등 비교우위 분야 ODA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	4. 분야별 배분 방향 □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권역별 중점협력분야 지원 확대('30년까지 전체 ODA 예산의 00% 이상 달성 목표) ○ 아시아는 교통·물관리·공공행정, 아프리카는 농업·보건·교육 분야, 중남미는 교통·산업·환경 분야, 오세아니아 및 군소도서국은 해양수산 분야 등 권역별 비교우위 분야 ODA 강화 ○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이행체계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반영(안)은 해양수산 분야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SDG 14(해양 생태계 보전)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위상을 국제개발협력 정책 속에 더욱 확고히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제4차 기본계획이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적 ODA 전환과 연계하여,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분야별 특화 협력모델의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중점협력국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더 나아가, 분야별 전략 권역을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시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태평양 도서국 및 카리브해 연안국을 전략 권역으로 설정하여, 해양환경 보전, 수산자원 관리, 해운·항만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종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야별 전략 권역 설정은 “III.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부분의 “1. 4대 전략목표별 추진과제” 중 “상생하는 ODA” 전략 아래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사료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사회 발전기반 조성” 부분에 권역별 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분야별 전략 권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 교육, 해양수산 등 복수 분야를 융합 연계한 패키지 사업 모델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함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4〉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전략 권역별 배분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기존	변경
□ (대륙별 배분) 정부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보건·위생·교통·인프라 지원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 유지	□ (전략 권역별 배분) 정부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권역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지원 추진
○ 중남미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사업 다변화	○ (해양수산) 태평양 도서국 및 카리브해 연안국을 주요 전략 권역으로 설정하여 해양환경, 수산자원 관리, 해운·항만 인프라 등 통합적 지원 ○ (농림)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을 식량안보 전략 권역으로

기존	변경
	설정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가치사슬 개선 지원 ○ (교육)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교육·과학기술 전략 권역으로 설정하여 직업기술교육 및 고등교육 중점 지원 ○ (보건의료) 아프리카를 보건의료 전략 권역으로 설정하여 의료 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력 양성 지원
(이하 중점협력국 내용으로 이어짐)	○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패키지 사업 개발 ○ 권역 내 국가 간 협력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권역별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선(안)

1. 발굴 및 기획 정책 과제

1) 우선순위 일관성 강화

해양수산부는 ODA 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5년 주기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부서 및 관계기관이 일관된 기준 아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외교전략을 참고하여, 해양수산부 ODA 사업이 국가 전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항 보완을 통해 근거 조항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 설정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

된 매뉴얼로 마련하여, 해양수산부 내 모든 부서와 관계기관이 공통된 방식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정상회의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논의된 협력 의제와 각 기관에서 제안된 개별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중요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2025년 2월부터 진행되는 2026년도 신규사업 제안 과정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주요 수행기관의 기관장급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협의체는 연도별 계획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소통 채널로 기능하며, 국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양수산 ODA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는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 ODA의 효과성과 전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협력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체계도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개발협력 어젠다와 협력국의 개발 수요 변화에 맞추어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 개정에 필요한 정책적·현장적 참고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어젠다와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정책 분석, 협력국 수요 모니터링, 유관 부처 정책 연계 분석 등 정기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 ODA 사업 전략화

해양수산부는 협력국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산 전 분야를 포괄하는 패키지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력국의 해양수산 분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무상 연계

및 타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기획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K-OEI'의 핵심 분야인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 보전, 인재 양성 등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특화 모델을 개발하여, 해양수산부 ODA만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모델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효율적인 패키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내 부서 간,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부처 및 기관별로 진행되는 사업 발굴과 기획을 연계·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 타당성 조사와 연계 가능한 사업 간 통합적 기획을 통해 정책 목표와 실행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있다.

패키지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시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장 적합성, 사업 간 연계 효과, 실행상의 문제점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본사업 추진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패키지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OICA 등 타 부처 및 유관기관이 진행 중인 패키지 사업에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5년 현재, KOICA와는 식량안보 및 산업 인재 양성 분야에서 패키지 사업 공동 기획을 논의 중이며,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 한중양아포럼사무국과는 '키르기스스탄 국립수산업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타 국가로의 모델 확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다양한 기관 간 패키지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중장기적 협력 전략 수립을 위해 전략 권역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 협력 수요가 큰 군소개

발도서국 중심의 접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태평양 도서국 및 카리브해 연안국을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협력 권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태평양 도서국은 수산물 생산과 해양 물류의 중요 지역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 협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2023년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이 지역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자협력 및 민간협력 확대

해양수산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개발협력 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FAO, IMO, IUCN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자성 양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ODA사업으로의 다자사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다자성 양자사업은 통계상 양자사업으로 분류되며, 사업 구성 및 추진 방식 또한 일반 양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 및 구성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다자사업의 신규 발굴과 확대가 요구된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부처차원의 직접 추진이 중요하므로, 해양수산부 내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발굴·기획을 위한 체계 구축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내 역량강화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각 부서가 서로 다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 참여자 다각화를 위한 민간업계, 시민사회, NGO의 실질적인 참여 기반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 부문은 일부 수요조사 및 사업 기획 단계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 및 관리 단계에서의 참여는 다소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OCEANAID 워크숍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 주체가 사업 설계 및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이 보유한 해외연구협력센터(인도네시아, 페루, 피지, 라스팔마스 등)를 활용하여 현지 중심의 사업 수행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지 시민사회 및 NGO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현지 기반의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체계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제5장 제3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ODA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양수산 분야는 공간적·기술적 특수성이 높은 만큼, 축적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과 측정과 이를 반영한 실행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학계의 전문성과 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전략 수립, 사업 효과성 분석, 제도적 보완 등의 과제를 연구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성과기반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학술 기반 연구를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실행·성과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행 관리 및 평가 정책 과제

1) 성과기반관리 기준 및 체계 마련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수행기관별로 개별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기관별 다른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행기관이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이므로 ODA 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기관 간 혹은 담당자 간 역량 차이로 인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울러, 담당자의 보직 이동 시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며, 사업 추진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의 관리 기준과 체계에 대한 몇 가지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사업 기획부터 실행, 모니터링,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 체계로 성과기반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관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ODA 통합정보포털을 활용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성과관리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 제4장에서 제시한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와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기존 ODA 성과 관리 체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도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 관리 체계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수행기관 중심 운영 방식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해외 연구협력센터(인도네시아, 페루, 피지, 라스팔마스 등)를 활용한다면 현지 기반 관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 기반 권역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면 사업 수행 관리의 현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제안사항은 성과지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제5장 제3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담당자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인계 지침 마련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필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시 공유할 항목을 미리 정해두고, 정보 공유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 자료는 전문기관과 공유하여 전문기관을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한다면 기관별

정보 관리 추진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행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OCEANAID의 참여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OCEANAID는 수행기관 간 협력 워크숍으로, 2024년 국무조정실의 해양수산부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³²⁴⁾ OCEANAID 개최 시 지역별 분과 세션을 진행한다면 수행기관 간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간 및 NGO, 시민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 체계 개선 및 제도화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2010년대 중반까지 규모가 크지 않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사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ODA 예산 규모 기준으로 주요 부처 10위 이내에 포함되면서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사업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기관별로 사업 수행 방식과 성과 관리 체계가 다르기에 국제개발협력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평가 결과가 실제 성과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ODA 사업의 성과 평가 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외부 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내부 평가는 평가 담당자가 ODA 평가의 목적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지침을 정비하고 활용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제정

324) 국제개발협력위원회평가전문위원회(2025), p.8, 14

후 2024년 전문기관에서 수정 제안했던 평가 지침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여 사업 수행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평가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본 사항은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내부 평가 수행기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평가 예산의 안정적 확보도 중요하다. 현재는 전문기관에서 외부평가를 담당하나 그 예산이 변동적이고, 내부평가는 각 사업에서 추진하지만 ODA 사업 예산 내에 평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평가의 질이 고르지 않고 외부 전문가 참여나 현장 평가 수행이 제한적인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개정되는 ODA 사업 평가 규정³²⁵⁾에 맞춰 해양수산부 ODA 사업 예산 내 평가 예산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 사항은 2026년 신규사업 제안 시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성과지표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범용적인 성과지표는 해양수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제5장에서 제안한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성과관리 도구를 활용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해 지표의 정의와 측정 기준을 사전에 검증한다면 해양수산부 ODA 사업 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과 목표 설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협력국의 발전 수준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성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설계하여 명확한 평가가

325) 국무조정실(2024)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주기적인 검토도 진행한다면 사업 수행과 목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목표 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사업 제안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 추진 방향에는 부합하나, ODA의 개발 효과성과 목표 설정 원칙에는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성과 목표 수립 시 ODA 평가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및 제안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안내와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이 사항 역시 2026년 신규사업 제안 시부터 적용되고 있다.

3) 현장 관리 및 분산 정보 수집 및 공유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수행기관은 대부분 국가기관이자 공공기관이기에 보안 규칙에 따라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관리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성과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분산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기관과 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기존 사업 수행 체계에서는 사업 수행기관이 전문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없었고, 정보 공유에 동의하더라도 기관 보안 규정으로 인해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 공문을 통한 자료 공유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관련 주요 문서 및 성과 데이터를 전문기관과 해양수산부가 동시에 공유받도록 한다. 이는 사업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성과 관리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체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수행기관 내부 보안 규정상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자료 공유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SNS·이메일 등을 활용한 자료 전달 시스템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 공유 채널로 각 기관 담당자가 필요 정보를 신속히 전달받아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유관기관의 해외연구협력센터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운영 중인 해외 거점센터를 통해 권역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센터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중앙 차원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며,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지 시민사회 및 NGO와의 협력도 병행하여, 공식적 채널 외의 다양한 현장 정보를 보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체계를 갖추 수 있다. 현지 시민사회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감시 및 수요 기반 정보 파악에 강점이 있는 만큼, 이들과의 협력은 현장 데이터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채널 기반의 정보 수집·공유 체계는 향후 현장 기반 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홍보·교육·환류 정책 과제

1) 일관된 성과 홍보 및 정보 공개 지원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성과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 단위의 단편적인 홍보가 아닌, 해양수산부 ODA 전체의 통합된 성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정책적 이

미지 제고와 민간 참여 유도에 기여할 수 있다.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SNS 플랫폼을 통해 ODA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영상이나 인포그래픽 등 시각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인다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ODA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 종료 시 배정되었던 담당자의 업무가 변경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사업 종료 평가 대응 혹은 사업 중 구축된 네트워크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ODA 사업을 통해 구축했던 현지와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성과보고서를 발간·배포하여 ODA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자료이자 홍보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협력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보고서를 번역·배포할 경우, 사업 성과에 대한 현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 홍보 및 정보 공개 체계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 ODA 이해도 향상 교육 확대

ODA 사업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 및 성과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기관별 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병행한다면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 운영 성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보직 이동에 따른 잦은 ODA 담당자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도입하고, 신규 담당자가 신속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고, 공무원의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 자료 제공 및 영상 강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수 교육 체계는 2024년부터 일부분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추가적으로, 타 ODA 사업 시행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ODA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국내 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당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학회 등 학계와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해양수산 ODA 사업과 우리나라 ODA 정책 간 부합도를 높이고, 최신 연구 성과를 ODA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ODA 사업의 정책 부합도 및 ODA 사업 수행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3) 환류 체계 고도화

ODA 사업의 평가 환류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경영 및 추진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실질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환류는 국별 지원 전략 수립, 사업 발굴 체계 개선, 성과 측정 지표 설정,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개선안 수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환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담당자와 전문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간 및 개별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를 사업 수행기관 차원에서 차기 사업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평가 결과 도출 시 확인된 개선점과 성과는 다음 연도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에 직접 연계되도록 하고, 연계 지원을 위해 평가 관련 교육 과정에도 환류 개념과 사례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의 핵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체계는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 중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정기적인 평가 결과 공유회를 운영함으로써 사업 수행기관 간 평가 결과 및 개선 사항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ODA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사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축적된 평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연차 성과 보고서에 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배포하는 것도 평가 결과 공유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본 장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 설정과 부처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해양수산 ODA는 2020년대 후반 들어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단순히 개별 부처 차원의 단기 과제 발굴을 넘어, 국가 개발협력 체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제4장과 제5장에서 도출된 패키지 사업 모델과 성과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과 운영 여건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장 제1절에서는 기존 제3차 기본계획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분야가 반영 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응·분야별 권역 설정·연안개도국 지원 확대 등 국제적 흐름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는 해양수산 ODA가 단일 부처 과제가 아닌, 범정부 개발협력 정책의 전략적 구성요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용이다. 이어 제2절에서는 해양수산 ODA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사업 이행을 위해 발굴·기획부터 수행·평가, 환류·홍보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부처 차원에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발굴 및 기획 부문에서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우선순위 설정 절차 마련, 전략 권역 설정, 패키지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전략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상회의 후속 이행방안 등 대외정책과 연동된 구상도 제시되었다.

수행·평가 부문에서는 현장 기반의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 표준화 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평가 지침 정비, 평가 예산 안정화 등으로 실질적 성과기반관리(RBM)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제안한 패키지 사업(안)과 성과지표(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홍보·교육·환류 부문에서는 국민과 국제사회 대상의 인식 제고와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를 위해, 통합 홍보전략 수립, 실무자 대상 맞춤형 교육 체계 정비, 평가 결과의 데이터화 및 공유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 실행 지속성,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언으로 기능하며, 향후 민간·학계·시민사회와의 전략적 연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장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범정부 ODA 전략 체계 속에서 독립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 및 제도 기반을 정리한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본 장의 제안이 실질적 정책 반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내부의 이행 전략 마련과 함께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의 전략적 조율 및 후속 절차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07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수행 구조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은 그동안 농업, 교통, 환경 등 타 분야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국가 ODA 전략 내에서 해양수산 분야 고유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독자적으로 반영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적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 차원의 전략 방향과 실행과제를 제6장에서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10년간 해양수산 ODA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질적 기반 마련과 정책 체계는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ODA 사업에는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처 내 여러

과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발굴·기획, 관리·평가, 홍보·환류 등의 지침 마련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5장과 제6장에서 성과기반관리 체계 도입, 관리 지침 제도화, 현장 기반 운영체계 구축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셋째,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정책 환경과 협력국 해양수산 협력 수요, 이 해관계자의 역량 및 해양수산 ODA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은 KOICA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나 EDCF의 종합 제안 방식과 차별화되며,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전문성과 협력국의 지역별 협력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실행력과 정책 부합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사업(안) 유형은 산업 인재 확보,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섯 가지로 구체화되며, 세부 내용은 제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해양수산 분야 특수성과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를 마련하였다. 기존 국무조정실의 범용적 ODA 성과지표는 해양생태, 연안관리, 해운·항만, 어업 등 해양수산 특화 분야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제4장의 패키지 사업(안)을 기준으로 제5장에서 사업별 성과지표(안)를 제시했다. 이 성과지표(안)는 사업별 논리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되었으며, 관리체계 개선 방안과 함께 제안했다. 패키지 사업(안)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사업 기획 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과 실행과제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반영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활용해 해양수산 특화 전략 및 과제를 근거 중심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단독 반영보다는 타 부문과의 연계 논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패키지 사업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안된 패키지 사업(안) 간 중복 방지와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무조정실과 제안 부처 간 협의에 따라 패키지 사업 기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정 기준이나 실행 절차는 불명확하다. 관련 정보의 공개와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의 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지표의 측정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지표 산출식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별도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패키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력국의 국가개발계획 및 정책 주기와의 정합성 확보, 민간·지방정부·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수산 분야도 다부처·다분야 통합형 사업 구조 내에서 전략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내부 조정과 외부 협력 모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언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전략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실행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국가 ODA 정책 내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실효적 기여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5),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_____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 _____ (2021.5.),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 _____ (2021.1.20.),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 _____ (2022a),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 _____ (2022b), 과기·ICT ODA 추진전략.
- _____ (2023.2.9.),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 _____ (2023a),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 _____ (2023b),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 _____ (2024a),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 _____ (2024b),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안).
- _____ (2025a),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 _____ (2025b), 한국 ODA 발전방안.
- _____ (2025c),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 국무조정실(2022.1.), ODA 사업 성과지표 모델(안).
- _____ (2024), 국제개발협력 평가 관련 규정 개정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평가전문위원회(2025), '24년도 기관역량진단 결과(가칭).

-
- 권율·유정환·이은석·이주영·유애라·김성혜(2021),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2021.7.7.),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_____(2021.11.),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안).
- 김세원·김종섭·이영섭(2013),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협력기금(2024),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개.
- 대한민국 정부(2021.1.), 제3차 해양수산물발전 기본계획(2021-2030).
- _____(2022a),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_____(2022b),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 박성욱·이주아·차정미(2023), 우리나라 외교정책과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45(1), pp. 23-31.
- 신한금융그룹(2023), 신한금융그룹 2022 ESG 보고서.
- 윤일선·이수영·남다정·김다휘(2017), 해양수산물 ODA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 이대섭·허장·이윤정·김윤정(2015),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2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대우(2023),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정세와 정책, 2023-2월호(통권 350호).
- 이상권·정인희·조윤진(2022), MZ 세대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60(3), pp. 443-458.
- 이석원·신재은(2017), 한국형 ODA 모델의 활용성과와 개념 적절성, 국제개발협력연구, 9(2), pp. 1-22.
- 임원혁·주민재·김윤정·이규찬·최정애(2020), 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정명화·조정희·한덕훈·문석란·김세인·마창모·이승우·박상우(2015), 해양수산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굴 연구: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 정혁(2016), ODA 규모 결정요인 실증분석과 한국에의 적용, 국제·지역연구, 25(1),

- pp. 49-80.
- 지성태(2014),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우량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사례집.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2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21 연차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2023.6.), 2024 KOICA IBS 프로그램 안내서.
- _____ (2024), 2024-2025 KOICA CTS 프로그램 안내서.
- _____ (2025),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프로그램 리플렛.
-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사업본부(2024), 최근 5년 EDCF 승인 사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0.7.), FTA 월간 FISHERIES TRADE ANALYSIS.
- _____ (2022a), 베트남 선원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 _____ (2022b), 수산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세네갈 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종료평가보고서.
- _____ (2024a), 가나 어선원 양성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 _____ (2024b), 세계해사대학(WMU) 연안개도국 IUU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 시행 계획서(내부자료).
- _____ (2024c), 태평양소도서국 해양산성화 관측 및 대응네트워크 구축사업 사후 평가 결과보고서.
- _____ (2024d), '24년 해양수산부 ODA 양자사업 대상 PDM(안) 서면 자문지원서(내부자료).
- _____ (2025a), 키르기스스탄공화국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서(내부자료).
- _____ (2025b),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사업(내부자료).
- _____ (2025c), 관계부처 합동 2019-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데이터셋 (내부자료).
- _____ (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 한덕훈·김정현·전혜은·이지인·차보민(2021), 해양수산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해양수산 ODA 중장기 발전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함기영·민영훈(2017),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요규범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 수산(ODA) 발전방향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2), pp. 210-21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2024.10.),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25-202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2021),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21~2025).

해양수산부(2019.12.),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2019~2028).

_____ (2021.1.),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_____ (2021.3.),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_____ (2022),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

_____ (2024), K-Ocean Economy Initiative(K-OEI) 발표자료.

허장·정승은·조한슬·이성희·이남호(2014),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현표·마창모(2010), 수산 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EM·OSEAN(2021), 필리핀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사업 발표자료.

국외 문헌

Alberghini, Leonardo, Truant, Alessandro, Santonicola, Serena & Giaccone, Valerio (2022), Microplastics in Fish and Fishery Products and Risks for Human Health: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SEAN(2021), ASEAN Regional Action Plan for Combating Marine Debris in the ASEAN Member States(2021-2025).

Andrew, W. & Ingrid, V.A.(2022), 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Mid-Term Reviews: Review Report.

Australian Government(2023), Austral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 Berger, Michael F., Caruso, Vincent, & Emily, Peterson(2019), An updated orientation to marine conservation funding flows, *Marine Policy*, 107(26), 103497.
- Blasiak, Robert & Wabnitz, Colette C. C.(2018), Aligning fisheries aid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targets and goals, *Marine Policy*, 88, pp. 86-92.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2024),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Conserving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Protecting Life on Earth*.
- Brown, Stephen(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development assistance, *International Journal*, 76(1), pp. 42-54.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5),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 Overview, p. 1.
- Develtere, Patrick, Huyse, Huib & Ongevalle, Jan Van(2021),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day: A Radical Shift Towards a Global Paradigm*, Leuven University Press.
- Esteves, Paulo & Assunção, Manaíra(2014),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battlefield: Between the OECD and the UN, *Third World Quarterly*, 35(10), pp. 1775-1790.
- European Commission(2017), Directorate-General for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Unit D.3., *FAME SU EMFF Evaluation Working Paper*, Brussels.
- FAO(2023b), *Monitoring, Evaluation and Learning Framework: A Handbook in Suppo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Voluntary Guidelines for Securing Sustainable Small Scale Fisheries in the Context of Food Security and Poverty Eradication*, Rome. <https://doi.org/10.4060/cc8688en>
- _____(2023a), *RESOLUTION 23/08 ON ELECTRONIC MONITORING STANDARDS FOR IOTC FISHERIES*.
- _____(2024),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SOFIA)*, Rome, Italy.
- GCF(2021.7.16.), *Integrated results management framework*.
- GGGI(2021), *Green and Blue Economy Synergy - Concepts and Methods for the OECD 7S Green-Blue Growth Index*, GGGI Technical Report, No. 23, pp. 2-8.
- IUCN(2017.11.),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ssues Brief*.
- Janus, Heiner, Klingebiel, Stephan, & Paulo, Sebastian(2014), *Beyond Aid: A Conce*

-
- ptual Perspective on the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7(2), pp. 155-169.
- JICA(2016), *SDGs 達成への貢献に向けて：JICAの取り組み*.
- _____(2023a), *JICA Annual Report 2023*.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_____(2023b), *JICA Data Book 2023*.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adongola, R., Ahern, M.(2023). Empowering women in small-scale fisheries for sustainable foodsystems – Consolidated baseline report: Ghana, Malawi, Sierra Leone, Uganda and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Rome, FAO. <https://doi.org/10.4060/cc3788en>
- Mangubhai, Sangeeta, et al.(2022.10.), *Progressing gender equality in fisheries by build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development organisations*, *World Development*, volume 158.
- Morales, Yolanda, Estors Carballo, José, López de Aragón, Lucía(2023), *ROADMAP TO A BLUE PORT*, FAO.
-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Development(2022), *Fisheries Act, 2002 Act 625*.
- NORAD(2022), *Evaluation of Norwegian support under the Nansen cooperation in the fisheries sector*.
- Norwegian Ministries(2016), *Blue Opportunities*.
-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7.6.), *Common Responsibility for Common Future*.
- OECD(1978),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 _____(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_____(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 _____(2019), *2018 Revision of the DAC Global Relations Strategy*.
- _____(202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Germany 2021*,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development-co-operation-peer-reviews-germany-2021_bb32a97d-en.html
- _____(2022),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22*,

-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development-co-operation-peer-reviews-united-states-2022_6da3a74e-en.html
- _____(202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New Zealand 2023,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development-co-operation-peer-reviews-new-zealand-2023_10883ac5-en.html
- _____(2024), DAC Enlargement and Accession, [https://one.oecd.org/document/DCD/DAC\(2023\)24/FINAL/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DAC(2023)24/FINAL/en/pdf)
- _____(2024.5.2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 Pittman, Jeremy, Colette C.C. Wabnitz, & Robert Blasiak(2019), A global assessment of structural change in development funding for fisheries, *Marine Policy*, 109, 103644.
- Pew Charitable Trusts & SYSTEMIQ(2020), *Breaking the Plastic Wave*.
- Ryabinin, Vladimir, Julian Barbière, Peter Haugan, Gunnar Kullenberg, Neville Smith, Craig McLean, Ariel Troisi, Albert Fischer, Salvatore Aricò, Thorkild Aarup, Peter Pissierssens, Martin Visbeck, Henrik Oksfeldt Enevoldson, & Julie Rigaud(2019),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ntiers in Marine Science*, 6, 470.
- Teaurere Rerekura, Siulua Tokilupe Latu, Rozane de Waegh, Mark Orams, & Michael Lück(2023), Foreign aid, human agency, and self-reliance in the Pacific: Lessons from the pandemic, *Development Policy Review*,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vol.41(S2).
- UN(2012), Review of the contributions of the MDG Agenda to foster development: Lessons for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 _____(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_____(2023),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UNDG(2011.10.), *Result-Based Management Handbook*.
- UNDP(2015), *What will it take to achieve the MDGs? An International Assessment*.

UNEP(2024), Global Fund for Coral Reefs, Monitoring and Evaluation Toolkit. pp. 7-9.

UNCTAD(2024),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Waltz, Mike, Mark Kelly, Marco Rubio, & John Garamendi(2024), 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Reversing the Decline of America's Maritime Power, United States Congress.

WWF(2024), 2024 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

보도자료

외교부 보도자료(2024.5.9.),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978(검색일: 2025.1.23.)

외교부 보도자료 (2025.3.21.),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950&page=1&pitem=10(검색일: 2025.4.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1.19.), 한국과 필리핀, 지속가능한 수산 협력 방안 모색,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9308&listUpdtDt=2024-11-22++10%3A00&menuSeq=971&bbsSeq=10>(검색일: 2025.1.7.)

해양수산부(2023.2.1.), 2023년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20여개국에 287억원 규모로 추진,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48921&menuSeq=971&bbsSeq=10>(검색일: 2025.1.7.)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19998호, 2024.1.16.).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4-97호, 2024.8.2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6338호, 2019.8.27.).

인터넷 자료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인도-태평양 전략,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ewReportChk=list&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33793>(검색일: 2025.3.23.)
- 경제외교 활용포털,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체결 MOU, https://president.globalwindow.org/kz.info.MouDetail.do?mou_seq=1491#!(검색일: 2025.3.16.)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POST-2015와 시민사회, http://www.kofid.org/ko/post2015_citizen.php(검색일: 2025.4.3.)
- 국제개발협력학회, 학회목표, <https://www.kaidec.kr/contents/kr/about.htm?ch=2>(검색일: 2025.2.14.)
- 김성인, 전문가 칼럼, 한국 수산양식, 중앙아시아가 부른다(2022.6.24.),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s://www.centralasia-korea.org/korcen/na/ntt/selectNttInfo.do?nttSn=111332&bbsId=1107>(검색일: 2025.1.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6.12.),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list_no=10787&act=view(검색일: 2025.3.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7.7.24.), 국민의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40038>(검색일: 2025.3.15.)
- _____(2020.3.2.), 신북방정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644#policyCuration>(검색일: 2025.2.14.)
- _____(2024.11.17.), 한-페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채택…방산·인프라 등 협력 강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364>(검색일: 2025.3.15.)
- 미디어피아, [ESG사례 2] 월마트, 지속가능 기업을 지향하는 최대 유통기업(2022.12.26.),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51>(검색일: 2025.1.18.)
- 연합뉴스(2024.10.7.), 코이카 ‘개도국 산업인재 양성’ 등 4대 시그니처 프로그램 추

-
- 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7075300371>(검색일: 2025.1.10.)
- _____(2022.4.14.), 한국국제교류재단, 중남미 7개국 유력인사 초청 '한국 알리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4094000371?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3.15.)
- 외교부(2014.12.23.), 기타기구정보, https://www.mofa.go.kr/www/brd/m_3861/view.do?seq=299123(검색일: 2025.2.1.)
- _____(2023.5.29.),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담(마셜제도), https://gbr.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251&page=1(검색일: 2025.3.16.)
- _____(2023.5.28.),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바누아투), https://gbr.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248&page=1(검색일: 2025.3.17.)
- _____(2024.3.13.),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732(검색일: 2025.3.15.)
- _____(2024.3.20.),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3.15.),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746(검색일: 2025.3.15.)
- _____(2024.7.4.), 뉴포커스, 제15차 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70830(검색일: 2025.2.1.)
- 외교부, 서남아시아태평양, https://www.mofa.go.kr/www/wpge/m_3483/contents.do(검색일: 2025.1.8.)
- 외교부, 인도-태평양 전략 소개, https://www.mofa.go.kr/www/wpge/m_25838/contents.do(검색일: 2025.1.23.)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ofis.or.kr/boards/view/board_news/20147(검색일: 2025.1.10.)
-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한-가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 개최(2020.11.27.), https://overseas.mofa.go.kr/gh-ko/brd/m_9766/view.do?seq=1337386(검색일: 2025.3.19.)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분야별 대아세안 정책, https://overseas.mofa.go.kr/asean-ko/wpge/m_21538/contents.do(검색일: 2025.2.13.)
-

- 한국무역협회,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https://m.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JSESSIONID_KITA=7F0AE0FDD78484FF2C1FF121EEE124DB.Hyper?no=2606(검색일: 2025.1.10.)
- 한국수산자원공단, 읍서버는 무슨 일을 할까요?, <https://www.fira.or.kr/kobserver/introduce/mission.do>(검색일: 2025. 3.27.)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https://kaosts.org/conference/conference03.asp>(검색일: 2025.2.15.)
- 한국해운협회, 외국인해기사 양성 ODA 사업 추진(안), https://oneksa.kr/pdf/web/viewer.html?file=/data/board/doc/sea_team/90487707fad982878cfc73f3d48d7039.pdf(검색일: 2025.1.10.)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https://www.cgs.or.kr/business/esg_tab01.jsp?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1.18.)
-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업의 숨은 조력자, 국제읍서버 모집,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43240&menuSeq=971&bbsSeq=10>(검색일: 2025.3.27.)
- KIAT(2022.5.11.), 사업공고, 2022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재공고, https://www.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contents_id=62c25ff5d15343f1af7a55e0da1b600a(검색일: 2025.1.31.)
- KIAT, 사업공고(2023.5.3.), 2023년도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공고, https://www.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miv_pageNo=1&miv_pageSize=20&total_cnt=&LISTOP=&mode=W&contents_id=ca4ec54aa0644ea78b9e031a0bdac28d&board_id=90&cate_id=&field_id=&intropage_boardUseYn=&MenuId=b159c9dac684471b87256f1e25404f5e&state_filter=W&contents_year=&start_date=&end_date=&searchkey=T&searchtxt=(검색일: 2025.1.31.)
- KOFIH, 주요 사업 소개, <https://www.kofih.org/web/lay1/S1T16C19/contents.do>(검색일: 2025.3.26.)
- KOICA 오픈데이터포털, 2023 OECD CRS++ rawdata, <https://www.oda.go.kr/opo/nstat/opoNstatInfoOthBcOecdList.do>(검색일: 2025.1.15.)
- KOICA, 주요사업, 형태별 지원현황, 혁신적개발협력사업, <https://www.koica.go.kr>

/koica_kr/959/subview.do(검색일: 2025.2.3.)

KOPIA, KOPIA 소개, <https://itcc.rda.go.kr/kopia/portal/kopiaBiz/kopiaBizPresent.do?menuNo=1&languageGb=01>(검색일: 2025.1.31.)

KOPIA, KOPIA 소개, 국가별 사업현황, <https://itcc.rda.go.kr/kopia/portal/kopiaBiz/kopiaBizStatus.do?menuNo=1&languageGb=01>(검색일: 2025.1.31.)

KSP, KSP 사업운영, <https://www.ksp.go.kr/pageView/organization>(검색일: 2025.1.6.)

KSP, KSP 소개, <https://www.ksp.go.kr/pageView/ksp-intro>(검색일: 2025.1.6.)

KSP(2018.8.27.), 2018/19년 KSP 사업 목록, <https://www.ksp.go.kr/post/news/2665>(검색일: 2025.1.6.)

____(2020.7.29.), 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예정사업목록, <https://www.ksp.go.kr/post/news/4921>(검색일: 2025.1.6.)

____(2024.2.28.), 2021/22년도 KSP 사업 목록, <https://www.ksp.go.kr/post/news/6761>(검색일: 2025.1.6.)

____(2024.1.23.), 2023/24년도 KSP 사업 현황, <https://www.ksp.go.kr/post/news/6729>(검색일: 2025.1.6.)

ODA Korea, ODA 체계,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41(검색일: 2025.1.18.)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34(검색일: 2025.1.18.)

ODA Korea,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52(검색일: 2025.4.30.)

ODA Korea, 실무위원회,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16(검색일: 2025.4.30.)

ODA Korea, 평가전문위원회,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17(검색일: 2025.4.30.)

ODA Korea, 주요 수원국,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tileLayout>(검색일: 2025.1.16.)

ODA Korea, 주요정책문서 국가협력전략(CPS),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2(검색일: 2024.12.5.)

- Africa Defense Forum, Six West African Countries Account for 20% of World's Illegally Caught Fish(2023.3.14.), <https://adf-magazine.com/2023/03/six-west-african-countries-account-for-20-of-worlds-illegally-caught-fish/>(검색일: 2025.1.13.)
- Australian Government, News speeches and media, <https://www.dfat.gov.au/news/Pages/ausaid-department-of-foreign-affairs-and-trade-integration>(검색일: 2025.3.19.)
- BMZ, Ministry - Structure and organisation, <https://www.bmz.de/en/ministry/structure-and-organisation>(검색일: 2025.4.3.)
- Department of Agriculture, PH and Korea hold 1st Joint Fisheries Committee Meeting, https://nfrdi.da.gov.ph/2021/10/13/ph-and-korea-hold-1st-joint-fisheries-committee-meeting/?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3.27.)
- European Parliament, Protoco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eries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Guinea-Bissau (2024-2029) (Resolution)(2024.10.3.), <https://eur-lex.europa.eu/eli/prot/2024/2589/oj/eng>(검색일: 2025.4.3.)
- FAO, About the CFI, <https://www.fao.org/in-action/coastal-fisheries-initiative/overview/en/>(검색일: 2025.1.7.)
- FAO(2022), Aquaculture growth potential in Tajikistan, p. 54, <https://openknowledge.fao.org/server/api/core/bitstreams/621d3380-27fb-4081-8fc7-83a51e03c00b/content>(검색일 2025.1.13.)
- FAO, Blue Port Initiative, <https://www.fao.org/in-action/blue-ports-initiative/about/en/>(검색일: 2025.5.9.)
- FAO, CFI in Latin America, <https://www.fao.org/in-action/coastal-fisheries-initiative/activities/latin-america/en/>(검색일: 2025.1.14.)
- FAO, OVERVIEW OF INLAND FISHE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s://openknowledge.fao.org/server/api/core/bitstreams/c45f21e7-07f5-4447-8e06-24c7b2dc4a6a/content>(검색일: 2025.2.4.)
- FAO, FAO-IMO-ILO ad hoc Joint Working Group on IUU fishing and related matters, <https://www.fao.org/iuu-fishing/tools-and-initiatives/joint-working-group-on-iuu-fishing/en/>(검색일: 2025.2.7.)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https://www.fao.org/fishery/en>(검색일: 2025.2.6.)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Blue Transformation, <https://www.fao.org/fishery/en/bluetransformation>(검색일: 2025.2.5.)

FAO, Governing and Statutory Bodies Web site, https://www.fao.org/unfao/govbodies/gsb-subject-matter/statutory-bodies-details/en/c/176/?no_cache=1(검색일: 2025.3.7.)

GGGI, About GGGI, <https://gggi.org/about/>(검색일: 2025.2.8.)

Global Fishing Watch, <https://globalfishingwatch.org/transparency-program-pacific/>(검색일: 2025.1.8.)

ILO, Maritime-Fisheries, <https://www.ilo.org/industries-and-sectors/shipping-ports-fisheries-and-inland-waterways-sector/maritime-fisheries>(검색일: 2025.4.12.)

ILO, Maritime Labour Convention(MLC, 2006),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maritime-labour-convention/lang—en/index.htm>(검색일: 2025.2.7.)

IMO, IMO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SustainableDevelopmentGoals.aspx>(검색일: 2025.2.5.)

IMO, 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ITCP), <https://www.imo.org/en/OurWork/TechnicalCooperation/Pages/ITCP.aspx>(검색일: 2025.2.6.)

IUCN, Ocean and coasts, <https://iucn.org/our-work/oceans-and-coasts>(검색일: 2025.2.8.)

Kristen McGachey(2024.8.8.), UBS leapfrogs rivals as ESG funds jump on Credit Suisse deal. Financial News, https://www.fnlondon.com/articles/ubs-leapfrogs-rivals-as-esg-funds-jump-on-credit-suisse-deal-d54949f0?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1.1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Foreign Policy,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about/keitai/taisei.html>(검색일: 2025.3.21.)

MRAG Asia Pacific, About Us, <https://mragasiapacific.com.au/about-us/>(검색일: 2025.2.6.)

- MRAG Asia Pacific, The Quantification of IUU Fishing in the Pacific Islands Region – a 2020 Update, <https://mragasiapacific.com.au/projects/quantification-of-iuu-pacific-islands-region/>(검색일: 2025.1.16.)
- NASA, <https://www.nasa.gov/science-research/earth-science/nasa-analysis-shows-irreversible-sea-level-rise-for-pacific-islands/>(검색일: 2025.1.16.)
-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Republic of Kenya, <https://www.planning.go.ke/wp-content/uploads/2024/03/MTP-IV-2023-2027.pdf>(검색일: 2025.4.18.)
- NORAD, Ocean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SDGs, <https://www.norad.no/en/thematic-areas/thematic-areas-in-norwegian-aid/climate-food-environment-and-energy/oceans/>(검색일: 2025.4.3.)
-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Environment, <https://www.mfat.govt.nz/en/environment/climate-change/supporting-our-region/>(검색일: 2025.3.19.)
-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a), Ocean and Fisheries, <https://www.mfat.govt.nz/en/environment/oceans-and-fisheries/>(검색일: 2025.4.3.)
-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b), Our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https://www.mfat.govt.nz/en/aid-and-development/our-approach-to-aid/#bookmark0>(검색일: 2025.4.3.)
- OECD, OECD Legal Instrument,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mode=advanced&committeeIds=869&dateType=adoption>(검색일: 2025.2.13.)
- OECD(2022), Data Platform on Development Finance for the Sustainable Ocean Economy, <https://oecd-main.shinyapps.io/ocean/>(검색일: 2025.3.18.)
- OECD, DAC List of ODA Recipients, <https://www.oecd.org/en/topics/oda-eligibility-and-conditions/dac-list-of-oda-recipients.html>(검색일: 2025.1.18.)
-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https://www.oecd.org/en/about/committees/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html>(검색일: 2025.1.7.)
- OECD(2024.6.5.),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 sustainable ocean economy in 2022: A snapshot,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https://one.oecd.org/document/DCD\(2024\)21/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2024)21/en/pdf)(검색일: 2025.1.23.)

-
- OECD(2024.6.17.),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dcf1367-en>(검색일: 2025.3.18.)
- OECD(2024.8.22.), Joining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https://www.oecd.org/en/about/committees/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joining-the-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dac-en.html>(검색일: 2025.1.7.)
- OECD, DAC List of ODA Recipient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oda-eligibility-and-conditions/DAC-List-of-ODA-Recipients-for-reporting-2024-25-flows.pdf>(검색일: 2025.1.18.)
- OECD, Sustainable Ocean for Al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ustainable-ocean-for-all.html>(검색일: 2025.2.10.)
- OECD, Topics, Ocean, <https://www.oecd.org/en/topics/ocean.html>(검색일: 2025.2.6.)
- 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Management, <https://tunapacific.ffa.int/observers-and-compliance/#observersmanagement>(검색일: 2025.3.15.)
- PEMSEA(2025.1.30.), Marine Plastics ODA Project Advances with Key Milestones and 2025 Plans, <https://www.pemsea.org/resources/news/marine-plastic-s-oda-project-advances-key-milestones-and-2025-plans>(검색일: 2025.2.8.)
- PEMSEA, What We do, <https://www.pemsea.org/what-we-do>(검색일: 2025.2.8.)
- Plasticbank, Ocean Plastic Accountability: Which Country is the Most Accountable, <https://plasticbank.com/blog/which-country-is-the-most-accountable-for-ocean-plastic/>(검색일: 2025.1.7.)
- SARRC, Environment, Natural Disasters & Biotechnology, <https://www.saarc-sec.org/index.php/areas-of-cooperation/environment-natural-disasters-biotechnology>(검색일: 2025.2.3.)
- U.S. Foreign Assistance, Budget Dataset, <https://foreignassistance.gov/data#tab-data-download>(검색일: 2025.4.4.)
- UN, Status of Treaties,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I-10&chapter=21&clang=_en(검색일: 2025.1.10.)

- UN, Goals 14, <https://sdgs.un.org/goals/goal14#overview>(검색일: 2025.2.6.)
- UNDP, Ocean Promise.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2022-06/UNDP_Ocean_Promise_V2.pdf.(검색일: 2025.1.5.)
- UNEP, Marine Pollution Prevention, Reduction and Control, <https://www.unep.org/cobsea/what-we-do/marine-pollution-prevention-reduction-and-control>.(검색일: 2025.1.5.)
-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2013-07,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ON THE SPECIAL REQUIREMENT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ERRITORIES, <https://www.wcpfc.int/system/files/CMM%202013-07%20CMM%20on%20special%20requirements%20of%20SIDS%20and%20territories.pdf>(검색일: 2025.3.15.)
- WMU, World Maritime University Overview, <https://www.wmu.se>(검색일: 2025.2.7.)
- World Bank(2022.2.10.), The World Bank's Blue Economy Program and PROBLUE: Supporting integrated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a healthy ocean, <https://www.worldbank.org/en/topic/environment/brief/the-world-banks-blue-economy-program-and-problue-frequently-asked-questions>(검색일: 2025.2.10.)
- World Bank(2025.4.21.), Blue Economy, <https://www.worldbank.org/en/topic/oceans-fisheries-and-coastal-economies#1>(검색일: 2025.2.10.)
- World Bank Blogs, Four things you should know: Climate change &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 <https://blogs.worldbank.org/en/climatechange/four-things-you-should-know-climate-change-small-island-developing-state>(검색일: 2025.3.26.)
- World Bank Group, Campaigns, <https://www.worldbank.org/en/who-we-are/news/campaigns/2023/east-asia-pacific-marine-plastic-pollution>(검색일: 2025.2.3.)
- World Bank Group, Africa Program for Fisheries,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africa-program-for-fisheries>(검색일: 2025.1.15.)
- World Bank(2022.7.22.), <https://blogs.worldbank.org/en/eastasiapacific/turning-tide-plastic-pollution-through-regional-collaboration-southeast-asia>(검색일: 2025.1.5.)

WWF-Pacific (Fiji), Gender Mainstreaming in Fiji's Offshore Tuna Industry, 2021,
https://wwfasia.awsassets.panda.org/downloads/gender_mainstreaming_in_fiji_s_offshore_tuna_industry_report_1.pdf(검색일: 2025.1.16.)

日本国土交通省(일본국토교통성)(2023), 海洋基本法(해양기본법), <https://www.mlit.go.jp>(검색일: 2025.1.20.)

인터뷰 및 발표

국무조정실 ○○○ 사무관(2025.2.10., 4.14., 유선)

굿네이버스 ○○○ 팀장(2025.3.25., 화상 회의)

대외경제협력기금 ○○○ 부장(2022.6.26., 2022년 해양수산 ODA 역량강화 프로그램)

한국국제협력단 ○○○ 실장, ○○○과장, ○○○ 대리(2025.4.22., 대한민국 성남)

한국수산자원공단 ○○○ 대리, ○○○ 전문관(2025.3.24., 대한민국 부산)

한국원양산업협회 ○○○ 부장, ○○○ 과장(2025.3.21., 화상 회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주임연구조사원(2025.3.18., 대한민국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교수, ○○○ 교관(2025.3.18., 대한민국 부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2025.3.19., 화상 회의)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년

01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최일선
02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좌미라
03	시민친화적 바닷가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정지호
04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석문
05	특별관리해역 관리제도 재편 방안 연구	최수빈
06	해양관할구역 과세권한의 체계적 배분방안 연구	이혜영
07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서연
08	수산물 무역(수출입) 단기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기욱
09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10	어촌다움에 기반한 어촌공간관리 방안 연구	이승혜
11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	김한나
12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허성례
1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세원
14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전략 연구	김근섭
15	항만 하역능력의 서비스 수준 개선 연구	이화섭
16	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근섭
17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혜리
18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나영환
1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강무홍
20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이성우

2023년

01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해상교통관제 대응방안 연구	박상원
02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규범의 해양수산분야 영향 분석 연구	임병호
0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이나영
04	연안재해 정보 활용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5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석우
06	마을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마창모
07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사회·생태복원 중심으로 -	최석문
08	주민행태기반 해양정책 수용성 제고 설계 방안 연구	이슬기
09	항만연관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김세원
10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조아현
11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방안 연구 - 항만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	서정용
12	어업분야 종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연구	고동훈
13	수산물의 디지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건
14	항만개발사업의 정책영향평가 연구	이수영
15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 예측과 국내 대응 전략 연구	이호춘
16	어선현대화 추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17	연안도시의 쇠퇴와 대응방안 연구	강창우
18	해양범죄 실태 진단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민영훈
19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김지윤
20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연구	허수진
21	지방분권시대의 수산업·어촌분야 대응전략 연구	이호림
22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김한나
2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망 최적화 방안 연구 : 한국-북미 물류공급망 중심	이성우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년

0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03	해양안보 MDA 체계 협력적 운용 방안 연구	민영훈
0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한장협
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06	부산항 물동량 유치방안 연구	김은우
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채수란
08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아
09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순
10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심성현
11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황수진
12	연안 중소선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지원방안	류희영
13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김보경
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1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장원근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윤미경
17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신정훈
18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발전방안 연구	권보배
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Ⅰ 2023년

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이정필
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일선
03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안승현
04	블루푸드테크 전문기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동림
05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요인 연구	이혜영
06	양식장 내 어류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오서연
07	해양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공급사슬 기반 조성 연구	이윤정
08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ESG경영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이재호
09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보경
10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정아
11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박수진
12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지원
13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방안 연구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년

0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김엄지
02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박수진
03	해양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연구	최희정
04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 중심으로	조현주
05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 방안 연구(한·태 무역을 중심으로)	한기욱
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해진
07	탄소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철광석, 화학공업생산물, 기타광석, 잡화를 중심으로	이나영
11	접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Ⅰ 2023년

01	해양수산업 조기경보지수 개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을 중심으로	권장한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Ⅱ)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강무홍
0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기욱
04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Ⅱ) - 유류, 철재, 모래, 목재, 양곡을 중심으로	이화섭
05	대기행렬모형을 활용한 선박대기비용 절감 편익 산정 연구	조아현
06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세부항목별 효과산정 방법 연구	이종필
07	해양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최희정
08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방안 연구	황진희
09	해운 경기순환 분석 및 예측 연구	황수진
10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수입수산물 전략품목 관리 방안 연구	박해진
11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방안 연구	이지원
12	선사공동행위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류희영

수시연구 2024-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인쇄 2025년 6월 28일

발행 2025년 6월 30일

발행인 조정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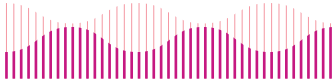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동아기획 (051-291-7605)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A Strategic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Sector
: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9 791168 662155

ISBN 979-11-6866-215-5



값 15,000원